

금년은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독 경제계획 위원회가 1989년 가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동독의 1인당 실질 GDP는 서독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71%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동서 지역간 취업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적지 않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독일연방정부의 노력을 점검 해보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가 금년 6월에 발간한 「독일 통일현황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2009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예전에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바 있는 '독일통일백서'와의 연관성 유지를 위하여 본 책자의 제목을 「2009 독일통일백서」로 하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1989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개괄적인 경제발전상과 구동독 지역 재건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투자, 고용, 교육, 환경, 교통, 도시개발, 농업지원, 가족, 노인, 문화, 체육 등)로 상세히 기술 하고 있습니다.

부록으로는 구동독 지역을 위한 독일연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구동독 지역의 경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정부 관련부처 및 통독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계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 11.
남북협력기획실장

목 차

제 1 부 구동독 지역 - 평화혁명후 20년	1
I. 용기있는 출발 : 평화혁명의 결과	
II. 1989년 이후의 경제적 평준화 과정	6
1. 구동독 지역의 경제발전상	6
2. 산업발전	10
3. 2008년말까지의 노동시장 발전 추이	14
4. 독일 동부지역에 대한 현 경제금융위기의 도전	15
III. 구동독 지역 재건지원 정책의 골자	18
1. 2차 연대협약과 유럽연합 구조정책	18
2. 기업투자 및 혁신강화	21
3. 사회적 통일 완수를 위한 책임감 인식	27
4.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대책	30
IV. 사회적 차원의 내적 통일 강화	35
1. 상호이해와 인정	36
2. 생동감있는 민주주의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36
3. 반 극우주의	37
4.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규명	37
제 2 부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 및 정책 분야	9 3
I. 경제지원 / 불황극복	41
1. 경기부양 패키지 I과 II의 개요 및 구동독 지역에 주는 의미	41
2. 투자 장려	45
3. 생계형 창업자 및 중소기업 정책	50

II. 산업입지 개발 및 투자자 홍보	55
1. 산업입지 개발과 미래산업시장	55
2. 해외투자자 홍보	57
III. 고용 정책	58
1.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혁	58
2. 2008년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59
IV. 교육 및 직업교육	64
1. 교육 이니셔티브 - 교육을 통한 성장	64
2. 직업교육시장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조약	65
3. 직업교육 활동	67
V. 혁신력 강화	69
1. 연방정부의 하이테크전략	70
2.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71
3.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73
4. 기업과 학계의 역량 강화	73
5. 지역 혁신역량 강화 - 기업 지역(Unternehmen Region)	76
VI. 구동독 지역의 대학 및 연구 입지	79
1. 대학협약 및 우수연구 지원	80
2. 외부 연구기관과 대학의 협력	83
3. 구동독 지역의 미래기술 사례	85
VII.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87
1. 재생에너지	87
2.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기술	88
VIII.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및 자연보호	90
1.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90
2. 자연보호	95

IX. 교통 인프라	97
1.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	97
2.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	98
3. 유럽연합 동부확대 프로젝트	100
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BBI)	101
X. 도시개발	102
1. 도시건설 장려	102
2. 구동독 지역 도시정비 프로그램	103
3. 도시건축학적 문화재 보호	104
4. 사회복지도시	105
5. 구(舊)채무 청산규정	106
6.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협약 및 미래투자	106
7. '대규모 주택단지 에너지 효율화 보수공사' 대회	107
8. 주거보조비	108
XI. 농촌지역의 비전 제시	109
1. 농업발전	110
2. 농업과 농촌지역 지원대책	112
3. 관광산업	115
4. '인구통계학적 변화' 시범계획	116
5. 재생원료 - 농업발전을 위한 잠재력	117
6. 농촌기업 구(舊)채무규정	118
7. 토지매입	119
XII. 가족 · 평등 · 청소년 정책	120
1. 지속적이고 일관된 가족정책	120
2. 남녀평등 지원	127
3. 청소년정책	128
XIII. 건강보험, 연금, 노인정책	131
1. 건강보험	131

2. 연금	137
3. 노년층을 위한 정책	139
XIV. 구동독 지역의 예술과 문화	142
1. 최신 프로그램	142
2. 연방문화재단	145
3.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과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146
4. 독일국립도서관	148
5. 소르비아 소수민족 지원사업	148
6. 문화산업	148
XV. 스포츠	151
XVI. 독일사회의 내적통일 강화	153
1. 사회적 참여	153
2. 반극우주의 프로그램	154
3. 자유통일 기념비	158
4.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 및 배상	158
5. 귀향자 재단 폐지법의 신규정	159
6. 물질적 자산손해에 대한 변상	159
7.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규명연방재단	160
8. 구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BStU)	160
9. 연방정치교육센터	161

부 록

제 3 부. 구동독 지역을 위한 연방정부 대책들	31
----------------------------------	-----------

제 4 부. 구동독 지역 경제 데이터	3
----------------------------	----------

그림 차례

그림 1: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	7
그림 2: 각 연방주의 주민 1인당 GDP 및 근로자 1인당 임금	9
그림 3: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구동독 지역, 1991~2008년)	11
그림 4: '구동독지역의 첨단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시범 프로젝트	84
그림 5: 구동독지역 선별 지원분야들의 역동적인 발전상	86
그림 6: 1990~2009년 도시건설 장려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투자패키지제외)	102
그림 7: 농촌기업 수입 변화 - 수입/연간이윤+인건비	112
그림 8: 구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분야별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GAK) 사업예산 분배	114
그림 9: 가족 안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121
그림 10: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편모·편부를 위한 실업수당Ⅱ	123
그림 11: 2007/2008년 연방주별 3세 이하 전일제 탁아소 이용률	124
그림 12: 1990년 이후의 평균수명 변화	131

표 차례

표 1: 구조적 평준화	8
표 2: 역동적인 산업 성장	10
표 3: 구동독 지역 및 베를린에 적용되는 GRW의 최대지원율	21
표 4: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로 시행된 2008년도 구동독 지역 및 베를린에 대한 지원 승인	46
표 5: 구동독 지역의 주요 노동시장 정책도구(2008년도 평균 수치)*	60
표 6: 2007/2008년도 직업교육 상황 결산 수치*	67
표 7: 구동독 지역의 농업구조 변화 주요 수치	111
표 8: 토지 민영화(재민영화 및 재공영화 제외)	120

제 1 부

구동독 지역－평화혁명후 20년

제 1부. 구동독 지역 - 평화혁명후 20년

I. 용기있는 출발 : 평화혁명의 결과

2009년은 1989년 가을 구동독에서 벌어진 평화혁명과 용감했던 시위(‘월요시위’)를 기리는 데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이 혁명과 시위를 통해 20년전 구동독에서 민주주의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베를린장벽 붕괴와 함께 독일 분단의 극복이 이루어졌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통치종료와 월요시위로 얻은 자유를 당연히 여기며, 독재체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도 있었음을 상상하지 못한다. 실제로 1989년의 예상은 지금과는 반대였다. 1989년 10월까지만 해도 시민들은 권력자들이 몰락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었다.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감행하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논쟁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고,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0월 9일 구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와 다른 도시들에서 거리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은 모두들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로 얼마전에 드레스덴(Dresden)과 베를린에서 시위대들에 대한 국가안보기관의 대규모 무력진압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시위대들에겐 성공가능성이 낮아보였으며, 개인적인 위험부담 또한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또다시 시위를 감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위에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이로써 독재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었다.

월요시위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일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가장 행복한 순간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구동독 안보기관들은 중무장한 상태로 그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당시 구동독 공권력은 시위자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었다. 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대규모 무력 진압의 구실이 마련되는 것이었으나, 시위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구동독지역의 월요시위는 동구권 전체에서 진행된 체제전환 과정의 일부였다. 몇년전에 이뤄진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의와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시민

운동이 없었더라면, 무엇보다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없었더라면, 평화혁명이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지배를 뒷받침해주던 외적인 여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으며, 동구권은 확연하게 변화의 물살 속으로 빠져들었다. 구동독의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많은 희망을 걸었다. 바로 이것이 평화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가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전진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평화혁명을 떠올릴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힘에 의해 가능했다. 이로써 1989년 11월 9일은 독일 역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목표도 점점 구동독의 민주화에서, 더욱 실현가능해 보이는 목표인 구동독의 종말과 독일통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우리는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고 부르짖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 “독일은 하나의 조국이다(Deutschland einig Vaterland)”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동독에서 서독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써 독일통일의 길이 준비되었다. 여기서 생취한 자유권은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었으며 동독에서 자유가 물결침으로써, 마침내 1990년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

새로운 정치단체들은 베를린 ‘중앙원탁회의(Der Zentrale Runde Tisch)’와 각 지방의 ‘원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월요시위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자유선거로 선출된 의회가 구성되기까지, 이 원탁회의로 인해 처음으로 동독에서 정부의 권력행사에 대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1989년의 대변혁은 기존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 유지되어온 중앙경제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바로, 생산과 판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진로까지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데 있으며, 이로 인한 자발성과 자기책임에 대한 억압이 체제붕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제계획위원회 위원장 쉬러(Schürer)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Politbüro)의 지시로 작성한 1989년 가을 경제상황 분석자료는 당시 구동독의 비참한 상황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 및 사회체제는 국제경쟁력이 거의

없었고, 시민들의 의식주도 보장되지 않았다. 구동독의 1인당 실질GDP는 1989년 기준으로 구서독의 1/3 수준에 그쳤으며, 생산성은 1988년 현재 구서독 지역의 20~25% 수준에 불과했다.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막대한 노동비용은 오랜 노동시간으로도 상쇄되지 못했다. 1989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익은 서유럽지역으로부터의 수입대금과 이자, 부채 등을 불과 35%만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과도하게 누적된 부채는 구동독을 점점 지불불능의 위기로 몰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투자중단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파쇄, 그리고 무차별적인 생산방식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를 동반하였다. 도로망이 막혔고, 많은 주택들은 거주불능 상태가 되었다. 심각한 하천오염과 폐수처리시설 부족으로 더 이상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없었으며, 유럽 전역에 걸쳐 이산화황과 먼지 오염이 심해지면서 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했다.

1989년 가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한층 거세진 대규모 시위와 집단탈출로 나타났다. 단순히 당과 정부의 수뇌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지배체제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과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원했다. 여기에다 다양한 생각과 견해, 바람, 희망까지 표출되면서, 여러가지 목적들을 대변하는 이해집단과 당파, 연맹이 생겨났다. 과거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에 의한 ‘획일성’에서 이제는 점차 ‘새로운 다양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성취하고, 의회와 새 정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이로써 구동독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 바뀌었다.

통일 20년이 지난 현재, 구동서독 주민들은 평화혁명과 통일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도시들의 몰락을 막았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중단시켰으며, 많은 구 잔재들을 제거하고, 지속적이고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한 물꼬를 텄다. 대규모 교통망의 보수도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 소질을 지향한 교육기회도 마련되었다.

반면에 적지않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립적 입장에 서있고,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공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혁명과 1990년 이후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상기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힘과 확신을 줄 것이다.

II. 1989년 이후의 경제적 평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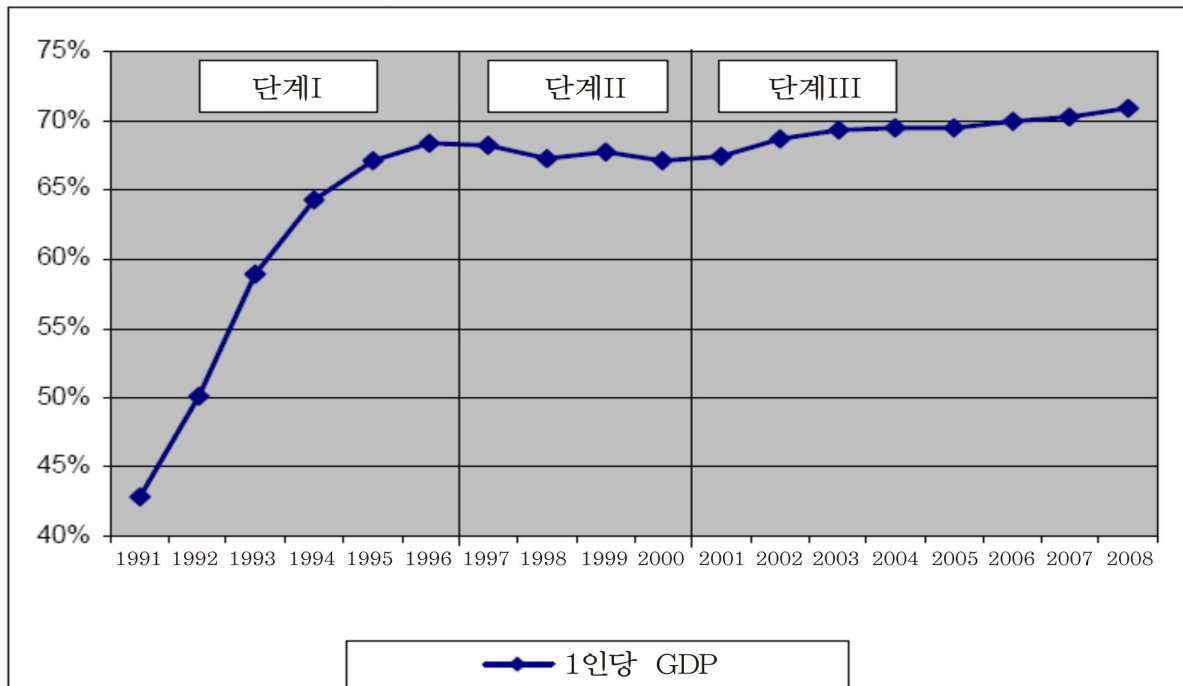
1. 구동독 지역의 경제발전상

평화혁명 이후 구동독 지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오늘날까지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구동독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계속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작업은 매우 훌륭하게 진척되었다. 그 결과 1인당 GDP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발전 추이는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¹⁾

통일 후 처음 몇 년간은 구서독 지역 경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기 위한 구동독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1991년 구서독 지역의 42.8% 수준에 그쳤지만(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 33.5%), 1996년에는 68.3%까지 성장했다. 막대한 자금지원에 힘입어 피폐한 인프라를 정비, 확충하고, 보수가 시급한 건물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구동독 지역에서는 건축업과 건축 관련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 해당되는 제 2단계는 건설 붐이 수그러든 잠정적인 조정기간으로,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구서독 지역과 비교해 다시 소폭 감소함으로써, 2000년에는 구서독 지역의 67.2% 수준으로 하락했다.

1) 본 항목에 나오는 독일 동부 수치들은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문에 별도로 명기하였다.

그림 1: 구동독지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 (구서독 지역 = 100)



가. 2000년 이후 경제적 평준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해당되는 제 3단계는, 지난 1990년대초보다는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되긴 했어도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추격활동이 다시 본격화된 시기였다. 이 기간에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독일 전체 평균의 67% 수준에서 71% 수준으로 높아졌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1인당 GDP는 구동독 지역이 14.1%(베를린을 제외하면 무려 19.1%) 증가한 반면, 구서독 지역은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경제적 평준화 과정은 다른 지표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생산성 증가와 총 부가가치생산액(BWS)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중 구동독 지역 주민 1,000명당 창업건수는 구서독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표 1: 구조적 평준화

구조적으로 독일 동부와 서부는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주요 수치들은 독일 서부의 기준수치(=100%)에 크게 근접했다.		
	2000년	2008년
1인당 GDP	67%	71%
생산성	75%	79%
수출비율*	56%	72%
자영업자 비율*	84%	100%
근로자 1인당 자본량**	78%	84%

*2007년도 수치 **2006년도 수치

2000년 이후에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업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고, 이로써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 특히 건설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 와서야 비로소 바뀌었다. 또 세입에 비해 세출이 더 많아짐으로써, 주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예산도 점차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조정 과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경제전반의 양상을 살펴보면, 동서부간 경제력은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구조적인 약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구동독 지역은 특히 자금력이 큰 대기업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 대표적인 약점이다. 동부지역 경제는 거의 중소기업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산업연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구동독 지역에서 산업용 R&D에 투자되는 비용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급속한 기술변혁의 세계에서 이는 결국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낙후지역의 평준화

독일 동부의 경제 발전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 서부의 평균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교척도는 다른 모든 비교척도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다. 가령 독일 서부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경제능력에 큰 편차를 보인다.²⁾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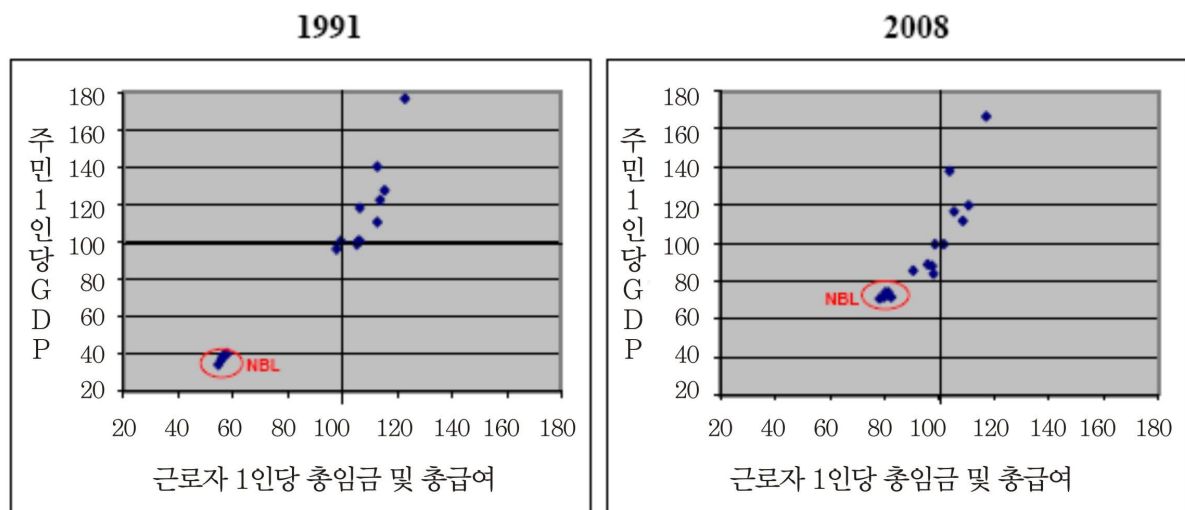
2) 2008년도 구서독 지역의 주민 1인당 GDP의 경우, 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전국 평균의 85.5% 수준, 바

러한 편차는 독일 동서부간 차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일자리 분포, 경제구조, 기타 요인들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모두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것들이다.

<그림 2>는 1991년과 2008년 각 연도의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주민 1인당 GDP와 근로자 1인당 총임금 및 총급여를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경제능력을 보여주는 두 지수에 연방주별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며, 일부 연방주들만 독일 전체 평균수준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1991년에서 2008년 사이에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 사이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2008년에도 구동독 지역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서독 지역의 경제능력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평준화 속의 격차'는 독일 전체 평균수준과의 격차보다는 훨씬 더 적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이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200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연방주별 1인당 GDP 증가속도의 차이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나후지역 사이의 경제적 평준화는 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 구동독 지역 재정지원 협약)이 끝나는 2019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2: 각 연방주의 주민 1인당 GDP 및 근로자 1인당 임금 (독일 전체 = 100)



* NBL : 구동독

이에른주는 117.1% 수준까지 이르렀다.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은 2008년 전국 평균에 상당히 근접한 72.9% 수준을 보였다. 같은 해 근로자 1인당 총임금과 급여는 구서독 지역의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전국 평균의 90.3%, 헤센주는 110.8% 수준을 기록했으며,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은 80.6%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까지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낙후지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기만 해도 이미 커다란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동서독 주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2. 산업발전

지난 3년간 구동독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며 역동적으로 성장했다(구서독 지역: 4.3%). 반대로 건설업(-0.2%)과 대부분의 서비스업(1.6%)은 계속해서 후퇴했다.

표 2: 역동적인 산업 성장

구동독 지역은 2006년 이후 역동적인 산업성장을 기록했다.		
	GDP 성장률 (단위 %)	총부가가치생산액 증가율 (단위 %)
2006년	3.1	9.9
2007년	2.4	9.3
2008년	1.2	3.4

물론 2008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수주량과 생산, 수출 규모의 심각한 감소현상은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산업 전체성장률은 여전히 3.4%에 이르렀다(베를린을 제외한 구서독 지역 0.7%). 2000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총부가가치생산액은 모두 54.8% 증가하였고, 베를린을 제외하면 무려 64.1%나 증가하였다.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5.3%에서 2008년에는 19.6%로 증가함으로써(여기에서 구동독 지역은 베를린 제외), 대다수 선진국들의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영국 12.6%, 이탈리아 19.2%, 프랑스 10.4%, 미국 13.3%, 2007년도 OECD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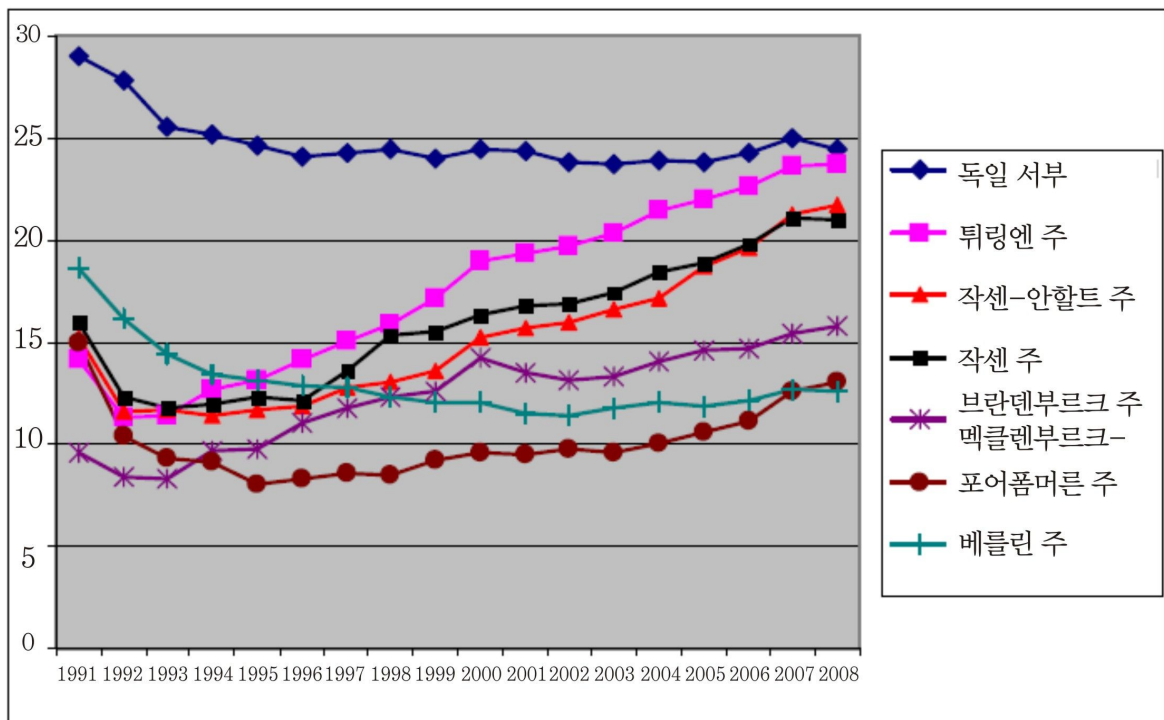
여기에서,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구서독 지역에서도 이미 24.5%로 증가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이면 구서독 지역과 비슷한 산업비율 양상을 보일 것이다.³⁾

3) 「구동독 지역의 구조적 평준화 및 지역 발전」, 독일경제연구소 2009.

이렇게 과거 수년간 제조업 분야는 역동적으로 발전해왔고, 또 독일동부 지역의 제조업은 총부가가치생산액에 있어서 서부지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80%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써 오늘날 독일 동부지역은 특히 가격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매력적인 산업입지로 자리 잡았다. 동부지역 제조업 분야의 단위노동비용은 2008년 기준으로 구서독 지역의 8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각 연방주의 산업화 정도에서는 부분적으로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 2008년도 튀링엔주의 경우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서 독일 서부 평균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작센-안할트주와 작센주도 각각 21.7%와 21.0%로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그림 3: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구동독지역, 1991~2008년)



가. 서비스업의 발전가능성

한편, 대기업의 부족은 기업컨설팅이나 법률상담, 신용업, 금융업 또는 소프트웨어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사무소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아직 구동독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했지만, 지난 20년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금융업과 임대업, 서비스업 분야의 총부가가치생산액은 1991년 대략 269억 유로 규모에서 2008년에는 927억 유로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 구동독 지역 전체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서 27.4%로 높아졌다. 이로써 구서독 지역과의 격차도 2.2%포인트로 좁혀졌다. 상기에 언급된 분야의 취업자수는 1991년에서 2008년 사이에 모두 약 60만명이 늘어났고, 지난 2년 동안에만 무려 8만명이나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다른 한 특수 분야인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직·간접 고용잠재력이 약 45만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는 구동독 지역 전체 취업자수의 8%에 이르는 수치이다.

나.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의 등장

독일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순위에 관한 2008년 발표 자료⁴⁾에는 상당수의 독일 동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1, 2위를 독일 동부 기업이 차지했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모두 2005년도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하로서 전세계 또는 유럽에서 해당분야의 Top 3로 꼽히고, 지난 3년간 적어도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높은 성장력을 보인 대다수 기업들은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성장력이 큰 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드레스덴의 생명공학 업체 노발레드(Novaled)였는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로 꼽히는 기업이다. 극도로 얇은 광원을 이용한 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은 조명과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2001년도 드레스덴 공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물리학자 4명으로 시작한 이곳은 오늘날 종업원 약 100명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고, 바로 이곳에서 보다 밝고, 보다 효율적인 OLED 기술이 개발되었다.

다.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 미래기술 분야

미래기술 분야는 경제전반에서 볼 때에는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4) 독일의 미래 세계챔피언,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선정 순위, 2008년 10월 24일.

고 있다. 이러한 분야로는 특히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및 신소재, 생명공학, 건강연구, 의료기술, 광학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및 환경 기술은 지난 몇년간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 기술은 독일 동부에서 확실한 산업 원동력('Job motor')로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동부의 태양에너지 산업의 경우, 유리한 입지조건과 지원조건을 바탕으로 불과 몇 년만에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몰려들었고, 현재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태양전지의 1/6이 바로 이곳 구동독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써 구동독 지역은 태양에너지 기술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화학산업도 마찬가지로 독일 동부의 성장산업으로 꼽힌다. 지난 2000년 이래 화학산업분야의 성장률은 48.4%로 매우 두드러졌다. 광학과 우주항공산업, 의료 및 생명공학, 조선업 등과 같은 다른 첨단분야들도 지역별로 주요입지로서 그 자리를 굳히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집약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립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지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의 발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라. 지역별 산업육성

구동독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산업별 연계가 지역별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예나(Jena)에서는 광학과 전기전자 산업이, 에어푸르트(Erfurt)와 그 주변지역, 비터펠트-볼펜(Bitterfeld-Wolfen)과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Oder)에서는 태양광산업, 드레스덴에서는 마이크로전자산업, 작센-안할트주 남부에서는 화학산업, 막테부르크(Magdeburg)와 로스톡(Rostock)에서는 풍력에너지기술 산업, 베를린에서는 의료산업이 특화되었다. 자동차 산업도 좋은 예로서, 현재 독일 전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약 12%가 바로 이 구동독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요지들도 이제 지역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3. 2008년말까지의 노동시장 발전 추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 구동독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크게 발전해, 이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2%에 달했다(실질GDP 기준).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발전 추이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다. 2005년말 이후 구동독 지역의 실업자수는 약 50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실업자수 100만 3,000명, 실업률 11.8%로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부지역 실업률(6%)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편, 2005. 12월~2008. 1월의 기간중 구동독 지역의 사회보험가입 정규 노동자 수는 25만 6,000명(5.2%)이 늘어나, 모두 522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 및 직업훈련원 지원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호전되었으며, 무엇보다 자격증이 있는 양질의 전문인력이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아졌다.

청년 실업률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2008년 말 구동독 지역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자 수는 약 10만 8,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5년 12월보다 36.6%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8년 11월의 10만 6,000명이라는 청년 실업자 수는 통일 이후 최저 수치였다.

직업훈련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2008년 9월 구동독 지역에 신고된 직업훈련 지원자 수는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화 선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약 26%가 감소해 138,000명을 조금 밑돌았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같은 지원자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독일상공회의소는 구서독 지역 출신 청년들의 직업훈련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현 노동시장 추이

2008년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경제부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발전했다.

- 2008년 평균 실업자수: 1,123,000명(전년 대비 13.0% 감소)
- 2008년 실업률: 13.1%(2007년 15.1%)
- 2008년 6월 현재 사회보험가입 정규 노동자 수: 5,219,000명(전년 대비 2% 증가)
- 2008년 현재 55세 이상 취업자 수: 738,000명(전년 대비 9.6% 증가)
- 2007년 취업률: 66.4%(구서독 지역: 70.1%)

2008년도 평균 장기실업자는 전년 대비 9만 5,000명이 감소한 19.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2008년도 구동독 지역에서는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이 39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연방노동청의 구동독 지역 정보수집 자료에 파악된 전체 실업자의 38.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독일 동부 노동시장의 경제위기 여파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금융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올해 실업자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아직은 조업단축수당(Kurzarbeitergeld)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09년 4월 실업률은 13.9%에 이르렀다. 계절적 영향을 배제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009년 2월 9,000명 3월 12,000명에 이어 4월에는 6,000명이 증가하였다. 2008년 10월에서 2009년 4월 기간에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실업자수는 약 45,000명 증가하였다.

SGB(사회법) III §170에 의거, 경기침체로 인한 조업단축수당 신청건수는 구동독 지역에서 2009년 4월 모두 3,9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조업단축수당을 신청한 근로자는 약 65,500명에 달했다(잠정 집계). 실직이 아닌 상태의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인 수요는 줄어드는 것도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준다.

4. 독일 동부지역에 대한 경제금융위기의 도전

2008년 가을부터 독일경제는 통일 이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900년대 상반기의 경제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매우 악화되었다. 연방정부는 독일 전체 GDP가 올해 6%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훌륭한 경제 성장 추세를 보여왔던 구동독 지역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의 여파가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다. 관계기관들의 연초 전망을 살펴보면, 독일 동부는 성장률 감소폭 5%라는, 그나마 미약한 경기후퇴가 예상된다. 서부지역보다는 위기로 인한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위기에 대한 동부지역의 강력한 저항력은 경제단체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연방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구동독 지역 제조업은 구서독 지역보다 매출 감소폭이 훨씬 적은 것으로 기록됐다(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 16.6%; 구서독 지역은 21.1% 감소).

구동독 지역은 원래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위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구동독 지역은 구서독 지역보다 중소기업들의 비율이 더 높고 대기업의 비율은 더 낮는데, 바로 이 대기업들이 최근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수출 비중이 낮은 것도 현 상황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차 연대협약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과, 동부 전체 수요 가운데 높은 이전지출(Transferleistung) 비율이 경기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는 구동독 지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상의 근본 구조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의 현대화 지속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8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그램 2개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구동독 지역의 경제이다(이 두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항목 참조). 또한 8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근거리통근자 세금공제 제도(Pendlerpauschale)를 재도입한 것도 경기부양에 일조하고 있다.

경기부양 대책에는 170억 유로 이상 규모의 공공투자 확대, 기업들을 위한 4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보증프로그램(중소기업 150억 유로, 대기업 250억 유로), 그리고 750억 유로 규모의 신용보증프로그램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대책과, 가게 및 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독일 서부는 물론 동부의 경제발전을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부양 패키지(Konjunkturpaket)의 일환으로 시행된 연방정부 대책들 가운데,

특히 아래의 정책들은 독일동부 재건을 위한 일부 지원책들을 더욱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 **주정부 및 지자체의 미래 투자.** ‘주정부 및 지자체의 미래 투자 시행을 위한 법률(미래투자법)’을 통해 교육과 인프라 현대화라는 두 핵심 투자분야에 대해 주정부와 지자체의 추가투자 장려를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 정부조달규정(Vergaberecht)도 가속화된다. 이로써 구동독 지역들은 연방정부 전체 자금지원 예산 100억 유로 가운데 약 23억 유로를 이 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 특별 프로그램.** 2009년도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를 위한 예산이 약 2억 유로로 책정되었다. 이 가운데 1억 유로는 2009년에 현금으로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억 유로는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국채 조달로 배정되었다. 예산은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지원 분야에 절반씩 배정된다.

-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IM)’의 예산 증액.**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의 이 투자 프로그램은 2009년도와 2010년에 각각 4억 5,000만 유로씩 증액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종업원수 250명~1,000명의 기업에 대해 2억 유로가 책정되었으며, 구동독 지역 기업에는 보다 높은 비중의 자금지원이 보장된다.

실직기간이 6년에서 13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실업수당 II’ 지급율의 인상 및 소득세 인하 또는 ‘자녀 보조금’과 같은 두 경기부양 패키지의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정책들도 구동독 지역에서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08년 가을에는 당초 200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투자보조금을 2013년 말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투자보조금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강화시킴으로써 경기부양효과를 파생시킨다.

III. 구동독 지역 재건지원 정책의 골자

구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적은 향후 10년 이내에, 즉 2차 연대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가능한 한 많은 경제지역이 구서독 지역의 경제구조 취약지 수준에 도달하도록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동서부간 생활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은 여전히 연방정부의 핵심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2020년까지의 지원정책이란 무엇보다 성장지향적 투자장려, 그리고 특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시장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R&D 강화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구동독 지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5년 말부터 구동독 지역들을 위한 주요한 정책 결정이 내려져 이미 실행되고 있다. 투자 활성화 및 혁신활동 지원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투자자 홍보가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지원과 지역별 지원등급(Fördergebietskarte)의 확정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반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었다.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의 제2축 프로그램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 실직자들의 취업 기회도 지난 몇 년 간 크게 향상되었으며, 연방정부는 무엇보다 '공공인력조달지침(Kommunal-Kombi)'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1. 2차 연대협약과 유럽연합 구조정책

구동독 지역을 위한 지원의 토대는 2차 연대협약이다. 2차 연대협약은 2005년부터 2019년 기간에 모두 1,560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1차 연대협약의 Korb I은 구동독 지역에 지급되는 특별 연방할당금(1,050억 유로) 형식으로 배정되어 있는 반면, Korb II는 연방예산에서 비율별로 구동독 지역(베를린 포함)에 모두 510억 유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구동독 지역은 경제적으로 한층 자립할 수 있게 되며, 2020년부터는 과거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인프라 격차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가. 주요 지원계획에 대한 장기적 합의 - 연대협약의 **Korb II**

2차 연대협약에 대한 합의 당시, Korb II에 속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2006년 11월부터 연방정부의 구동독 지역 특임관과 연방재무부는 구동독 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Korb II의 범위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주요 지원계획에 대한 각 주정부들의 합의안을 확정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각 주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장기적인 계획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다.

Korb II 합의는 2005년~2019년 기간 동안 다음 정책 분야에 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 경제(특히 투자보조금,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 투자자 홍보 포함)
- 혁신, R&D, 교육(특히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대학 및 네트워크 지원)
- 교통(특히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
- 주택 및 도시 건설(특히 도시건설 지원, 장기부채보조법, 사회주거지원)
-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입지 정비
- 스포츠(예: '황금빛 동부 계획(Goldener Plan Ost)')
- 유럽연합 구조기금(예: 유럽지역개발기금 주정부 프로그램, 유럽지역개발기금 연방정부 프로그램)

나. 구동독 지역, 유럽연합 구조기금과 공동농업정책(CAP) 제2축으로 부터 각각 180억 유로와 50억 유로 지원 수혜

2005년 12월에는 2007년~2013년에 이르는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기간에 대한 협상에서 구동독 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마련됐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구동독 지역이 유럽연합 구조기금⁵⁾으로부터 약 151억 유로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해 15억 유로, 주요 노동시장정책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자금으로 약 13억 유로를 지원받는다. 이렇듯 독일에 대한 유럽연합의 주요 지원대상은 바로 구동독 지역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큰 성장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구동독 지역이기 때문이다.

5) 유럽연합 구조기금 예산 일부는 연대협약 II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 제2축의 일환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47억 유로라는 거액의 예산이 구동독 지역에 편성되었다. 이는 유럽연합 구조기금 기간(2007년~2013년)에 독일에 배정된 유럽연합 예산평균을 상회하는 54%에 이르는 것이다(XI.2.가항목 참조). 이로써,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을 따라잡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 2013년까지 높은 장기지원금 책정 - 유럽연합 지원법

유럽연합지원법에서도 구동독 지역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 제87조 제3항의 a(87.3a조)에 의거, 5개 구동독 지역 모두 유럽연합의 최우선 지원등급에 속한다. 이는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의 지원등급 A에 상응하는 것이다. 베를린은 경제수치에 따라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 지원 지역에 합당하며, 상당 부분은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 제87.3c조에 따른 지원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GRW 사업의 C등급에 해당), 일부 지역만 이보다 낮은 D등급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2013년 말까지 높은 지원율의 지원정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이후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1월 1일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역별 지원등급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가령 앞으로도 몇 년간 중소기업의 투자금은 50%까지, 중기업의 경우에는 40%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브란덴부르크주 남서부 지역과 라이프치히, 할레(Halle) 지역은 졸업예정지역('phasing out')으로서 2010년부터 다시 재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지원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표 3: 구동독 지역 및 베를린에 적용되는 GRW의 최대지원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지원지역 등급
최대지원지역				
‘일반’ 87.3a 지역	30%	40%	50%	A
이른바 ‘통계 효과’ 지역				
할레, 라이프치히, 브란덴부르크주 남서부	30%	40%	50%	A ¹⁾
베를린				
87.3c 지역	15%	25%	35%	C
D 지역	7.5% ²⁾	7.5% ³⁾	15% ³⁾	D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통계 효과’ 지역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2011년부터 20%(중소기업은 각각 30%와 40%)로 낮아질 가능성 있음

2) 최소마진율(de minimis)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 유로까지만 지원

3) 중소기업 면제규정(FVO)에 준거

2. 기업투자 및 혁신강화

연방정부는 차별화된 지원수단을 통해 현재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수단은 제조업의 투자 및 혁신 분야와 인프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가. 기업의 투자

기업의 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2개의 지원수단을 통해 장려된다.

- 제조업,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및 요식·숙박업 분야를 위주로 한 투자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이 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제2부 1.2항목 투자장려와도 비교).

세제상의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2009년말까지 먼저 한 번 연장된 데 이어, 2013년 말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이 이뤄졌다. 투자보조금법에 따른 지원율 12.5%(중소기업의 경우 25%)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매년 낮아진다(2009년도 기본지원율 12.5%에서 연간 2.5%포인트씩 하락, 중소기업 지원율은 25%에서 연간 5%포인트씩 하락).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2011년까지 지원

하는 연간 약 10억 유로의 지원자금은 구동독 지역 개발에 사용된다. 이러한 지원을 축소를 통해, 2013년이 되면 지원금은 약 5억 6,000만 유로로 떨어질 전망이다.

- 두 번째 지원수단은 바로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이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주안점을 둔 투자 지원책이다(제2부 1.2항목과도 비교).

이 지원금은 지난 3년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배분되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 지원수단으로만 기업투자 강화를 위해 40억 유로를, 경제 인프라 장려를 위해 다시 약 12억 유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투자규모는 250억 유로를 넘어섰으며, 9만 개 가까운 추가적인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재건신용은행(KfW)의 제도 및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이 있다. 여기에는 생계형 창업자 지원, 기업대출, 메자닌 자본(mezzanine capital; 후순위채권 등 자기자본과 외부자금의 중간형태인 혼합성 자본) 및 출자자본 등이 있다.

나. 네트워크 지원

지난 몇 년간 많은 새로운 분야와 혁신적인 역량분야가 시장에서 양성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초부터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관리계획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여러 지원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지역별 및 분야별 잠재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과 경제 파트너 및 기관과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다. 다양한 정책들(경제 활성화, 교육 및 연구, 노동 정책 등)의 통합 적용을 위한 여건들이 개선됨으로써, 성장 및 고용을 위한 지원제도의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구동독 지역 투자입지 홍보

기존의 주요 업종들도 외적 투자자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태양에너지나 화학, 또는 마이크로전자공학 등과 같은 분야는 단연 돋보이는 구동독 지역의 기존 클러스터들로서, 연방정부 산하의 독일무역투자진흥청(Germany Trade & Invest)을 통한 투자자 홍보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독일동부가 가진 투자입지로서의 커다란 매력이 이미 입증되었다. 양질의 전문인력과 높은 수출 지향성, 유리한 비용구조 및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구동독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자 홍보활동은 2007년초에 정비, 확대되었다. 먼저 산업투자위원회(IIC)와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이 연방정부 산하의 투자자홍보·산업입지마케팅협회로 통합되었으며, 연간 500만 유로에 이르는 추가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2009년 초 다시 이 협회와 연방대외경제청(Bundesagentur für Außenwirtschaft)이 독일무역투자진흥청(GTaI; Germany Trade & Invest)로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자 확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가 추가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특히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홍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었다.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건수는 2008년 모두 3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2008년 한 해 25억 유로에 이르렀으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3,500개가 직접적으로 창출되었다.

라. 기업의 혁신역량 증대

전세계적으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은 성장과 번영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도전은 구동독 지역의 경우 특히 기업의 연구 및 혁신능력 강화와 지역별 혁신 잠재력의 육성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낙후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INNO-WATT)'과 '구동독 지역 네트워크경영(NEMO)', 'ProInno'와 같은 기존의 성공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ZIM)'과 '기업 지역(Unternehmen Regionen)' 프로그램도 지역 혁신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정책이다. 보다 훌륭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업과 과학의 만남(Wirtschaft trifft Wissenschaft)'이라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지난 2007년 초부터 운용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장점은 바로 산업과 가까운 곳에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 공익연구기관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기존의 프로젝트 지원금 이외에 자체 프로그램인 '동부 혁신역량(INNO-KOM-Ost)'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추가로 1,000만 유로에 이르는 투자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마. 우수대학 육성

지역 혁신잠재력의 개발 및 미래 주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학제도가 필수적이다. 구동독 지역은 ‘대학협약(Hochschulpakt)’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로 인한 입학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동시에 구동독 지역 대학 입학의 가능성 및 장점에 대한 이미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신입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Exzellenzinitiative)’에서 구동독 지역은 아직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고의 연구와 그 결과물을 새로운 제품과 공정으로 신속하게 실현하는 일은 미래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점에서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일련의 대책들을 통해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연구 강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구동독 지역의 최고 연구 및 혁신’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과학부는 구동독 지역과 공동으로 보다 넓고, 주제 지향적이며 조직을 포괄하도록 역량을 한 데 결집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혁신 능력 및 그에 따른 경제력을 함께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 ‘혁신역량센터; 엘리트 육성과 인재 확보’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구동독 지역 대학·연구기관 최고연구센터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계의 뛰어난 후진들이 구동독 지역의 연구 입지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 대학 외 연구기관들(막스플랑크 협회(Max-Planck-Gesellschaft), 프라운호퍼 협회(Fraunhofer-Gesellschaft), 헬름홀츠 협회(Helmholtz-Gemeinschaft), 라이프니츠 협회(Leibniz-Gemeinschaft)) 및 독일연구협회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감으로써, 구동독 지역은 국제적으로 보다 강력한 최고의 연구시스템을 갖춘 곳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원분야 연구에 있어서도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가 라이프니츠에 설립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원료로 한 에너지 이용의 연구 및 개발에 있어 구동독 지역이 또 다른 중요한 ‘학문적 등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미래의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계의 기초재료로서 기존의 화석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것이다. '중부독일 바이오정유 클러스터'는 바로 여기에서 착안된 것이다. 그에 대한 첫걸음이자 중요한 핵심으로서, 2009년 4월 로이나(Leuna)에 화학·바이오기술과정센터(CBP)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연방부처 이외에 작센-안할트 주 정부와 프라운호퍼 협회가 기술적·금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화학·바이오기술과정센터(CBP)의 목적은 화학업계가 재생원료로부터 기초물질을 획득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학문적인 지식을 산업척도로서 실제로 구현해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바. 미래산업 분야의 활용 가능성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장려활동은 산학 협력을 고무시킴으로써, 미래산업 분야의 가능성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이테크 전략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자원 및 정책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 및 혁신 정책 컨셉을 개발함으로써, 독일에서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주도시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첨단클러스터 선발대회에서는 1차전에서 독일 전체에서 5개 첨단클러스터가 선정되었다. 이들 클러스터는 최대 5년간 모두 2억 유로까지 지원받게 된다. 우수한 팀 가운데 2팀이 구동독 지역에서 나왔다.

- 작센-안할트주와 작센주, 튀링엔주로 이루어진 '중부 독일 솔라밸리(Solar Valley Mitteldeutschland)' 클러스터는 태양광 분야의 파트너업체와 연구기관들을 연계시킴으로써, 태양광 전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술 주도 지역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작센주의 'Cool Silicon - 실리콘 작센의 에너지 효율 혁신' 클러스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제분야 및 경제기술을 키워내는 것은 성장 및 고용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구조 통합 및 자생력 있는 경제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의 ‘미래회의’와 구동독 지역 특임관의 ‘독일 동부의 미래분야’로 이어지는 일련의 회의들은 구동독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해주고, 경제 분야의 미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청정 기술, 나노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이 이미 미래산업 분야로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사. 미래산업 분야 ‘청정 기술’

구동독 지역 특임관은 구동독 지역의 ‘청정기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호 기술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을 후원해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구동독 지역에서 환경보호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미래산업이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무역투자진흥청의 지원으로 이곳의 유리한 청정기술 입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하였다. 2008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청정기술 미래회의에서는 구동독 지역이 미래산업 분야에서 가진 장점과 발전전망 및 도전들에 관해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

아. 미래산업 분야 ‘나노기술 및 생명공학’

구동독 지역 특임관은 미래산업 분야인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지원해준다.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 두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들이 이미 육성되었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신생 기업들로 이루어진 기업문화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구동독 지역의 특별한 강점이자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계기로 역할하고 있다. 이들 실무자들은 매우 잘 연계되어 있고 국제적인 위상도 최상의 수준에 올라 있다.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미래회의에서는 성공적인 기술이전과 창업 및 기업확장시의 자금조달 문제가 현재 구동독 지역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동독 지역의 국제경쟁력과 구동독 지역이 갖고 있는 고용 잠재력의 실현은 혁신 및 연구 결과들의 상업화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경제단체들과 공동 주관한 미래회의들은 기계제조와 의료기술, 섬유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구동독 지역은 이 세 분야들 모두에서 매우 혁신적이며, 발전 잠재력 또한 크다.

자. 교통망

과거 4년간 교통망 확대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거나 종결되었다. 이 기간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모두 약 120억 유로가 도로, 철도 및 해상 교통 인프라에 투자되었는데,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는 구서독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시켰다. 현 입법기에 의결된 주요 결정들 가운데 특히 2011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BBI)’ 건설의 보장, 그리고 할레/라이프치히 공항 2차 이·착륙로 추가 확장이 있다. 또 뤼겐(Rügen)으로 이어지는 슈트렐라준트(Strelasund) 다리도 개통되었으며, 동부에서 서부 방향으로도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근처 오데르 다리의 신축을 포함한 2008년초 철도 연결 확장에서부터, 니더피노브(Niederfinow) 새 선박용 기중기의 제작 결정을 거쳐, 뉘른베르크(Nürnberg)-에어푸르트-라이프치히-베를린으로 이어지는 철도 고속화 프로젝트 VDE 8의 확대도 포함된다. 이로써 2015년 말까지로 계획된 VDE 8.2와 2017년말까지로 계획된 VDE 8.1이 착수되었다.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예산이 보장되었다. VDE 8.1과 8.2를 위한 총 비용은 모두 77억 유로에 달한다. 구동독 지역은 현재 이미 접근성이 용이한 생산 및 서비스 입지를 위한 최고의 전제조건인 첨단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3. 사회적 통일 완수를 위한 책임감 인식

구동독 지역의 노동시장은 2008년 중반 이후의 침체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지난 3년간 실업자수는 약 50만 명 감소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1991년 중반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장기 실업자, 고령층, 자격이 부족하거나 정규 학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집단에 속한다.

구동독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훌륭한 기본여건 마련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광범위한 경제지원 수단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이 외에도 목표 그룹별 특수교육 및 고용촉진 대책도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으로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2008년 구동독 지역에서는 평균 약 566,000명이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약 153,000명은 고용기회 프로그램 또는 고용창출정책(ABM) 등과 같은 고용창출 대책에 참여했다. 참가자중 약 126,000명은 편입보조금 또는 창업보조금 등과 같은 취업병행 지원을 받았으며, 약 69,000명은 자격교육 대책에 참가했다(인가받은 지방 정책시행자의 자료를 제외한 수치).

가. 장기실업자 대책

실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업자들의 능력과 취업자격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사회법전 제 2권에 따른 광범위한 취업서비스를 통해 각각 적절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치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노동시장 정책수단들에 대해서는 제 2부 III.2에 제시해놓았다.

나. 지역 콤비(Kommunal-Kombi)

‘공공인력조달지침(Kommunal-Kombi, 지역콤비)’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가입 정규직을 늘려나가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 장기실직 실업수당 II 수혜자들은 최대 3년까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일자리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긴장된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구동독 지역에 신경을 씌으로써, 모두 72개 지역구 및 기타 도시들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콤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이 2009년 4월 개선되어, 지원 대상 지역의 수가 79곳에서 101곳으로 늘어났다. 또 지원 대상 인력 관련 조건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실직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실직기간이 12개월로도 충분하다.

다. 최저임금

일반적으로,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는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과 주체적인 삶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2008년 여름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및 최저노동조건법의 현대화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더 많은 분야와 다른 업종에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 전문인력 확보

경제성장은 양질의 전문인력이 있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세계화와 지식의 가속화,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요즘, 적절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미래 독일에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08년 1월 내각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길을 보다 넓게 열어주며 기술 및 자연과학에 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일깨우고 또 직업상의 재교육과 평생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대책들을 통합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 및 직업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각 연령대의 대학 진학률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표들이 2008년 10월 드레스덴에서 결정한 '독일 능력개발 전략(Qualifizie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컨대 단기근로자규정과 연계한 재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었다.

마. 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바로 연방정부의 '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로써 지난해 직업훈련 정원 7,000개가 추가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직업훈련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점, 즉 과거 몇 년 동안 직업훈련의 혜택을 얻지 못한 이른바 '장기 지원자들' 문제는 여전히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 직업훈련 보조금

'사회법전 제3권의 개정을 위한 제 5차 법률지원이 필요한 청년 직업훈련 기회 개선을 위한 법률'을 통해 '청년 - 직업훈련과 일자리' 컨셉을 위한 핵심 사항들이

실행되었다. 이 컨셉의 핵심은 바로 직업훈련 보조금이다. 2010년까지 지원이 필요한 오래된 지원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직업훈련 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09년 4월 말까지 모두 14,000건에 이르는 직업훈련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127건은 구동독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직업훈련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젝트도 실시되고 있다.

사. 지역역량 개발전략

연방정부의 능력개발 전략에 기여코자, 구동독 지역에서 지역역량 개발전략 경쟁대회가 개최되어, 2008년 가을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기계발 및 자격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4.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대책

구동독 지역의 주민수는 1991년 1,810만 명에서 2007년에는 1,66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8.3%에 이른다. 연방건설청(BBR)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구동독 지역의 인구는 오는 2025년이면 2005년 대비 11.4%가 감소할 것이다. 이는 구동독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인구 감소는 지역별로 매우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베를린 주변 지역은 인구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와 작센-안할트주처럼 농업 위주의 지역은 2025년이면 인구가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구동독 지역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맞대응 전략’과 ‘현상유지 전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맞대응 전략’의 핵심은 구동독 지역의 전망을 밝게 만들어 이를 다른 지역에 홍보하고 구동독 지역으로의 유입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이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상유지 전략’은 인구수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가. 이주가능성

젊은이들의 이사가 잦은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곳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해 이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동독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구동독 지역을 떠나는 인구에 있기 보다는, 구동독 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 내지는 직업훈련 이후 되돌아오는 인구에 있다. 즉, 단순히 구동독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을 막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오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구동독 지역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동독 지역의 교육 또는 대학교육에 대한 여건들이나 직업훈련 또는 취업 여건이 훌륭하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2009년초부터 구동독 지역 주정부들과 함께 시작한 구동독 지역 투자입지 홍보 캠페인도 바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구동독 지역이 가진 장점들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구동독 지역을 떠나는 것은 먼저 경제적인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구동독 지역에서 성공적인 경제지역을 확대시킴으로써 훌륭한 취업 및 직업훈련 여건이 마련되고, 양질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생활 여건이 제공된다면, 구동독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아가 구동독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서부에서 동부로 이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및 대학 정책, 직업훈련 및 경제·연구 지원은 구동독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령 구동독 지역 특임관은 매우 가정 친화적인 대학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대회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가정과 학업, 내지는 직장생활을 훌륭하게 조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컨셉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전문인력 지역으로서의 입지 매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 경쟁대회에서 우승한 대학교 8곳 가운데 절반은 구동독 지역에서 나왔다.

나. 기초생활 보장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단순히 이주행태의 변화를 통해서만 중지시킬 수 없다. 과거 몇 년간 출생률 하락도 매우 심각했다. 특히 농촌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기초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 도시 지역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기초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구동독 지역 특임관의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또 사회적인 공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경쟁대회를 통해 선정된 구동독 지역의 슈테티너 하프(Stettiner Haff)와 하르츠 남부 퀴프호이저(Kyffhäuser) 지역이 2년간(2007-2009년)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문제에 있어서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모색도 이뤄지고 있다.

농촌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의 내용은 한 유명한 구동독 지역의 지원사례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또는 미래에 주치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AGnES(Arzt-entlastende, Gemeinde-nahe, E-health-gestützte, Systemische Intervention; 의사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기초자치단체에 가까우며, 전자건강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체계화된 참여) 구상’이 적용됨으로써, 주치의들이 각자 보다 많은 고정환자들과, 보다 넓은 지역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월 1일에는 ‘장기요양보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Pflege-Weiterentwicklungsgesetz)’을 통해, 구서독 지역 주정부들과 유럽연합이 지원한 시범계획의 기초자치단체 간호서비스를 법정 건강보험의 기본 지원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기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 소속 의사들에 대한 보수규정에 적절한 점수평가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과 더불어, 이 기초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해 법정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동부도시 정비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구동독 지역의 도시개발 정책에도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인구 감소는 동부의 도시 공동화 현상을 낳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경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칫 전체 도시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2002년에서 2009년까지 계속되는 ‘동부도시 정비’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서둘러 대응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들을 철거하여 빈집을 줄이고, 도심 내지 도시의 특정 구역을 안정화하여 새로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이 프로그램 시행 기간에 820여 곳의 도시정비 구역과 400개 지방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가 총 25억 유로를 지원하며, 이 가운데 10억 유로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원된다. 올해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에서 약 1억 2,100만 유로가 이 프로그램에 책정된다.

2008년말까지 24만개 이상의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빈집의 비율은 2002년 16.2%에서 2008년에는 11%로 낮아졌다. 이와 더불어 주택시장도 안정화되고 도시의 많은 주거단지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심의 오래된 주거지역에는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또 개인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이 도시정비 프로그램에 그다지 많이 포함되지 못했다. 도시의 모습을 특징지우고 기념으로 보호해야 하는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은(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약 13,000채에 이르는 구주택이 철거되었다) 미래 지향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2008년초부터 중지되었다. 또 이와 관련해 구 건물들의 보존을 위한 예산도 동부도시 정비 전체 예산규모의 5%에서 15%로 높아졌다.

연방정부의 지시로 실시된 한 평가에서는, 구건물의 철거와 현건물의 가치 상승 모두를 위한 전략으로서 이 도시정비 프로그램을 오는 2016년까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구동독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이렇게 구 건물들에 대한 철거작업이 지속되지 않는한 구동독 지역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다시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며, 이로써 도시구조와 주택시장의 기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이 프로그램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들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부도시 정비 프로그램에도 반영하고 있다. 구서독 지역 도시들도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서둘러 도시정비에 착수하였다.

라. 사회복지 도시

도시에서의 인구감소는 일반적으로 도시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나타나기 보다

는 지역적으로 나타나며, 이로써 도시 주민들간 사회복지 및 공간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하향화 추세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도시’ 프로그램으로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 모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수나 구조 측면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도시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복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 농촌지역 고유의 강점 개발

구동독 지역의 농업은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써 지역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30,000개 이상의 농촌기업에서 약 160,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구동독 지역 총부가가치생산액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다(구서독 지역은 0.9%). 한편, 최근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건전성 검토’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초 유럽연합은 농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려고 했다. 평균 이상의 직접 지원금을 받고 있던 구동독 지역 농촌기업의 경우 이는 심각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합의도출에 성공함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 대한 삭감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밖에도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장려, 물관리 및 생물학적 다양성의 범위에서 시행된 제2축의 대책을 통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직접지원 삭감액만큼 그대로 보전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권은 아직도 대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지역에 속하며,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젊은 층이 떠나는 비율도 높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촌 지역은 농업 이외에도 성장 및 고용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과 재생원료,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혁신 잠재력이 숨어 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의 장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또 지역성장과 혁신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농촌 지역의 통합 지원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이라는 공동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앞으로도 지역별 특화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로서의 구동독 지역

구동독 지역은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주는 영향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들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에

서 이미 언급된 지역공동체 구상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 또 도입해봄으로써 많은 곳에서 다각도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받아 들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미래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농촌권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곳 지역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길이며, 나아가 그 지역을 매력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IV. 사회적 차원의 내적 통일 강화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인 독일통일이 이뤄진 이후, 독일 내부의 통일 수준에 관한 공공연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적인 통일과정은 1990년 당시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또 예상보다 더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차치하고라도, 독일의 내적 통일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인적자원, 노동 및 많은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내적 통일에 십분 기여해왔다. 서로를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은 갈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후세대의 경우 구동독 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구서독 지역 출신인지 하는 문제는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상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적 통일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 1990년 이후 초기에 크게 강조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긴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차원 및 사회복지 차원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양쪽의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 생활양식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해를 의미하며, 주체적이고 자기실현이 가능한 삶을 위한 열쇠로서의 노동의 기회,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의미한다.

사회적 차원 및 사회복지 차원의 통일 완수는 독일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들이 바로 독일만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독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독일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한편, 물질적인 생활 상황과 삶의 스타일의 차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서 지역간 경계선은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지리적인 경계선을 따라서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상호 이해와 인정

그동안 많은 진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로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동서부 주민들 상당수는,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거의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 주민들은 독일 통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여전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상대를 낮설다고 느끼는 동서부 주민들도 여전히 많다.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향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서로를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2. 생동감있는 민주주의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구동독 지역 사회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며, 아직도 ‘약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장돼 논의되고 있다. 과연 구동독 지역은 시민의식이 그토록 부족한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1989년 가을 평화혁명과 함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시민운동가들은 바로 이 사회의 한가운데서 나왔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역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구서독 지역에서보다 구동독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정치적 아이디어와 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민주주

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독일의 정책 실무자들과 기관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도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상을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민주적인 참여와 시민사회의 참여형태 및 규모는 동서부 지역 모두에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 문화, 그리고 레저 단체들은 물론,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구동독 지역에서 크게 확산되었음이 두드러진다. 한편, 시민사회의 참여, 그 중에서도 조직화된 명예직 분야에서는 동서부간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시민사회 참여 준비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보다 강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시민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공동체 정신, 세계에 대한 개방성, 관용, 민주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이방인과 약자 또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등이 꼽힌다.

3. 반 극우주의

자유시민사회는 극단주의에 대해 모든 측면의 방어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독일 동부와 서부는 그 중에서도 극우주의라는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안이한 생각이 자리한 곳에서는, 효과적인 방어대책이 없는 한, 극우주의적 사상이 사회의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극우주의가 사회로 파고들어 자리를 트는 것은 결단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극우주의 사상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양상에는 여러 다양한 측면이 숨어 있어, 연방정부는 극우주의 퇴치를 위해 예방 및 억제 수단을 총동원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제2부 XVI.2 항목과 비교).

4.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규명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를 규명하는 일은 독일의 내적 통일을 계속 이뤄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구동독 지역 역사에 대한 사학적인 논쟁 이외에도 특히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이들의 가치에 대한 존중 및 사회복귀 지원도 중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 결과를 정책형성 과

정에도 반영시키고 무엇보다 후세대들에게 구동독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실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 역사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교사는 좀 더 자주 학생들과 함께 구동독 지역 역사와 관련된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시대의 증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와 친지들은 후손들에게, 과거 구동독 지역에서 어떤 일을 직접 체험했는지 설명해주면서 진상을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 또는 가족 차원의 전달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역사의 전달을 보완할 수 있다.

구동독 평화혁명 20주년을 맞은 현재, 당시의 사건을 회상해보고, 또 그 이후 지금까지 달성한 모든 것들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됐다. 독일인이 오늘날 하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연대감으로 하나 된 이웃에 둘러싸여 지낼 수 있게 되리라고는 20년 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의 사건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회고해보도록 해주는 충분한 계기가 된다. 당시 사건은 자신들이 가진 확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투쟁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던 많은 이들의 용기와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또한 우리는 77현장을 통해 폴란드와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Solidarnosc)’, 구소련과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물론 1989년 여름 헝가리 국경 개방에 이르는 물꼬를 터준 체코슬로바키아에도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공동 행동을 통해 성공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값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1989년 평화혁명을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돌이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에서 함께 달성해낸 일들은 그야말로 대단하고 성공적인 재건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냈으며, 동시에 앞으로도 많은 할 일이 있다.

제 2 부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 및 정책 분야

제 2부.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 및 정책 분야

I. 경제지원 / 불황극복

1. 경기부양 패키지 I과 II의 개요 및 구동독 지역에 주는 의미

독일 경제는 현재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경기침체의 여파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금융위기 및 전세계적인 경기악화에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추가적인 경제상황 악화와 위협적인 경기하락의 소용돌이를 막고자, 연방정부는 금융시장 부문의 안정화를 넘어선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현 경기 에 적합한 성장정책의 의미에서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적으로는 경제발전 전망을 호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은 위 기 속으로 빠져들기보다는 위기를 통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 대책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기업의 투자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그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또 미 래 분야, 그 중에서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근로자들의 직업교육 을 적극 장려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주고 있다.

경기안정화를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0억 유로에 이르는 세금경감을 골 자로 하는 기업세 개혁법이 이미 2008년도 초에 발효된 데 이어, 2008년 가을 연 방정부는 2009년과 2010년도분으로 모두 약 300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1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였다. 이 ‘세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안정화 및 가계에 대한 투자를 위한 대책’은 2008년 10월 7일 가결되었다. 2008년 11월 5일의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 15개 항목 프로그램은(경기부양 패키지 I)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한 경제 정책, 즉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목표에 정확하 게 부합하는 구상을 현실화한 대책이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21일자 ‘성장강 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경기부양 패키지 I) 대책의 조세법 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 을 통해 시민들과 기업에 2009년에는 약 26억 유로, 2010년에는 57억 유로 이상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돌아간다. 또 2008년 12월 22일자 ‘가계 지원 및 친가정 서비 스를 위한 법률(가정서비스법)’을 통해 2009년부터 가계는 연각 약 23억 유로의 조세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근거리통근자 세금공제 제도(Pendlerpauschale)’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도 경기부양에 또 다른 자극이 되고 있다. 필요한 법규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통근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에도 30유로센트/km에 이르는 세금공제 혜택을 다시 받게 되며, 더욱이 2007년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납세 의무자들은 2009년에 약 54억 유로, 2010년에는 약 31억 유로 세금부담을 덜게 되며, 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을 통해 보충하지 않는다.

2008년 가을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세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안정화 및 가계에 대한 투자' 및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

'세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안정화 및 가계에 대한 투자'

-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율을 0.5%포인트 낮춰 2010년 6월 30일까지 2.8%로 인하, 그 이후에는 3.0% 수준 유지
- 2010년부터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크게 개선. 관련 규정 '예방비용의 세제 혜택 개선을 위한 법률'(건강보험 시민주담경감법 - 2009년 2월 18일자 정부 초안)은 아직 입법 과정중에 있음.
- 2009년 1월 1일까지 자녀세금공제(Kinderfreibetrag) 액수를 약 200유로 늘려 총 6,024 유로로 인상. 자녀수당(Kindergeld)을 매월 10유로씩, 셋째 자녀부터는 16유로씩 인상
- 교육비 지원 패키지(Schulbedarfspaket): 지원이 필요한 자녀의 취학연령 시에 100유로 지원(사회법전 II, 사회법전 XII)
- 발주자 및 사용자로서의 민간 가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친가정 고용정책 또는 친가정 서비스 개시를 위해 소득의 20%, 최대 4,000유로까지 세금 혜택
- 2008년 10월 1일로 주거보조비 개정을 앞당김(원래는 2009년부터 예정), 이에 따라 2008/2009년 난방기간에도 적용됨.
- 바이오디젤에 대해 2009년에 3유로센트만큼 세금인상폭을 축소

경기부양 패키지 I: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

- **기업의 자금지원 및 유동성 확보:** 중소기업들을 위한 재건신용은행(Kfw) 특별프로그램으로, 2009년 말까지 150억 유로의 추가 신용대출 지원.
- **민간투자 및 혁신을 위한 추가 지원:** 설비자산에 대해 25%의 누감 공제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투자액 공제 및 특별 공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추가 투자금에 대해 30억 유로 지원. 2009년도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를 위해 2억 유로 추가 예산 확보
- **공공 투자:** 지방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위해 재건신용은행 예산에서 대출규모를 약 30억 유로로 인상. 2009년과 2010년 교통투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추가로 10억 유로를 부담함으로써 긴급 교통투자 실행이 가속화 됨.
- **민간 가계:** 2008년 11월 5일에서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년 차량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 유로 5 및 유로 6 표준에 부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차량세 면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의 수리 및 개조 작업(Handwerkerleistung) 비용에 대해 2009년 초부터 기존의 600유로에서 연간 최대 1200유로까지 세금 보조금이 2배로 증액
- **고용:** 조업단축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2009년에는 2009년 7월 1일까지 한해 24개월로 연장함), 이와 동시에 재교육 기회를 확대함. 직업알선 담당자 1,000명을 추가 채용해 직업알선 업무를 강화. '미숙련 및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WeGebAU)'을 위한 연방노동청 특별 프로그램이 심화됨.

독일 전역에서 경기부양과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월 '독일의 고용 및 안정을 위한 패키지'(경기부양 패키지 II)를 통해 2009년과 2010년 기간 동안 모두 50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이 공공예산으로 책정되었다. 필요한 법률초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의해 2월 긴급 처리되어 3월에 이미 공시되었다. 이로써 이 대책이 신속하게 발효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부양 패키지 II: '독일의 고용 및 안정을 위한 패키지'

- **세금 및 보험료 부담 경감:** 2009년과 2010년 모두 2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주로 소득세 인하를 위해 투입되며, 이로써 특히 중소 인적회사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두 단계에 걸쳐 소득세 비과세액(Grundfreibetrag)을 340 유로씩 증액해 7,664/15,328유로에서 8,004/16,008유로로 인상하고, 기본세율(Eingangsteuersatz)을 15%에서 14%로 인하하며, 법정의료보험(GKV) 요율을 0.6% 인하한다. 이를 통한 세금경감액은 2010년에 약 58억 유로, 2011년부터는 약 62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
- **인프라 및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 미래투자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모두 17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교육과 인프라 투자에 100억 유로가 투자된다. 그밖에도 연방교통로 및 건물 공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이와 동시에 정부조달규정(Vergaberecht)도 간소화된다.
- **대출·보증프로그램:** 재건신용은행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모두 1,000억 유로에 이르는 대출 및 보증 자금(대출자금 250억 유로, 보증자금 750억 유로).
- **자동차 수요 활성화 대책:** 출고된지 적어도 9년 이상 된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2,500유로에 이르는 승용차 친환경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총액은 50억 유로에 이른다.
- **추가적인 R&D 지원:** 구서독 지역 개별기업들의 연구계획 및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의 직원수 1,000명 이하의 대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ZIM)의 확대를 위해 9억 유로 예산 책정(구동독 지역에 더 높은 지원을 적용). 그밖에 유동성 분야의 응용지향적 연구지원을 위해 5억 유로 예산 확보.
- **고용 보장:** 사용자측의 사회보장보험료 분담금이 2009년과 2010년 조업단축 기간에 대해 절반으로 준다. 사용자측이 지불하는 사회보험금 전체를 직원 재교육 비용으로 사용, 근로자 교육을 적극 활성화하는 기타 대책 마련, 직업알선 업무를 위해 추가 5,000명 고용, 2010년 하반기에도 실업보험요율을 2.8% 수준에서 안정화.
- **친가정·친자녀 정책:** 사회법전 II 및 사회법전 XII에서 6살~13살 사이의 자녀에 대한 보조금지급료를 인상, 자녀 1명당 100 유로씩 자녀보조금 지급.

경기부양 패키지는 구서독 지역은 물론 구동독 지역에서도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투자법을 통해 구동독 지역 주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투자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예산은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배분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25%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금은 연구시설 및 탁아소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조기교육시설의 설립 투자, 그리고 특히 학교와 대학교, 지자체 내지는 공공 재교육시설의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위한 투자, 그리고 기타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주정부는 자금력이 약한 지자체가 자금력이 강한 지자체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자금으로 추가 지원해줄 수 있다. 한편, 세 부담 경감대책, 노동시장 정책 대책, 대출·보증 확대 등 다른 조치들도 구동독 지역의 경기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2. 투자 장려

구동독 지역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광범위한 경제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은 여전히 독일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일자리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구조기금과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 및 재건신용은행(KfW) 신용프로그램의 자금을 비롯한 투자보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RW)은 지역 경제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요 수단이자 구동독 지역의 경제지원을 위한 핵심이기도 하다.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를 통해 목표한 대로 구조 취약지역에서 산업 투자, 친환경 인프라 대책, 그리고 지역 관리나 클러스터 관리 같은 비투자성 대책이 장려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지속적 경쟁력을 지닌 일자리의 창조와 보장이 이뤄지게 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 보조금 지원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유럽연합의 개정된 지원규정을 근거로 한 독일의 새 지역등급을 살펴보면,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

고 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EG 조약 제87c.3조에 따라 구동독 지역은 2007년에서 2013년 기간에 최고지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에서 지원등급 A를 의미한다. 베를린은 경제적인 여건에 상응해 완전히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 지원지역으로 분류되며, EG 조약 제87c.3조의 분류에 따라 상당 지역은 지원필요 등급(GRW의 지원등급 C)으로, 또 일부는 이보다 낮은 지원등급 D로 분류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에서 지원필요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주민수는 모두 약 1,310만 명에 이른다. 주정부는 허용된 최고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역 현안에 부합되는 주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기존의 연방예산 분배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 분배율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6/7은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 나머지 1/7은 구서독 지역의 구조 취약지역에 투입된다.

표 4: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로 시행된 2008년도 구동독 지역 및 베를린에 대한 지원 승인

	산업경제		경제관련 인프라
계획 건수	2,250		304
투자 규모(단위: 100만 유로)	7,083.84		710.83
승인된 GRW 예산*(단위: 100만 유로)	1,244.10		529.94
지원받은 장기일자리	추가	보장	
	26,000	81,711	

* 유럽연합의 지역개발기금(EFRE) 공동 예산지원을 포함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분담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은 모두 약 128억 유로 규모의 지원승인을 받았다(연방정부 및 주정부 분담률). 이로써 투자규모는 약 683억 유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약 242,500개에 이르는 장기일자리가 마련되었고 약 683,300개의 장기 일자리가 보장되었다.

연방정부는 2009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으로 모두 6억1,700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이 가운데 5억 2,900만 유로가 구동독 지역에 할당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의 예산이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 대책(경기부양 패키지 I)을 통해 2009년도에 1회에 걸쳐 2억 유로가 인상된다(2009년도 현금예산 1억 유로, 그리고 2010년과 2011년도에 각각 5,000만 유로씩 의무 지원). 이 예산 가운데 모두 1억 유로가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 투입된다.

현 금융위기에 직면해 유럽연합은 ‘최소마진율(de minimis) 지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연방정부는 ‘소액지원 연방규정(Bundesregelung Kleinbeihilfe)’ 고시를 통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업들에 대해 최고 50만 유로까지 소액지원이 허용된다.

나.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을 통해, 베를린과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및 생산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2007년부터는 요식숙박업에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장려하고 있다.

투자보조금법은 구동독 지역의 경제재건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원 분야에 기업 투자를 자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로써 지원받는 지역의 기업 입주 단지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입지상의 기존 약점들도 감소될 것이다.

구동독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부흥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보조금법 2010과 더불어 투자보조금법 2007의 후속 조치가 조기에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의 제조업 및 생산 관련 서비스업, 요식·숙박업 분야에 대해, 성장 지향적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오는 2013년말까지 계속해서 지급되며,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곽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은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온 지원율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투자보조금 제도가 계획대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장려를 기본법에 명문화한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에 집중시키려는 연방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투자보조금 보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008년도 약 13억 5,580만 유로에 이르렀으며, 세금추산조사분과의 2009년 5월 추산대로라면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3억 9,400만 유로와 11억 2,000만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경제 지원(지원 연도 2004년까지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포함)의 경우 1991년에서 2008년 기간에 모두 약 290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이 금액은 투자보조금법 2007의 개정 및 후속 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을 고려할 때 2015년까지 약 34억 4,000만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보조금 지원을 201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 공동과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구동독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장려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지원

1991년부터 유럽연합은 구조조정 지원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의 경제재건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구조기금 예산을 통해 보완, 강화되고 있다.

현 지원기간(2007년~2013년)에 유럽연합 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FRE)과 유럽사회기금(ESF)을 포괄한다. 농촌 개발은 현 지원기간 초반부부터 공동농업정책(농촌권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 ELER)의 틀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 구조기금 예산은 산업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및 R&D, 환경보호 및 개선, 농업정책 장려 및 남녀 기회균등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 구조기금은 2007년에서 2013년 기간에 유럽 내 성장과 경쟁력, 고용강화(Lissabon 조약의 목표)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현 지원기간에 독일의 경우에는 모두 263억 유로를 유럽연합 구조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엔주는 '경제적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주는 가장 높은 지원등급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서 2013년에 걸쳐 독일에 할당된 구조기금 예산의 상당 부분인 약 155억 유로를 지원받는다.

구동독 지역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진정한’ 경제 평준화 대상지로서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이 지역들의 1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의 75%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브란덴부르크주 남서부와 라이프치히, 그리고 할레만이 75% 수준을 간신히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들은 이른바 졸업예정지역(‘phasing out’)으로서 지원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써 독일에 대한 유럽연합 구조조정 지원의 핵심대상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지표들을 살펴봐도 구동독 지역은 여전히 타지역을 따라잡을 필요성이 높다. ‘경제적 평준화’라는 목표 하의 구동독 지역 지원의 기초는 주정부의 10개 선택프로그램(OP)이다. 각 주마다 2개의 선택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럽지역개발기금(EFRE)과 유럽사회기금(ESF)으로부터 하나씩 지원받는다. 여기에다 150억 유로 예산 규모의 ‘연방프로그램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교통’과 경제 평준화 지역에 약 13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연방 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ESF)’(총 예산 약 35억 유로)도 있다.

‘국가전략기본프로그램 2007~2013(NSRP)’은 2007년에서 2013년에 이르는 지원기간에 대해 독일 전역에서의 유럽연합 구조기금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기본프로그램에서는 독일 지역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광범위한 장단점 분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확정하고 있다: ‘지식 사회의 혁신과 확대 지원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투자자 및 주민을 위한 지역 매력도의 제고’ 및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노동시장의 방향 설정 - 보다 많고, 보다 나은 일자리’. 이러한 목표들은 지역 특수의 목표와 지원 전략 및 대책을 통해 모든 지원지역에서 실행된다.

구동독 지역의 선택프로그램은 2007년에서 2013년에 이르는 지원기간에 특히 혁신과 연구,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되며, 이를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예산의 약 30%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안점은 창업지원 및 개별기업의 투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 지원예산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며, 고용보장 및 창출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벤처자본펀드 등과 같은 대체 자금지원 수단도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 환경 혁신 및 에너지·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책도 본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진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이런 지원분야 이외에, 구조기금은 구동독 지역이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입지 매력을 개선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인적자본과 고용 촉진을 장려하며, 빈곤층의 사회편입을 장려해주는 역할을 한다.

목표 설정과 재정적 측면의 주안점 설정을 통해, 선택프로그램의 지원 전략은 2007년에서 2013년 기간에 리사본 어젠다(Lissabon Agenda)의 경제 목표에 따른 유럽연합 구조조정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도 부합한다. 유럽연합 구조조정 정책은 그밖에도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대한 지원에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지원기간에 비해 성장과 고용에 훨씬 더 많은 지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조기금 프로그램이 리사본 전략의 목표에 상응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평준화 목표를 위한 구조기금 예산의 60%는 R&D와 같이 이른바 ‘리사본에서 확정된’ 분야의 지출 및 창업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독일의 경제평준화 지역에서는 이 60% 기준을 넘어서 약 71%가 상기 언급된 분야에 투입됨으로써, 구동독 지역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혁신과 성장 촉진 대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가전략기본프로그램(NSRP) 뿐만 아니라 독일의 모든 선택프로그램들을 2007년 말까지 수용하였다. 이로써 2007년~2013년 지원기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무런 마찰없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었다.

3. 생계형 창업자 및 중소기업 정책

구동독 지역경제는 중소기업이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 기업들이 과거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발전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소경제 이니셔티브(Mittelstandsinitiative)’를 통해 연방정부는 2008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제반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에 입각한 주요 대책으로 유한회사법 개혁, 상속세 개혁이 이루어졌고,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및 제3차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법이 마련되었다. 2009년도의 주요 계획에는 특히 창업 및 자금지

원 여건의 개선, 계속적인 관료주의 타파, 대차대조표법의 현대화 등이 있다.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와 '독일의 고용 및 안정을 위한 패키지'라는 2가지 경기부양 패키지는 특별히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필요를 감안한 것이다.

가. 생계형 창업

(1) 상업등기부

2007년 전자등기부의 도입으로 신설기업 등록이 두드러지게 가속화되었다. 2009년 1월 1일까지 일간지에 등록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지면서 창업비용도 감소했다.

(2) 유한회사법 개혁

2008년 11월 1일부터 '유한회사법의 현대화와 악용방지를 위한 법률(MoMiG)'이 발효됨으로써, 유한회사 설립이 보다 간편해지고 비용도 저렴해졌다. 새로운 유한회사법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현대화되고 실용적이다. 생계형 창업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 이 기업형태와 더불어, 일정한 최저자본금 없이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지 않은 표준형 창업 견본 프로토콜이 도입됨으로써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물론, 상업등기부 등록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창업 과정도 신속화될 수 있게 되었다.

(3) 학계의 생계형 창업 지원

연방정부는 2008년 '대학이 함께하는 생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EXIST)'을 계속 확대해나갔다.

- 학계의 생계형 창업(EXIST)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체가 되어 창업할 경우에는 창업 아이디어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1년간 장학금 및 필요물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계획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

- 효과적인 이 학계의 생계형 창업(EXIST) 장학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EXIST 연구이행 제도가 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다분히 위험요소가 있는 개발작업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연구계획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독일 전역에 걸쳐 연간 약 25개 창업계획이 지원을 받고 있다. 최초의 창업계획은 2008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모두 23개 연구이전 계획이 새로 승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8개는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 지역에서 나왔다.
- 이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문화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이외에 추가로 25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 지역 프로젝트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모두 6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 지역 프로젝트는 16개에 이른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특히 기술 및 자연과학 전문분야의 대학생들과 학자들이 창업동기를 부여받는 기회가 늘고 있으며, 각 창업 네트워크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사업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4) 자금 지원

2009년도에도 기존 기업들의 현대화 및 확대가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40억 유로가 투자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구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에 이자혜택(기본 25bp)과 기타 특수한 사항들(예: 보다 높은 금융지원 비율, 보다 적은 자기자본 비율, 또는 장기의 이자상환기간)이 적용된다.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의 확약 금액이 2008년도에 독일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13% 증가한 35억 3,000만 유로로 높아지고 동부지역은 28% 감소해 9억 6,100만 유로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균 수준을 웃도는 수치이다.

금융위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기업 금융지원을 보조해주기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2009년과 2010년 모두 150억 유로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확약금을 토대로 한 재건신용은행 특별 프로그램이 2009년 1월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은행들의 위험부담은 90%까지 낮아지고, 기업체들은 추가 유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독일의 고용 및 안정을 위한 패키지’(경기부양 패키지 II)의 틀 내에서 이 프로그램에 추가로 250억 유로

가 편성되었고, 대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금융지원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여기에다 연방정부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증은행들의 국내 보증제도들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로써 2009년과 2010년 추가로 750억 유로를 활용할 수 있다.

(5) 컨설팅

가. 창업자 코칭 서비스

창업 및 중소기업에 위한 연방정부의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는 광범위한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를 지원해주는 연방정부 서비스 일부가 폐지되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창업상담 지원은 온전히 주정부의 과제가 되었으며, 대신 연방정부는 창업 후 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주력한다. 이 같은 업무 진행을 위해 '독일 창업자 코칭'이라는 공동기관이 마련되어, 이곳에서 전반적인 창업상담은 물론 실직으로 인한 창업보조금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상담 업무까지 맡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생계형 창업자들은 일반상담시 상담수수료에 대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나. 중소기업체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상담 업무

상담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상담은 물론, 품질관리와 협력, 환경보호 등과 같은 특별상담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또 업무능력과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2008년에는 구동독 지역에서만 모두 1,866건에 이르는 상담지원이 이뤄졌다.

다. 정보·교육 행사 및 워크숍 지원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상담 지원'이라는 전체 컨셉에 맞춰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창업자 및 중소기업과 그 전문인력 및 경영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이들의 업무능력을 증대시키고 또 달라진 경제 여건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주고 있다. 2008년에는 구

동독 지역에서 1,100여 개의 행사에 모두 12,300명이 참가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라. 기업회생(Turn around) 상담 및 원탁회의

현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중소기업의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 업체들에 대해 위기극복이라는 목표에 보다 부합한, 한 차원 확대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상담을 통한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이미 수년전에 정착된 재건신용은행의 '원탁회의'는 중소기업들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외부 상담가들에게 '기업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같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되는 곳은 보통 지역파트너로서의 상공회의소이다. 이같은 대책으로 기업들은 필요한 대응책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권자들로 부터 다시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취약점 분석 및 긴급 대응책 마련을 위한 상담비용은 재건신용은행이 지원하는 보조금(최대 1,600유로)으로 전액 충당된다. 재건신용은행과 상공회의소가 경제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보다 높은 추가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예산에서 지급되는 '원탁회의'를 위한 확약금이 증액되었다.

마. 판매 및 수출 장려

구동독 지역 제조업 분야의 수출비중⁶⁾은 2008년 33.1%에 달했다. 그러나 이 구서독 지역 기업의 수출비중(45.9%)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특별 마케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적인 대외경제 정책 수단을 동원해 2009년에도 구동독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450여 개에 이르는 구동독 지역 중소기업들이 마케팅 지원 프로젝

6) 전체매출액에서 해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트에 참여했다. 2009년초 공모결과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32개 프로젝트가 나왔으며, 이를 통해 약 50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다.

바. 연방군에 의한 수요 창출

연방군은 구동독 지역의 대규모 '고용주'라 할 수 있다. 현재 약 30,800명에 이르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군인이 구동독 지역에 있고, 일반병역자와 자원입대자 수도 약 13,700명에 이르는 데다, 전력 및 연방군 행정업무 분야의 민간 군무원도 약 13,100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연방군은 구동독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사들을 위한 주택건설, 병영과 시설, 설비의 신축 및 유지보수, 그 관리와 감시, 요식·숙박 등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정비에 들어간 총비용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약 93억 유로에 이르렀다. 연방군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 및 지방업무 수행을 위해 약 54억 5,000만 유로⁷⁾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했다. 200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예산 사용처는 의복과 서비스, 도로·차량 및 선박과 해상 운송수단이었다.

II. 산업입지 개발 및 투자자 홍보

1. 산업입지 개발과 미래산업시장

구동독 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 가운데 하나로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매력을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혁신과 변화의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의 다양한 미래산업에서 놀랄 만한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었다. 구동독 지역을 중요한 입지로 만들어준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의학기술, 건강산업,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및 광학기술 등 다른 미래산업분야에서도 구동독 지역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산업 분야들이 구동독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산업분야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장이자, 새로운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 임시 수치임

구동독 지역경제가 성장 위주의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몇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혁신 잠재력면에서도 구동독 지역의 입지가 증명되고 있다. 장점은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전제조건이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해외시장에서도 더욱 성장하고 또 국제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탁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업종과 기술분야가 매우 적절하게 어우러진 구동독 지역은 독특한 입지특성을 형성하여, 해외 직접투자자들이 특별히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한다. 기업과 R&D 기관의 협력 증대, 첨단 물류 및 통신 네트워크, 숙련된 고급인력 및 유연한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은 저렴한 비용 등이 바로 이러한 매력으로 꼽힌다. 이로써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의 시대에 구동독 지역은 이로써 국제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입지로서 인식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자들은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투자비 지원, 저리대출 또는 노동비 보조금, 직원선발 및 직원계발방안 마련시 지원조치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구동독 지역의 특별한 강점은 신속한 인허가 과정, 업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업무, 높은 법적 안정성에 있다. 이들은 해외기업 유치에 있어 다른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사이 구동독 지역 내에 수많은 '클러스터'가 생겨나고 이들간 협력이 원활이 이뤄짐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 네트워크는 특히 혁신 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에너지·환경기술, 광학기술 또는 의료기술 등이 있다. 연방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역간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동독 지역의 관련기술 개발 및 경쟁력 지원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예로, 태양광산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현 금융위기로 인해 태양광산업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에너지문제는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엔주로 이루어진 독일의 4대 주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가령 박막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베를린 헬름홀츠 재료·에너지 센터(Helmholtz-Zentrum Berlin für Materialien und Energie; 2008년까지는 Han-Meitner 연구소로 불림)나, '모듈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베를린 태양광 연구소 같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2. 해외투자자 홍보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도 맞닥뜨리게 된 커다란 도전을 생각해 볼때, 국제 경제구조에 보다 강력하게 연계, 편입되는 것이 절실하다. 해외직접투자자와 국제적 노하는 구동독 지역의 미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장시장을 겨냥한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이들 시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침투,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역 부가가치창출 사슬의 지속적인 개발은 연방정부의 구동독 지역 경제지원전략의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는 연방정부의 구동독 지역 개발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구동독 지역의 해외투자자 유치 활동은 연방정부 산하 대외경제지원협회인 '독일무역투자진흥청 - 대외경제·산업입지마케팅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기관은 지난해 38개 해외기업의 구동독 지역 입주계획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들의 투자규모는 약 25억 유로에 이르며, 기업들은 구동독 지역 내에서 약 3,5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구동독 지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우 탄탄한 입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의 새 대외경제지원협회인 '독일무역투자진흥청 - 대외경제·산업입지마케팅협회(Germany Trade & Invest - Gesellschaft für Außenwirtschaft und Standortmarketing mbH)'는 2009년 1월 1일 연방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던 기존의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 GmbH)과 대외무역정보협회(Gesellschaft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mbH), 그리고 연방대외경제청(bfai; Bundesagentur für Außenwirtschaft)이 통폐합됨으로써 만들어진 기관이다.

독일무역투자진흥청의 주요과제 역시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홍보에 있다. 구동독 지역 입지홍보 이외에도, 독일무역투자진흥청-대외경제·산업입지마케팅협회는 구동독 지역 기업이 해외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II. 고용 정책

2008년 구동독 지역의 노동시장은 경기활성화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발전 추세를 보였다. 구동독 지역의 2008년 평균 실업자수는 전년 대비 16만 7,000명이 감소해(실업률 13.0% 감소) 모두 112만 3,000명에 이르렀다. 모든 민간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한 실업률은 2005년 18.7%에서 2006년 17.3%, 2007년 15.1%로 감소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3.1%로 더 크게 낮아졌다. 이로써 구서독 지역과의 실업률 격차도 더 좁혀졌다. 2005년도 실업률은 구서독 지역보다 여전히 8.8%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8년에는 그 차이가 6.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3.1%라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서부의 6.4%와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08년 실업률은 1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기실업률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 추세는 전체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수많은 개혁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혁

연방정부는 특히 노동시장의 정책방향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개혁을 지속해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와 직업훈련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다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개선하고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정책수단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노동정책 자체가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업무 중개를 위해, 각 정책수단 및 담당자들의 책임범위와 활동여지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직이 힘든 사람들이 장기 실직상태에 빠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노동지원 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되었다. 직업교육 및 재교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훌륭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은 실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방책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발효된 '노동시장정책 수단의 새로운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에는 뒤늦게라도 직업학

교(Hauptschule)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관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과 더불어, 또다른 혁신적 노동시장 정책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에 따른 업무범위의 유연성과 지역적인 업무구상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을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수단의 새로운 방향설정은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써 노동장려 법권(Rechtskreis)(사회법전 III)과 구직자 기초생활보장 법권(사회법전 II)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으로 경제위기 파급효과 감소

연방정부는 이미 2008년 11월 5일자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안정화’ 15개 항목 프로그램(경기부양 패키지 I)을 통해 불투명한 경제전망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신속한 극복과 고용안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고용정책을 지원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조업단축수당 지급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는 이 조업단축을 근로자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직업알선 담당자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직업알선 업무를 강화하였다(Job to Job 알선). 그밖에 ‘미숙련 및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WeGebAU)’을 위한 연방노동청 특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08년말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방정부는 ‘독일의 고용 및 안정을 위한 패키지’(경기부양 패키지 II)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안정을 위한 법률’은 고용안정과 보험요율 안정화, 고용 활성화, 직원관리 및 교육,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유자녀 정부보조 수혜자들의 소득개선, 그리고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금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2008년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은 2008년도에 연방노동청(BA)

과 연방노동사회부(BMAS)로부터 약 51억 유로의 지원을 받았다. 이로써 사회법전 III 영역에서 2008년 평균 258,000명이, 그리고 구직자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 308,000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표 5: 구동독 지역의 주요 노동시장 정책도구(2008년도 평균 수치)*

	합계	사회법전 III	사회법전 II
제3자의 직업알선	29,000	16,000	13,000
직업상의 재교육 1)	50,000	20,000	30,000
적성검사 및 훈련 대책 1)	19,000	8,000	12,000
빈곤층의 직업교육	45,000	27,000	18,000
편입 보조금 2)	50,000	27,000	23,000
생계형 창업 보조금	17,000	17,000	
고용기회 프로그램	121,000		121,000
고용 창출책	31,000	3,000	28,000

* 인가받은 지방 정책시행자에 의한 참가자 제외

합계에서의 차이는 수치 반올림 또는 반내림에 의한 것임

1) 장애인 포함

2) 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입 보조금 제외

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 대책

(1) 고용기회 프로그램

고용기회 프로그램은 경제활동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생계형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원책이 있다. 첫 번째는 추가 업무와 공공업무[추가 일자리(Zusatzjob)]를 수행하는 대가로 실업수당 II에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기회 I이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고용기회 II이다. 고용기회 II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법 규정이 변화됨에 따라 고용기회 II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 조치의 지원 조건에 편입될 예정이다. 연방고용청의 통계에 따르면(지역기관 통계 제외) 구동독 지역에서는 2008년 한 해 약 11만 1,000명(전국 합계 24만8,000명)이 고용기회 I(추가 일자리), 약 9,600명(총 2만1,000명)이 고용기회 II(사회보험 관련 업무)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추가 일자리 지원책이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 중요한 고용시장 정책임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많은 생계형 구직자들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 일자리 지원책은 실업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근로 희망에 대한 열정을 증명하고, 근로지식 증대와 사회관계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대책

일자리창출대책은 추가업무와 공공업무를 위한 사회보험의 의무를 면 고용(실업보험료 납부 면제)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자리창출대책은 사회법전 III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와 사회법전 II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모두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 조치는 사회법전 III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만을 지원한다.

2008년 구동독 지역에서는 3만 1,000여 명의 사회법전 III에 따른 실업수당 수령자와 사회법전 II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 창출대책을 통해 근로활동을 하였다(구서독 지역 포함 총 3만 9,000여 명).

일자리창출대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구동독 지역이다. 2009년에는 사회법전 II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창출대책 지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고용기회 II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금까지의 지원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3) 고용지원 보조금(JobPerspektive)

여러 차례에 걸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에게 고용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0월 1일 고용지원 보조금이 도입되었다. 고용지원 보조금은 기존의 고용시장 지원책만으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실업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근로자의 능력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지원해주고, 근로자에게 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또 능력부족 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주측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서도 1회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의 경우 최대 24개월로 제한된다. 그러나 향후 2년간 구직자의 근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지급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구직자의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정부는 2009년 사회법전 II에 따른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고용지원 보조금 부문에 총 5억 6,0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2009년 말까지 최대 6만 개의 일자리가 여러 차례에 걸친 구직알선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동독 지역에서는 고용지원 보조금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8,000명의 실업자들이 (구서독 지역 포함 총 2만2,000명) 일 자리를 찾게 되었다.

(4) 공공인력조달지침(Kommunal-Kombi, 지역 콤비) 연방 프로그램

지역 콤비 연방프로그램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Kreis)와 자치시(Kreisfreie Stadt)의 장기 실업자들이 최대 3년에 달하는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본 연방프로그램은 실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측은 지금까지 실업자들에게 지급해 온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Gemeinde)가 나서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주당 30시간이며, 보수는 정해진 임금률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임금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의 평균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을 제외한 근로자 임금의 50% 수준을 지급해주되, 최대 500유로를 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고용주의 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매달 2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매달 100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종류 지원금은 연방정부의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할당된 유럽사회기금(ESF)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원금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사회법전 III 제18조에 해당하는 장기 실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실업수당 II를 계속적으로 수령해 왔고, 101개 지원 대상지역에 등록된 실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하고 있는 곳은 72개 지원 대상지역이 위치한 구동독 지역으로, 이곳의 심각한 구직난과 취약한 지역 경제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구조와 지역 사회보장기금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2009년 4월 1일까지 9,400개의 일자리에 대한 4,300개의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그 중 약 9,000개의 일자리가 구동독 지역에 창출되었다.

(5) '미래 50+(Perspektive 50plus) - 지역 고령자 고용협정' 연방프로그램

연방프로그램 '미래 50+(Perspektive 50plus) - 지역 고령자 고용협정'은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24개 구동독 지역을 비롯한 전국 62개 지역의 고용협정을 뜻한다. 이를 통해 장기 고령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본 연방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이기 때문에, 재취업 전략을 선택할 경우 지역적 특성의 고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시행된 제 1차 프로그램 기간중 구동독 지역에서 시행된 24개의 고용협약은 30,777명의 장기 고령 실업자(여성 13,657명)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7,738명의 장기 고령 실업자(여성 2,967명)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8만명의 장기 고령 실업자들(여성 33,2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22,562명(여성 8,5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장기 고령 실업자들의 잠재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2차 기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관 194개(구동독 지역 62개)가 고용협약 62개에 참여했다. 2009년부터는 237개 기초생활보장기관이 참여했으며, 그 중 78개 기관이 구동독 지역에 위치하였다.

2008년에는 고용협약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장기고령실업자 25,886명의 고용 기회가 개선되었다(전국 총 73,800명). 2008년에는 구동독 지역의 장기 고령 실업자

5,843명(여성 1,191명)에게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일자리 혹은 생계형 창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전국 총 19,300명).

연방정부는 본 고용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약 87,000명의 장기 고령 실업자를 지원하고, 그 중 약 26,500명의 재취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IV. 교육 및 직업교육

전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성장과 고용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구동독 지역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변화로 인해 구동독 지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독일의 전반적인 인구변화 경향을 앞서 보여주고 있다. 구동독 지역은 주민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정지역과 산업분야는 이미 전문인력 확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교육 이니셔티브, 그리고 직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약, 특별 직업정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1. 교육 이니셔티브 - 교육을 통한 성장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표들은 독일 교육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2008년 10월 22일 교육정상회의에서 '교육을 통한 성장, 독일을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라는 드레스덴 선언(Dresdener Erklärung)을 통해 교육 전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와 조치에 합의하였다. 특히 조기교육과 공교육, 직업교육, 대학을 통합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투자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에 따른 필수적 교육이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09년 가을에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 보고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2008년 1월에 합의된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해 전 분야에 걸친 교육기회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정된 조치들을 통해 직업교육과 재교육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고, 교육 전 분야의 입학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12년까지 6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부분의 조치들은 이미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일부 조치들은 곧 실행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학교 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개선, 졸업 및 성장 가능성 지원, 재교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계획된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졸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문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장학금이다. 뿐만 아니라 이민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교육 강화도 집중지원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재교육을 장려하는 교육보조금 조치가 새로 마련되었다. 2008년 6월 수학·정보학·자연과학·기술(MINT) 직업분야의 여성들을 위해 체결된 국가조약을 통해 연방정부는 여성 인력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을 MINT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 의미있는 조치로는 엘리트 양성과 후진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교육 중심지로서의 구동독 지역 이미지 홍보, 구동독 지역 직업교육 프로그램, 구동독 지역 교육정책 대회 등이 있다.

2. 직업교육시장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조약

2006년/2007년도에 이루어진 직업교육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2007/2008년에도 이어졌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직업교육청(Berufsausbildungsstelle)에 등록한 지원자 수는 62만 209명이었다(작년 대비 11만 3,762명(약 15.5%) 감소, 구동독 지역: -26.0%, 구서독 지역: -11.9%). 지원자 수의 감소로 장기 등록된 지원자 수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전국: -16.7%, 구동독 지역: -25%, 구서독 지역: -13.7%). 지원자들의 졸업 비율은 2000년 50.3%에서 2008년에는 30.9%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독일 전역의 직업교육청은 51만 1,582개의 직업교육 일자리를 알선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0.2% 증가한 수치이다(1,205개 증가). 직업교육 일자리가 증가한 분야는 오직 민간기업 분야로, 10,399개가 증가해(총 2.5%, 구동독 지역: 6%, 구서독 지역 1.8% 증가), 민간기업의 직업교육 일자리 수는 총 43만2,689개에 달한다. 반대로 공기업분야의 직업교육 일자리수는 급감하였다(총 9,194개 감소 (-10.4%), 구동독 지역: -22.1%, 구서독 지역: +4.3%).

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구직에 실패한 지원자(14,479명)보다 많은 직업교육 일자리 공석(19,507개)이 발생했다. 구동독 지역에서는 구직에 실패한 지원자 수가 4,352명으로 줄어 작년 대비 50% 감소했다. 반대로 직업교육 일자리의 공석은 2,769개가 발생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구동독 지역의 졸업자수와 장기 구직실패자의 숫자는 직업 교육 일자리수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구동독 지역의 직업교육 시장은 신규 직업교육계약 체결건수의 감소(-9%)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2009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년대비 직업교육 신청자뿐만 아니라, 알선된 직업교육 일자리수 역시 감소하였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일자리 수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직업교육 시장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감지되고 있는 지원자 등록수와 직업교육 일자리수의 감소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혹은 경기침체로 인해 연방노동청이 청소년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입장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사안이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이 거듭 발표됨에 따라, 2009년에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일자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출생률 감소에 따라 청소년수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2008/2009년 구동독 지역의 학생수는 1990년대초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조약'을 통해 연방정부는 재계와 공동으로 직업교육을 원하는 자와 직업교육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조약 기간은 2007년 3월 5일부로 3년이 추가 연장되었다. 신규 조약 파트너로는 연방프리랜서협회(Bundesverband der Freien Berufe)가 있다. 재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 시장이 안정되어, 2008년에는 616,259개의 직업교육 계약이 체결되었다. 전국적으로 86,500개의 새로운 직업교육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2008년도에도 목표치였던 6만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52,700개의 직업교육 사업장이 신설되었으며, 직업교육 후 곧바로 해당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일자리 총 37,650개가 마련되었다. 이 중 구동독 지역에서는 약 15%에 달하는 수치가 각각 신설되었다.

표 6: 2007/2008년도 직업교육 상황 결산 수치*

		2007/2008년	2006/2007년 대비 증감
등록된 지원자 수		620,209	-15.5%
	동	137,889	-26.0%
	서	482,113	-11.9%
장기 지원자 수		320,450	-16.7%
	동	77,751	-25.2%
	서	242,584	-13.7%
구직에 성공한 지원자 (견습직 또는 유사직)		605,730	-13.6%
	동	133,537	-24.5%
	서	471,989	-10.0%
구직에 실패한 지원자		14,479	-55.7%
	동	4,352	-54.6%
	서	10,124	-56.1%
등록된 직업교육 일자리		511,582	0.2%
	동	109,503	-5.9%
	서	401,850	2.0%
민간 직업교육 일자리		432,689	2.5%
	동	71,100	6.0%
	서	361,360	1.8%
공기업 직업교육 일자리		78,893	-10.4%
	동	38,403	-22.1%
	서	137,889	4.3%
직업교육 일자리 공석		19,507	6.3%
	동	137,889	18.4%
	서	16,664	4.5%

*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3. 직업교육 활동

연방정부는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직업교육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시장 안정화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교육 잠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구동독 지역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1996년부터 구동독 지역을 위한 특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기업의 직업교육 일자리 비율이 민간 기업의 직업교육 일자리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직업교육법 혹은 수공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직업교육, 또는 연방법 혹은 주(州)법에 따라 졸업을 인정하는 학교 직업교육이다. 구동독 지역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8/2009년 구동독 지역에 7천 개에 달하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창출했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방정부는 총 4,75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 신규직업인(Jobstarter) 프로그램

직업교육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약속한 사항들과 더불어, 신규직업인(Jobstarter)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의 직업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직업교육구조 개선을 장려하는 추가적인 직업교육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의 직업교육 조건과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 조치를 통해 사업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직업교육과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을 더욱 긴밀히 연계해 직업교육 구조와 잠재력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으로는 2013년까지 1억 2,500만 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예산은 연방정부와 유럽사회기금(ESF)이 일부 지원했다.

다. 기업연합 직업교육원 육성

기업연합 직업교육원(Die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은 연방주 지역에서도 수공업 및 건설업, 농업 부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직업교육능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기업연합 직업교육원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됨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는 직원과 관리자, 전문인력들이 양질의 최첨단 직업교육과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구동독 지역에는 2008년 말 15,000개 이상의 실습장과 약 6,000개의 이론실을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의 기업연합 직업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라. 연방군의 민간 직업교육

연방군은 구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방군은 정부가 인정한 군 관련 17개 직종에서 연간 559명의 직업훈련생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126명의 행정요원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훌륭한 준비과정인 셈이다.

1997년부터 연방군은 일명 샤움부르크 모델(Schaumburger Modell)과 베를린 모델로 불리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교졸업생들에게 매달 250유로가 지원되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적합한 조건을 확보한 직업교육생이나 직업교육을 훌륭한 성적으로 마친 교육생에게는 단기복무군인으로서의 취업기회가 제공된다.

구동독 지역에서는 약 33,000명의 군인과 30,000명 이상의 단기복무 군인들이 민간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할레(Halle), 베를린, 킬(Kiel) 지역 등지의 20개 직업교육서비스팀 2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V. 혁신력 강화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미래의 수입을 위한 토대이다. 구동독 지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구서독 지역에 비해 점점 더 뒤쳐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구동독 지역에 연구 집약적인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동독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열의가 비교적 강하기는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투자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 인프라의 강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의 혁신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7월 1일에 도입된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ZIM)'을 들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구동독 지역의 개별 기업 지원책들이 통합되었다. 또한 구동독 지역의 혁신이니셔티브를 위해 발족된 '기업 지역(Unternehmen Region)'이 있다.

1. 연방정부의 하이테크전략

주요 미래시장에서의 독일 기업들의 혁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기존의 연구 혁신정책을 하이테크전략으로 새로이 무장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범국가적 연구 혁신 활동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통합했다. 연방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꼽는 하이테크전략의 분야는 바로 바이오기술 분야이다. ‘독일 제약산업 이니셔티브’, ‘바이오에너지와 건강한 영양섭취를 위한 미래 이니셔티브’, ‘2021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등은 이러한 분야들이 유럽 최고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초 연방정부가 새로 도입한 건강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잠재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전망이다. 그 밖에 2008년에는 연방정부의 중앙지원상당소인 ‘연구와 혁신(Forschung und Innovation)’이 설치되었다. 이 지원 상당소는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연구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강점은 이러한 지원책들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첨단클러스터 선발대회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의 핵심요소는 산학연계이다. 혁신적 잠재력을 보유한 연구결과는 성장과 고용보장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상품화되어야 한다. 기업과 연구소,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클러스터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첨단클러스터 선발대회를 준비했다. ‘독일의 혁신, 성장, 고용 강화를 위한 첨단 클러스터’라는 모토 하에 본 대회는 산학 연계 클러스터의 혁신력을 강화하고, 이들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독일 최고의 클러스터를 선발하기 위해 약 1년 반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의 심사를 통해 최장 5년 간 최고 2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첨단 클러스터 5개가 선발된다.

2008년 9월 첫번째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5개의 첨단클러스터 가운데 2개 클러스터가 구동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튀링엔주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부독일 솔라밸리(Solar Valley Mitteldeutschland)’ 클러스터는 세계 최고의 태양광발전 지역으로 성장해, 독일 태양열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센주의 ‘실리콘 작센의 에너지 효율 혁

신'(Cool Silicon) 클러스터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나. '환경기술 마스터플랜'

'환경기술 마스터플랜'을 통해 환경기술 각 분야의 전문활동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수자원기술, 원료생산성기술, 기후보호기술(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포함)과 같이 구동독 지역의 기업들이 활발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환경분야의 '독일을 위한 하이테크 전략'이 확대되고, 혁신 중심의 연구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 관련 상품무역분야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선도적인 위치가 부각,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신생 벤처기업은 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신생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벤처자본의 지원은 신생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벤처자본시장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의 지원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민간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는 벤처자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벤처자본시장은 장기침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자본에 투자되고 있는 투자액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 독일 전체의 창업자본의 약 1/3은 구동독 지역에서 형성되었으며, 베를린은 구동독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공 투자회사이다. 점점 더 많은 구동독 지자체들이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을 투입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독일의 벤처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이테크 창업기금과 유럽부흥계획/유럽투자기금의 엠브렐라 펀드(ERF/EIF-Dachfonds)

와 유럽부흥계획 창업기금(ERP-Startfonds)을 통해 연방정부는 신생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단계별로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들은 평균적으로 50만 유로의 투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100만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동독 지역의 창업자들은 구서독 창업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자기자본만 확보하면, 하이테크 창업기금으로부터 나머지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다. 2008년 하이테크 창업기금의 규모는 총 2억 7,200만 유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억 4,000만 유로는 연방정부로부터, 나머지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충당되었다. 2004년 하이테크 창업기금이 출범한 이래 총 177개 출자기업 가운데 구동독지역과 베를린의 기업이 49개로, 전체의 1/4을 넘어섰다(2009년 2월 기준).

유럽투자기금과 유럽부흥계획 특별기금으로 마련된 유럽부흥계획/유럽투자기금의 엠브렐러 펀드(총액: 5억 유로, 이 가운데 2억 5,000만 유로가 유럽부흥계획 특별 기금으로 마련됨)는 독일에 투자되는 창업자본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의 신생 벤처캐피털 기금의 자본이 조달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유럽부흥계획/유럽투자기금의 엠브렐러 펀드는 총 투자금 3억 4,000만 유로를 13개 기금에 투자하였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자들의 지원으로 투자된 금액은 15억 유로로, 더 많은 신생 벤처기업이 구동독 지역에 설립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럽부흥계획 창업기금(총액: 2억 5,000만 유로)은 혁신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에 설립기간 중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유럽부흥계획 창업기금은 금융시장의 '선도 투자자(Lead Investor)' 같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11월부터 2008년 말까지 유럽부흥계획 창업기금은 238개 기업에 2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총 투자액의 20%가 구동독 지역에 할당되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신생 혁신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 창업기금의 규모는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연방 정부의 일괄조치(경기부양 패키지 I)들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2억 2,000만 유로로 증액되었다.

3.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역량있는 기업은 구동독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연방정부는 응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은 기업의 경쟁력과 신시장 개척사업, 일자리 창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낙후지역 성장동력을 위한 R&D 지원사업(INNO-WATT)’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2008년말까지 2,1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독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투자된 금액은 총 8억 800만 유로에 달한다.

2008년말 종료된 INNO-WATT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2009년부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외부 산업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은 ‘동부 혁신역량(INNO-KOM-OST)’ 프로그램에 통합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ZIM)’의 일환인 SOLO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책들을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으로 통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력 지원을 위한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4. 기업과 학계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ZIM)’은 2008년 7월 1일 도입되었다. 다양한 기술력을 지원하는 시장지향형 프로그램인 ZIM을 통해 기업(ZIM-SOLO), 기업간 혹은 기업 대 연구기관간 연구협력, 기업 네트워크형성(ZIM-NEMO)의 개별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리스크가 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협력지원 프로그램(ZIM-KOOP)과 개별지원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ZIM-SOLO)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혁신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ZIM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결과를 시장성 있는 상품과 생산공정으로의 신속한 상품화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경기부양 패키지 II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ZIM의 예산이 2009년 9억 유로로 증액되어, 2010년에는 약 7,000개의 구동독 지역 연구개발 계획이 추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 가운데 2억 유로가 구동독 지역 기업에 할당될 예정이다.

가. 협력 지원 프로그램(ZIM-KOOP)

ZIM-KOOP의 일환으로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혁신 역량증진 프로그램(PRO INNO II)’은 계속해서 구동독 지역의 구조조정과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과 지원금의 48%가 구동독 지역에 할당된 점을 감안하면, 본 프로그램이 구동독 지역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2008년 6월 프로그램이 만료될 때까지 2004년부터 3,412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총 3억 5,4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구동독 지역 R&D 프로젝트의 총지원금은 9억 유로를 상회하였으며, 2,348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분기에만 구동독 지역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지원한 업체수가 작년의 42%를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41% 정도가 구동독 지역 기업이었다.

나. 네트워크 경영지원 프로그램(ZIM-NEMO)

‘구동독 지역 네트워크경영(NEMO)’ 지원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기업 네트워크 지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ZIM이 도입됨에 따라 독일전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로서 구동독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온 이 프로그램은 구동독 지역 실정에 맞춰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동독 지역은 기술역량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 시장의 흐름에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외부 경영전문가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동독 지역에서는 200개의 네트워크가 4,300만 유로를 지원받은 바 있다. 총 1,650여개의 중소기업과 14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구동독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승인 절차는 심사위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첫 번째 심사절차를 통해 19개 네트워크가 선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데 10개 네트워크가 구동독 지역에서 나왔다. 지역을 초월한 동서독 네트워크 역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 개별지원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ZIM-SOLO)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ZIM-SOLO 지원으로 통합되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구동독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나, 경기부양 패키지 II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구서독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INNO-WATT를 통해 841개 기업의 2억 4,8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5억 5,000만 유로가 구동독 지역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ZIM-SOLO 지원 프로그램은 독일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4월말까지 35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그 중 45%가 구서독 지역의 사업이었다. 지금까지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은 총 72개이다.

라. '동부 혁신역량(INNO-KOM-Ost)'

중소제조기업과 더불어 외부 산업연구기관은 구동독지역 산업연구분야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는 대기업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들은 산학연계와 혁신 중소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의 선구자로서, 구동독 지역의 혁신력과 경제재건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동부 혁신역량(INNO-KOM-Ost)'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산업연구기관들은 신시장 중심의 연구결과와 상품개발(2008년까지는 INNO-WATT 프로그램이 지원)과 혁신역량 강화[2008년까지는 '산업 리더 연구(Industrielle Vorlaufforschung)' 프로그램이 지원] 부문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외부 산업연구기관의 기술인프라는 1년간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부양 패키지 II의 투자지원대책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다.

마. 산업과 과학의 만남(Wirtschaft trifft Wissenschaft)

구동독 지역 특임관은 60억 유로의 예산을 활용해 '산업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혁신대회를 발족했다. 이 대회는 과학과 산업의 혁신활동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상품화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늘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대회에 참가한 216개 프로젝트 가운데 32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를 통해 10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5. 지역 혁신역량 강화 - 기업지역(Unternehmen Region)

구동독 지역을 위한 혁신구상인 ‘기업지역(Unternehmen Region)’은 현재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 잠재력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과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한다. 연방정부는 연간 9,20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해 이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300여 개의 지역 혁신조직이 지원한 2,000여 개의 계획이 지원되었다. 중소기업과 연구교육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지역’의 철학에는 그러한 측면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혁신역량센터 8곳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신진 과학자 그룹 16개 팀이 구성되었다. 현재 42개의 ‘혁신역량(InnoProfile)’ 구상에서는 각 지역의 경제 전문가들과 신진 과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계와 지역경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엘리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 혁신적 지역성장핵심

‘혁신적 지역성장핵심(WK)’ 프로그램은 시장성 있는 혁신력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연합을 이룬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합 회원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역량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계획은 장기적인 연합전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원들의 경제적 발전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장핵심축으로 활동한 16개 이니셔티브의 매출은 40% 이상, 직원수는 28% 가량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직원수도 1,000명을 넘는다.

2008년에는 3개의 신생 성장핵심팀이 55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다. 이들은 향후 3년간 연방 정부로부터 총 1,3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2007년에 추가된 ‘성장핵심-잠재력(WK-Potenzial)’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과정에 착수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신생 이니셔티브 4개팀의 프로젝트 15개가 ‘성장핵심-잠재력’의 지원을 받았다.

2007년에 도입된 ‘성장핵심-잠재력’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을 원하는 연구기관 한 곳과 최대 5개 지역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4개 이니셔티브 15개 연구 프로젝트가 선발되었다.

사례: 분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코팅(Molecular designed Biological Coating, MBC)(드레스덴)

MBC의 성장핵심은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표면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변이된 바이오 분자 혹은 살아있는 미생물이 기술적인 재료의 표면 위에 올려지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해 기능나노구조, 수자원 기술, 바이오처리기술, 의료기술, 바이오센서릭과 같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6건이 추진 중이다. 뼈와 연골의 이식 조직 개발과 귀금속 사용 감축을 위한 생물학적 변이를 이용한 촉매제, 질병 진단을 위한 체내진단 시스템, 식수 생산을 위한 해독 시스템, 폐수 처리 시스템 등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총 31개의 구동독 지역 성장핵심이 선정되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1년까지 계획된 본 프로그램을 위해 지금까지 총 1억4,80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다.

나. 혁신포럼

혁신포럼 프로그램은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전략적 재편을 꾀하는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개발의 시작 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협력 관계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혁신협회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혁신분야를 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학계를 비롯한 정치·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간의 포럼이다.

사례: AQUALLIANCE - 지속가능한 양식장 조성 (로스톡)

멕클렌부르크(Mecklenburg) 지역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경우 "Dor möten anner Pött bi't Für"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잉어와 송어 양식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멕클렌부르크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하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양식장 조성을 개발 중이다. 본 혁신포럼의 목표는 지속가능하며 자원 보호가 가능한 양식장 개발과 범지역적 역량 센터의 설립이다.

연방정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98개 혁신포럼을 위해 800만 유로를 투입했다. 2008년에는 20개 이상의 혁신포럼 행사가 실시되었다.

다. 시장성 연구팀(ForMaT)

2007년에 시작된 ForMaT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조기에 상품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연구팀들은 포괄적인 잠재력 평가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성을 조기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일명 혁신실험실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장친화적인 상품화 전략을 개발 중이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4,5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했다. 제 2차년도 사업기간인 2008년에는 27개의 ForMaT 계획이 새로이 추가 되었으며, 2009년 초부터는 제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라. 혁신역량(InnoProfile)

2005년에 시작된 ‘혁신역량(InnoProfile)’ 프로그램은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과 대학 및 외부연구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연구결과들의 상업적 응용에 주력하는 신진연구자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혁신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구동독 지역의 엘리트 신진연구자들에게 또다른 미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례: 물류 서비스 - 버스 플랫폼 (라이프치히/할레)

물류분야의 IT 시스템은 업체 간의 정보 시스템이 단일화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개발자들은 물류분야의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그리고 IT 업체들에게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이 기업에 제공하는 경쟁력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차 사업기간에 선발된 구동독 지역의 신진연구자 그룹 42개팀은 이미 연구에 착수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1억 4,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마. 혁신역량센터: 엘리트 육성과 인재 확보(ZIK)

2002년 시작된 혁신역량센터 프로그램 역시 재능있는 인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 연구소와 외부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뛰어난 연구 프로젝트들이 국제 경쟁력과 연구결과의 상품화 능력을 갖춘 미래 지향적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는 8개의 전략계획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사례: ICCAS - 컴퓨터지원 외과 혁신역량센터(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대학의 컴퓨터지원 외과 혁신역량센터(ICCAS)는 수술절차를 분석해 컴퓨터 및 자기공명단층촬영 등을 토대로 3차원 환자모델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 본 개발모델은 정확한 진단과 외과수술 계획의 강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컴퓨터지원 외과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자들의 수술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 14개의 혁신역량센터는 총 1억 5,000만 유로를 2012년(제1차 사업기간)과 2014년(제2차 사업기간)에 지원받게 된다.

VI. 구동독 지역의 대학 및 연구 입지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과 공동으로 대학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

다. 그 결과, 변혁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수많은 연구단지들이 미래성장의 핵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구동독 개별 지역들은 그 사이 각자의 독보적인 특성을 꾸준히 강화해옴으로써 기술특구로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연구기관들을 혁신적으로 네트워킹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보다 신속하게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지원예산 가운데 21% 미만이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데, 구동독 지역이 인구비율로는 독일 전체의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액수라 할 수 있다.

1. 대학협약 및 우수연구 지원

구동독 지역 대학의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서독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구동독 지역과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연구진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동독 지역에 뛰어난 연구품토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연구능력 확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과 지역의 공동 프로그램인 ‘엘리트 육성과 인재 확보 - 혁신역량센터(Exzellenz schaffen - Talente sichern. ZIK)’을 통해, 국제화를 지향하고 기업가적인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시장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는 기관들이 확대되고 있다.

가. 대학협약 2020

‘대학협약 2020(Hochschulpakt 2020)’의 제1축과 더불어, 대학들이 오는 2010년이면 2005년 대비 모두 91,370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대학입학생 1명당 4년간 총 11,000유로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는 2010년까지 모두 약 5억 6,500만 유로를 연방정부가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동독 지역은 연방예산의 15%를 일괄 지원받아,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속에서도 대학의 역량을 유지,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구동독 지역은 구동독 지역의 대학교육 홍보에도 공조하고 있다. 대학협약 2020의 제2축과 더불어 독일연구협회(DFG) 후원 프로그램에 대한 총경비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독일연구협회(DFG)가 후원하는 연구계획은 후원금액의 20%에 이르는 보

조금을 지급받는다. 2008년초부터 이 프로그램의 일괄지원액은 특별연구 분야와 대학졸업 연구진 및 연구센터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새로 승인된 독일 연구협회(DFG) 연구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2007년에서 2010년 기간중 연방정부는 경비지원을 위해 약 7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지원 수단을 통해, 대학의 전략적인 역량과 그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나. 대학 연구시설 건축 및 대형장비 구입

‘연방주의 개혁(Föderalismusreform) I’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학건설 공동과제가 지난 2006년 12월 31일부로 완료된 이후, 각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오는 2013년까지 연간 약 6억 9,530만 유로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는다. 이 가운데 29.2%에 해당하는 2억 300만 유로가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 할당된다(베를린을 제외하면 24.3%, 금액으로는 1억 6,880만 유로).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초지역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내 연구시설 건축 및 대형장비 구입시에 전국적으로 최대 2억 9,8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행된 2008년도 지출금액(2억 6,360만 유로)의 19.4%에 해당하는 5,100만 유로가 구동독 지역에 할당되었다(베를린을 제외하면 16.4%에 해당하는 4,320만 유로).

다. 제도적 연구장려

독일통일과 함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역량있고 매력적인 대학 외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왔다. 기본법 제 91b조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지원한 막스플랑크 협회(Max-Planck-Gesellschaft), 프라운호퍼 협회(Fraunhofer-Gesellschaft), 헬름홀츠 협회(Helmholtz-Gemeinschaft), 라이프니츠 협회(Leibniz-Gemeinschaft)와 같은 기관을 비롯해, 독일연구협회(DFG), 레오폴디나(Leopoldina), 그리고 지식위원회가 지난 한해에만 9억 7,030만 유로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 39억 유로에 이르는 이 기관들에 대한 지원 총액 가운데, 제도적인 장려 차원에서 약 1/4이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 할당되고 있다.

라.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Exzellenzinitiative)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 대학 3곳의 대학원들(예나 대학원, 라이프치히 대학원, 드레스덴 대학원)과 드레스덴 공대의 우수연구 클러스터가 지원을 받고 있다. 베를린 지역에서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있는 2개 우수연구 클러스터와 3개 대학원 이외에 베를린 공대와 베를린 자유대학에 있는 4개 대학원과 4개 우수클러스터, 그리고 1개 미래 이니셔티브(Zukunftsinitiative)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 독일의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목표 역시,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더욱 성공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은 독일 대학 전반에 매우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그 결과는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외에도 각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과 미래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연구협회(DFG)와 지식위원회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2008년 11월 제시한 보고서를 토대로, 경쟁력 지속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시에는 기존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신규 프로그램들 모두에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마. 포츠담(Potsdam)의 군사역사 연구 활동

포츠담에 있는 자원연구소(Ressortforschungseinrichtung)와 군사역사연구청(MGF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츠담에서는 대학내, 외부 기관이 매우 효율적으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사역사연구청(MGFA) 자체가 갖고 있는 커다란 의미와 그 학문적 능력은 지식위원회가 2005/2006년 실시한 평가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07년에 새로 설립된 군사역사연구청(MGFA) 전문도서관도 관련 분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도서관 인프라 재건차원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사역사연구청(MGFA)은 이 외에도 드레스덴에서 연방군 군사역사박물관(Das Militärhistorische Museum)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HG 메르츠(HG Merz), 그리고 홀처-크노블러(Holzer-Knobler)의 유명 건축사무소들이 계획한 공동 구상에 따라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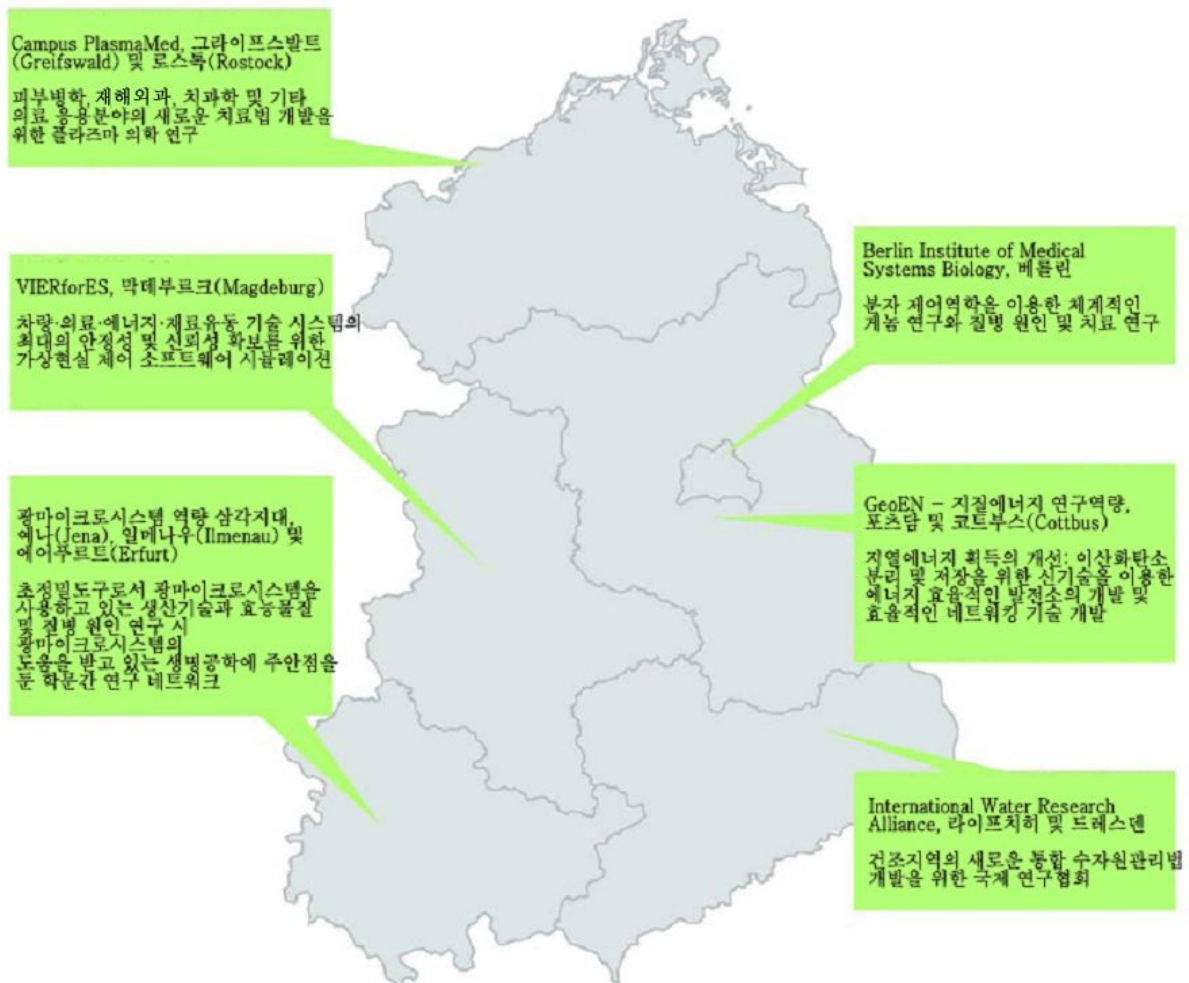
2. 외부 연구기관과 대학의 협력

연구·혁신 패키지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학 외부 연구기관들과 독일연구협회(DFG)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패키지를 계속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책으로서 특히 학문시스템의 네트워킹 개선이 주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기관들간, 또는 연구기관과 대학간에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당수 협력관계에는 구동독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숨어 있다.

가. 구동독 지역의 첨단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구동독 지역 학문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대학 외부의 연구잠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들의 주안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8년에 새로 마련된 2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 ‘구동독 지역의 첨단연구 및 혁신’은 부처간 역량 연계를 통해 혁신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연맹과 대학, 대학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체들을 후원해주고 있다. 이들의 계획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바로 이들의 전략적인 방향설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전문분야별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목표가 뚜렷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단지가 구동독 지역 내에 정착될 것이다.

그림 4: '구동독지역의 첨단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시범 프로젝트



'구동독 지역의 첨단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은 2006년 11월 연방정부와 구동독 지역 경제과학부들이 체결한 '혁신과 성장을 위한 7개 항목' 각서로 시작된 '동부 혁신 대화(DIO: Dialog Innovation Ost)'의 결과물이다. 당초 시범적으로 구상된 프로그램 지원 초기에는 2008년 5월 모두 6개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 2008년 말 구동독 지역 경제과학부들간 협력으로 2차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뛰어난 연구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에는 모두 11개 협력 프로젝트가 외부 심사평가기관에 의해 선정되었다.

나. '전문대학 연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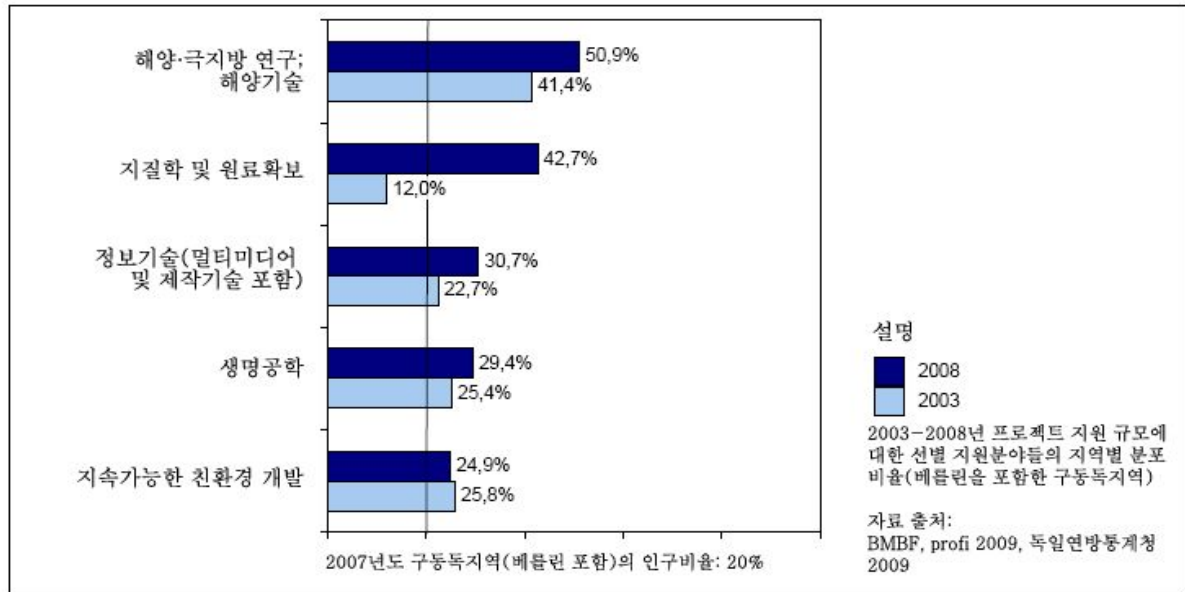
'전문대학 연구'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기업체,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예: 프라운호퍼 협회 연구소(Institute der Fraunhofer-Gesellschaft)] 같은 기타 파트너들 사이의 연구협약을 지원해주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및 경제과학 분야에서 선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지역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어, 구동독 지역 경제의 중추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산업계로부터 수요가 특히 높은 숙련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지원지침을 갖추고 있다. 2008년에는 새 지원 지침 '고령층의 고품질 삶을 위한 사회 혁신(SILQUA)'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파트너(예: 지자체 및 자선 단체)와 함께 고령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컨셉을 개발해, 이를 독일의 보건·요양 정책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지원기간인 2008/2009년도에는 전체 프로그램 내 승인예산 가운데 구동독 지역 대학이 차지한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3. 구동독 지역의 미래기술 사례

구동독 지역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 다양한 기술지향적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로써 그동안 구동독 지역의 특수하고, 독보적인 특징들이 확대될 수 있었고, 이 지역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었다.

특히 해양·극지방 연구(해양기술), 지질학과 원료 확보 및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및 제작기술 포함)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구동독 지역은 그 사이 평균수준을 웃도는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구동독 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위에서 언급한 분야 및 기타 기술분야에서 그 역량을 눈에 띄게 확대해올 수 있었다.

그림 5: 구동독지역 선별 지원분야들의 역동적인 발전상



구동독 지역은 환경·지질연구 분야에 있어 탁월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가령 포츠담 지질연구센터(GFZ)에서는 거의 모든 방면의 지질학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지진학(지진조기경보)과 같은 일부 전문분야들은 구동독 지역의 연구그룹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프라이베르크 광산학교(TU Bergakademie Freiberg)는 에너지·환경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프라이베르크 지역을 규모기술의 중심지이자, 독일 태양광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되도록 만들었다. 또 지속가능한 생산공정은 캄니츠 프라운호퍼 공작기계 및 성형기술 연구소(IWU)의 핵심 연구대상이다.

프로젝트 사례: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포츠담)

2008년 11월 포츠담에 있는 독일 지질연구센터(GFZ)의 주도하에 개발된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주민들은 앞으로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지진해일 당시 23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모두 5,1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시스템은 지진계와 GPS 중계소, 수심 신호장치, 해저 센서 및 측정 부표 등의 수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각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위성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되고, 이곳에서 컴퓨터가 몇분내에 위험정도를 계산해낸다. 이를 토대로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경보를 울릴수가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지중해와 북대서양의 위험 지역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 때까지 이 기술을 더욱 최적화하고 관련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업무가 이뤄질 예정이다.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

2008년 1월 초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가 라이프치히에서 개원했다. 이는 구동독 지역의 적극적인 재생원료 이용을 위한 R&D 분야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학문적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 말이면 그 수가 2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은 연방예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VII.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1. 재생에너지

구동독 지역은 2008년에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독일풍력에너지연구소(DEWI)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독일 전체 풍력에너지시설의 약 36%가 구동독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설치용량은 약 9,800MW로서, 독일 전체 풍력에너지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란덴부르크주는 2008년에 처음으로, 연간 신규설치 용량면에서 니더작센주를 앞질렀고, 작센-안할트주가 3위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 구동독 지역의 풍력에너지 시설 증가속도가 평균이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 조사결과, 구동독 지역은 2007/2008년 풍력에너지업계 전체 일자리의 약 25%(2만~2만5,000명)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산업에 있어서도 구동독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EEG) 및 관련 연구·투자 지원을 토대로 구동독 지역에서는 최근 몇년간 태양광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이뤄졌다. 해외기업들의 참여 또한 높

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됐다. 업계가 발표한 자료와 연방정부를 위해 학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이미 태양광업계 전체 일자리 4만 개 가운데 약 1/3이 구동독 지역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2008년에는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동독 지역의 태양광산업은 중부독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튀링엔주의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과 연구기관들로 이루어진 ‘중부독일 솔라밸리(Solar Valley Mitteldeutschland)’ 계획은 지난해 중반 연방정부의 ‘독일의 5대 첨단 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태양광 및 태양열시설의 총 설치용량에서 구동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작센주 발트폴렌츠(Waldpolenz)에 있는 사용 중지된 군사비행장처럼, 용도변경지역에 설치된 대규모 야외 태양광시설 가운데 일부가 구동독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야외 태양광시설 설치용량 면에서는 작센주가 바이에른 주의 뒤를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구동독 지역이 특히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독일 전체 바이오가스 시설의 약 1/4이 구동독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밖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주요 R&D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프라이베르크 바이오매스 액화시험시설(die Biomass to liquid-Demonstrationsanlage in Freiberg)과 2008년 초 라이프치히에 설립된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는 그 동안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핵심적인 국립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원한 지열 프로젝트 및 브란덴부르크주 그로스-쇠네베크(Groß-Schönebeck)에 위치한 포츠담 독일지질연구센터(GFZ)의 ‘현지(In-situ)’ 시험실을 토대로, 독일 북부지방의 지열에너지 이용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 마련되었다. 독일지질연구센터(GFZ)는 앞으로 지열프로젝트의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학문적인 시도를 담당할 예정이다.

2.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기술

대기권내 높은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따라서 CO₂ 배출을 크게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 기후보호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석탄은 오늘날 중요한 원료가 되고 있다(2008년에는 전기생산의 약 44%를 차지). 독일 갈탄채굴의 약 44%는 구동독 지역 석탄채굴장에서 이뤄지고 있다(2008년: 독일 전체 갈탄채굴량 1억 7,500만 톤).

석탄 이용시 CO₂ 배출 저감을 위한 한 중요한 기초는 바로 O₂를 발전소에서 분리해내 지하 암석층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다. CCS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시범 시설에서 먼저 시험을 거치게 된다. 운영결과가 성공적으로 판단되면 CCS 기술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8년 9월 세계 최초의 CO₂ 분리 시험시설이 브란덴부르크주 슈바르체 펌페(Schwarze Pumpe) 산업단지에서 가동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산소연료 공정에 대한 테스트도 병행된다. 30MW 열용량의 이 프로젝트는 2년간의 공사 끝에 실현되었다. 먼저, 석탄을 순산소와 재순환된 배기가스로 연소한다. 이 때 생성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해, 결국에는 거의 순수한 CO₂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이어서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춤으로써 CO₂는 액체와 유사한 상태가 되고, 이로써 운송이 가능해 지하의 암석층에 저장할 수 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는 이런 방법으로 90% 이상 분리돼 지하에 저장 가능하다. 오는 2015년이면 슈프레-나이세 지역(Spre-Neiße-Kreis)의 얀슈발데(Jänschwalde)에 500MW 용량의 첫 시범발전소가 설립된다. CO₂ 저장지역 후보지도 알트마르크(Altmark) 등 구동독 지역에 있다. 현재 이곳의 대규모 천연가스 부지(현재 이곳은 매장량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대한 CO₂ 저장 적합성을 검토 중이다.

CCS 기술을 효과적으로 시험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훗날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이 기술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2008년 4월 연방내각이 결의하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전달된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 운반 파이프 및 지하 심층부 암석층내 이산화탄소 영구저장시설의 조사, 설립, 운영 및 가동중지를 위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 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지질학·원료청과 연방환경청이 독일의 저장시설 잠재력의 학문적 분석과 평가를 위해 광범위한 사전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주요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산업계와 각 주정부의 인허가 당국에 제공될 것이다.

VIII.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및 자연보호

1.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가.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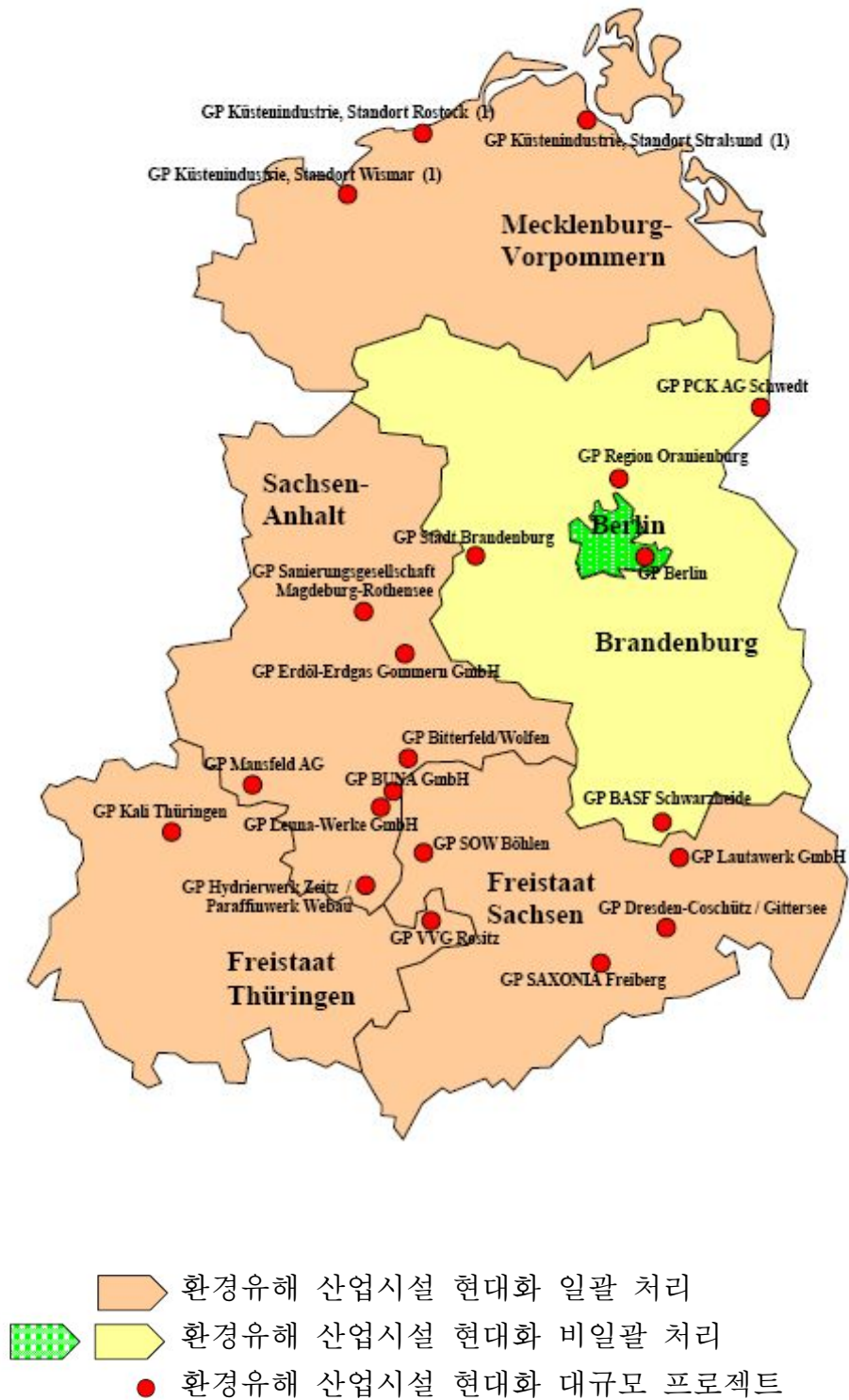
지난 1992년 12월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는 구동독 지역의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신탁관리청에 속했던 기업들의 유해시설 제거비용을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가 각각 6 대 4의 비율로 분담한다. 다만 특별히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한다(연방정부 75%, 주정부 25%).

연방정부는 1999년 튀링엔주, 2001년 작센-안할트주, 2003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2008년 작센주와 각각 환경유해시설 현대화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으로 주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되었다.

현재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 지역에서 유해시설 현대화 작업이 당초 계획대로 개별대책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가 비용분담에 참여한 것은 주요 산업입지를 보전하고,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산업에 불필요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환경유해 산업시설 현대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지역



나. 갈탄지역 재개발

구동독 지역의 넓은 갈탄광산과 갈탄정제소는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갈탄 오염지역의 처리작업은 1989년 평화혁명 직후 연방정부의 고용창출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3년부터는 연방정부와 갈탄생산지 주정부간에 체결된 환경유해시설 재개발에 관한 행정협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1991년에서 2008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채굴이 중단된 노천광의 안전 확보와 재활용에 모두 약 86억 유로를 투입하였다. 특히 비탈지 낙석방지, 폐광입구 폐쇄, 오염된 토지의 안전한 처리, 가동이 중단된 석탄공장 및 발전소의 안전한 철거 등의 작업이 95% 정도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 진행중인 2008년부터 2012년의 사업기간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갈탄생산지 재개발을 위해 약 10억 유로를 책정해 놓았으며, 연방정부와 갈탄생산지 주정부들은 광업법에 따라 약 6억 3,000만 유로 규모의 비용마련을 위해 각각 75%와 25%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또 노천광 지역에 지하수가 고이는 데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갈탄생산지를 재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약 2억 6,000만 유로의 예산을 절반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갈탄생산지 주정부들은 이른바 후속활용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갈탄지역 재개발사업의 총괄책임은 연방정부 산하 라우지츠 중부독일 탄광관리 협회(LMBV)에 있다. 이 협회는 현재 약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협회로 2009년 총 78명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자리를 제공하는 등 라우지츠(Lausitz)와 중부독일 갈탄생산지내에서 직업훈련을 선도하고 있다.

갈탄생산지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물관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갱구 지하수의 흐름을 재개하고 환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관건이다.

앞으로도 갈탄지역 재개발은 이 지역의 인력고용에 기여할 것이다. 갈탄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라우지츠와 중부독일 지역 광업지대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008년 기준 약 3,100개에 이르렀다.

LMBV의 지속적인 갈탄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라우지츠와 중부독일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도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이 사업의 이득을 차츰 몸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갈탄지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독일 산업계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 방사능 유출시설 폐기

연방정부 산하 비스무트 유한회사(Wismut GmbH)는 정부의 업무 위임으로 지난 1991년부터 작센주와 튀링엔주에 소재한 구동독 지역 우라늄 탄광시설을 철거, 재개발해오고 있다. 방사능 물질과 기타 유독성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지와 시설의 재개발 및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이곳 주민들에게 다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연방정부가 단독 지원한다(현 시점에서 예산 규모가 모두 64억 유로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스무트 유한회사는 재개발사업을 80% 정도 완료한 상태이며,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약 51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과거 탄광지역이었던 곳의 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재개발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재개발 사업은 6~8년 후면 상당 부분이 마무리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수질관리, 부지 관리 및 환경감시 등 다시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작센 주 바트 슬레마(Bad Schlema) 근처
할데(Halde)의 재개발 진행상황



튀링엔 주 룬네부르크(Ronneburg)
근처 구 노천광의 재개발 후 모습

비스무트 유한회사는 독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회사는 현재 약 1,600명을 고용하고 있고, 약 250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기업에 매년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비스무트 유한회사의 재개발 노하우는 자회사인 '비스무트 환경기술 유한회사(WISUTEC)'가 관리, 상품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가 체결한 이른바 '비스무트 구(舊) 입지' 재개발에 관한 행정협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7,800만 유로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지역내 우라늄탄광 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모두 3,900만 유로가 투입되어 약 150개 처리대상에 대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라. 그라이프스발트 및 라인스베르크의 구(舊) 원자력발전소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Greifswald/Lubmin)과 라인스베르크(Rheinsberg)에는 가동이 중단된 소련형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이 발전소들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 중인데, 2008년에도 계획대로 진척되었다. 연방정부 산하 북부에너지유한회사(EWN)는 이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서방선진 8개국 협정에 따라 2003년 가을부터 착수한 러시아 핵잠수함 폐기사업에 대표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원자력발전소 철거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과거 원자력발전소로 유명했던 그라이프스발트의 부지 용도변경 계획도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산업항구가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항구의 깊이를 7m까지 깊게 하는 작업도 이미 완료되었다. 항만조합이 실소유주로 항구 사용허가를 모두 받은 상태이다. 또 2004년에는 항구 진입부에 1.8M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는 유채유 생산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해안과 가까운 입지조건 때문에 이 지역부지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철강부품 및 기계 생산업체들도 이곳에서의 생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덴마크 업체는 이곳에 석탄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발트해 천연가스 파이프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가스압축소도 세워질 예정이다.

마. 연방군 토지 재개발

‘연방군 토지 재개발’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방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군 소유 부지 가운데 낙후된 곳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필요에 따라 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동독 지역내 황폐화된 부지의 상당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되었다. 이에 비해 구서독 지역 내 황폐화된 부지는 상당 부분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직 위험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자연보호

가. 국가자연유산의 보호 / 그린벨트

국가자연유산의 보호는 제 16차 입법기 프로그램중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연방정부는 전국에 있는 연방정부 소유의 대표적인 자연보호지역 12만5,000헥타르를 연방재단에 무상제공하거나 주정부에 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러 자연보호단체와 기타 재단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로써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연방정부 소유 지역으로는 특히 독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연방정부의 대규모 자연보호 프로젝트 지역, ‘자연 2000(Natura 2000)’ 지역, 그린벨트 구역, 구 국경수비대 지역 등이 있다. 그린벨트는 과거 수십년간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지역으로,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이 매우 다양해 생태계의 중요한 보고라 할 수 있다.

먼저 100,000헥타르에 대해서는 이전대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상태이다. 연방정부와 독일환경재단(DBU)은 2008년 5월 13일 모두 46,000헥타르에 이르는 부지에 대한 이전 계약에 서명했다. 2009년 2월 16일에는 처음으로 국가자연유산을 DBU에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데어 클라이네 야스문더 보덴(Der Kleine Jasmunder Boden)에 있는 1,889헥타르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또 2008년 11월 9일에는 그린벨트 부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가 이뤄짐으로써 3,863헥타르가 튀링엔 주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이는 그린벨트 총면적의 55%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장기적 차원의 국가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이미 약 50,000헥타르에 이르는 부지

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다.

한편, 나머지 50,000헥타르에 대해서도 주정부나 협회 또는 기타 재단에 무상 제공하기 위한 기본여건이 갖춰진 상태이며, 다른 25,000헥타르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

나. 자연보호 프로젝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자연보호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는 ‘작센-안할트 드뤼밍(Drömling)’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1992년에서 2003년 기간에 모두 1,280만 유로의 연방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2012년까지 다시 260만 유로의 추가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드뤼밍 지역의 수자원 안정화와 수자원 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밖에도 친환경 상하수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광범위한 목초지를 조성하며, 산림을 개발하는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잘츠베델(Salzwede)과 뵘르데(Börde) 지역, 그리고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독일지부가 참여하는 공동연맹 ‘작센-안할트 드뤼밍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의해 실시된다. 총 소요경비는 42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동연맹이 비용의 11%를 부담하고, 작센-안할트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21%와 68%를 책임진다.

다. 연방군 토지에서의 자연보호 과제

자연보호와 자연경관 관리는 사회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 2002년 발효된 ‘독일내 군훈련장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연방군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주정부들은 연방군 훈련장 전체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을 ‘동식물 서식지와 조류보호지역’ 및 ‘자연 2000’ 보호지역으로 등록하였다. 이 지역들을 이용하고 관리할 의무는 연방군에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특별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연방군은 각 주정부들과 체결한 ‘자연 및 풍경의 보호를 위한 합의사항’을 토대로, 지역의 관심에 부합하여 관리 계획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방군은 또 과거 군사용도로 집중이용된 훈련장, 특히 1991년 이전에 구동독 지역 국가인민군과 구소련 서부군단(Westgruppe)이 훈련하던 구동독 지역 내의 훈련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함

으로써 환경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였다. 한편, 독일환경재단(Die Deutsche Bundesstiftung Umwelt)이 2008년 5월 13일자 기본합의를 통해 인수받은 국가자연유산 지역의 상당 부분은 과거 군사용도로 활용되던 부지로서, 면적 면이나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IX. 교통 인프라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능성을 갖춘 주택시장과 쾌적한 도시주거문화를 위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의 경제와 지역주민의 품격 높은 삶을 위한 환경을 개선시킨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건설·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를 1998년 약 45%에서 2008년에는 약 56%로 증액하였다. 또 인구 및 국토면적에 비교하여 구서독 지역보다 구동독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에서 2008년까지 연방철도, 도로, 수로에 대해 지역사회교통사업재정보조법(GVFG)을 토대로 모두 1,970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구동독 지역이 720억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전체 투자액의 약 3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구동독 지역의 인구는 독일 전체의 약 20%, 면적은 전체의 약 34% 차지).

1.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

독일 동서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은 바로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이다. 390억 유로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투자프로그램에는 9개 철도 프로젝트와 7개 고속도로 프로젝트, 그리고 1개 수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991년~2008년 말까지 약 286억 유로가 투자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철도 분야 약 131억 유로
- 도로 분야 약 141억 유로
- 수로 분야 약 14억 유로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미 6개 프로젝트가 운영에 들어갔다. 또 뉘른베르

크-베를린 구간에 대한 VDE 8번 프로젝트 가운데, 할레/라이프치히 - 베를린 (VDE 8.3번 프로젝트)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며, 신규간 (VDE 8.1번 및 8.2번 프로젝트)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VDE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008년말까지 이미 여러 구간이 개통되었다. 2008년말 기준으로 1,820km 이상의 구간이 이미 도로교통에 사용되고 있으며, 약 80km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VDE 전체 도로 프로젝트의 약 95%가 현실화되었거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44번 고속도로(프로젝트 15번의 일부 구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VDE 도로망에 대해 201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의 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의 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은 지역개발을 위해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유럽지역개발기금은 유럽연합 역내의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 교통인프라 실행 프로그램은 과거 '제 1 목표 지역'으로 분류됐던 독일의 경제평준화 지역 내에 위치한 연방교통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 경제평준화 지역은 경제능력 지표에 따라 유럽연합이 일괄적으로 지정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구동독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이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 덕분에 2000~2006년 처음으로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예산을 연방교통로 확대·구축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 예산 편성과정에 연방정부도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주정부와 민간 부문도 투자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의 지원은 프로젝트 신청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총경비 5,000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미리 프로젝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어, 예산집행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주들의 경제성장 노력을 보조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광역 교통망 분야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표 실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범유럽교통망(TEN)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로써 입지여건들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며,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교통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교통학적 측면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다. 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정해진다.

가. '2000년-2006년 독일 제 1 목표지역에 대한 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기능 프로그램(OP)'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베를린을 제외한 독일의 제 1 목표지역, 즉 브란덴부르크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엔주였다.

약 32억 유로 규모의 이 프로그램으로, 구동독 지역은 지난 2000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방철도, 연방 광역도로, 연방수로 및 교통텔레매틱스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으로부터 모두 16억 6,10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공동책임지고 있는 연방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나. '2007~2013년 연방정부 유럽지역개발기금 기능 프로그램 (OP Verkehr EFRE Bund)'

이 프로그램 대상 지역은 유럽연합이 지정한 독일내 경제평준화지역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엔주, 그리고 니더작센주(뤼네부르크 지역만 해당)가 해당되며, 브란덴부르크주 남서부와 뤼네부르크, 라이프치히, 그리고 할레는 이른바 졸업예정지역('phasing out')으로 분류돼, 유럽연합으로부터 과도기 지원만 받는다.

약 23억 유로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높은 지원율로 인해 연방철도와 광역도로, 수로에 필요한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예산은 약 15억 2,000만 유로에 달하는데, 이 가운

데 순수하게 구동독 지역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약 14억 3,000만 유로나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범유럽 교통망 및 기타 주요 광역교통망 확대
- 기존의 주요 산업입지들에 대한 교통연계 개선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교통중심 이동 및 효율 개선

상기 목표들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잠재요인으로서 특히 구동독 지역의 지역간 교통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3. 유럽연합 동부확대 프로젝트

2008년 9월 바이에른과 체코가 주도한 드레스덴/뉘른베르크에서부터 프라하와 부다페스트를 거쳐 이스탄불에 이르는 '범유럽 회랑계획 4(Pan-European Corridor IV)'(암베르크 동부 인터체인지와 오버팔처 발트 교차로 사이의 A6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공사도 완료되었다. 이로써 국경을 초월하는 모든 연방고속도로들이 보다 기능적으로 연계되게 되었다.

철도연결의 경우에는 2008년 오데르강변의 프랑크푸르트 근처 오데르다리 신축이 완공됨으로써, 베를린에서 시작해 바르샤바와 모스크바를 거쳐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이르는 범유럽 회랑계획 2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금까지 이미 실현되었거나 진행중인 모든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에 있다[범유럽교통망(TEN) 보조금 또는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을 통해].

가. 동부 확대 연속선상의 교통통합

유럽연합의 확대와 더불어, 독일은 성장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이를 위해 일찍이 독일동부의 교통 인프라 확대를 서두르고 동구권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

연방교통로계획(BVWP 2003)을 기초로 한 '유럽연합 동부 확대 프로젝트'의 일

부로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유효한 연방정부 교통인프라 투자기본계획 수립시 이 프로젝트를 특별히 중요하게 감안하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해 폴란드와 체코까지 이어지는 연방도로 연계 프로젝트의 모든 구간은 이미 완공되었다. 독일 드레스덴과 체코 국경지대 구간의 A17번 고속도로와 독일 슈타데(Stade)와 폴란드 슈체친(Stettin) 구간의 A20번 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능성 있는 철도연계를 위한 베를린-바르샤바 및 베를린-프라하 연계 프로젝트 가운데 독일내 해당구간도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며, 상당 부분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다. 베를린-오데르 강변 프랑크푸르트-독일/폴란드 국경지대로 이어지는 확장구간 역시 2008년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가장 중요한 철도 연결로 일컬어지고 있는 오데르 다리 신축과 더불어 개통되었다.

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BBI)

2006년 3월 16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로 마침내 베를린-쇠네펠트 공항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단일 국제공항(BBI)으로 확장하기 위한 여건이 구비되면서, 2006년 9월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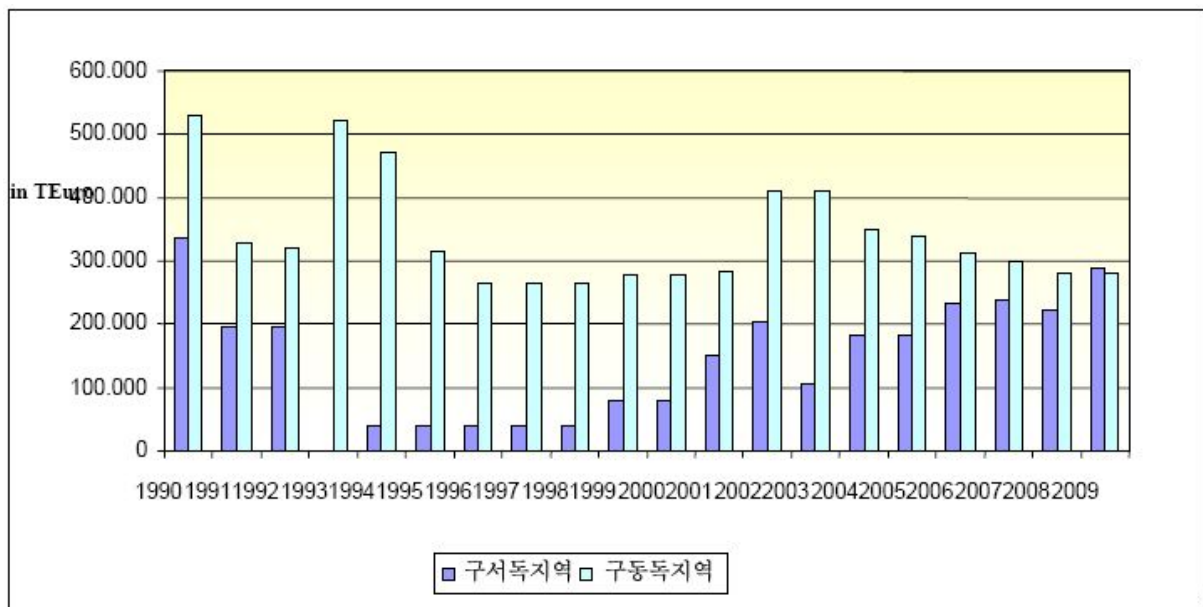
이 공항의 운영개시는 201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구동독 지역 최대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BBI의 항공화물 처리 규모와 효율이 증대, 역량있는 공항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점점 증가하고 있는 승객들을 다른 국제공항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경제입지를 강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X. 도시개발

1. 도시건설 장려

연방정부는 지난 90년대초부터 구동독 지역의 주정부와 지자체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는 도시건설을 장려함으로써 여러 정책분야들, 특히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사회정책, 인프라정책 및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 지역적으로 조합시키는 '다차원적 도구'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의한 도시건설장려 기본프로그램에 따라 모두 5억 7,000만 유로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2억 8,040만 유로를 구동독 지역이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체 금액의 약 49%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 투자협약의 비율에 상응해 구동독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구서독 지역은 과거 몇년간 절대적인 지원고려대상이 되어 연방예산 규모면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처음으로 도시개발 장려를 위한 연방예산이 구동독 지역보다 구서독 지역에 더 많이 할당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구비율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구동독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1990~2009년 도시건설 장려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투자패키지 제외)



가. 활기찬 도심

지난 1998년부터 도시건설 장려차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도심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는 주정부와 함께 2008년도 프로그램부터 이러한 내용을 도시건설 지원 행정협정의 역점사항으로 반영시켰다. ‘활기찬 도심’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거나 상실한 도시 및 지구중심부들이 앞으로 매력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거와 노동, 생활 및 문화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07 개정 도시건축법은 이 프로그램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인 지원도구가 되었다.

2009년도분 예산은 4,300만 유로에 이르며, 이 가운데 950만 유로가 구동독 지역에 할당된다.

2. 구동독 지역 도시정비 프로그램

2002년 기준 구동독 지역의 빈집이 약 100만채에 이를 정도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연방정부는 2002년에 구동독 지역 도시정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주택의 과잉공급을 줄이고(‘철거’), 도시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것(‘가치 제고’)이 주요 목표였다.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두 400개 지자체(이는 주민수 10,000명 이상 지역의 구동독 지역 군(Kreis)의 3/4 및 포츠담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 해당)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20개 이상의 도시정비 지역에 대해 총 25억 유로를 지원하며, 이 가운데 11억 유로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2009년도에는 ‘성장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 패키지를 토대로 연방정부 프로그램 예산이 약 1억 2,100만 유로로 늘어났다. 구동독 지역 도시정비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구동독 지역 도시개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2002~2009년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시점이면, 구동독 지역 도시정비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빈집 철거작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8년말까지 주택 24만채 이상이 철거됐고,

이로써 2009년까지의 목표분 35만 채의 2/3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 지역가치의 제고는 도시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구역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구 주거단지에는 이러한 소기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도심의 가치제고와 보다 나은 도심권이라는 동부 도시정비의 제 2축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 도심의 모습을 특징짓는 건축자재도 그 의미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편, 도시건설 지원을 위한 행정협정을 토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심의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1919년 이전에 설립된,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각인시키고 있는 오래된 건물과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2008년 이후 모두 취소되었다. 이와 동시에 건물안전 대책으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이 5%에서 15%로 크게 늘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 예산 중 최소 절반을 도시가치 제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구건물 보수를 지원하는 구(舊)채무에 관한 새 규정을 통해서도 보완되고 있다(항목 X.5 참조).

2008년 6월 종료된 동부 도시정비 프로그램의 학문적 평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도심의 가치제고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철거와 가치 제고의 전략적인 연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이 평가결과는 2008년 가을에 공개되었다(www.stadtumbau-ost.info 참조).

3. 도시건축학적 문화재 보호

지난 수십년간 구동독이 역사적인 도시 및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해온 탓에, 통일 후 구동독 지역과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건축학적 문화유산들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입법부는 구동독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자금으로 모두 8,500만 유로를 편성하였다. 도시건축학적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도심에 있는 건물과 양상블 및 기타 건축시설의 안전확보와 유지, 리모델링을 비롯해, 역사적·예술적·도시건축학적으로 중요한 도로와 광장의 유지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역사적인 고도(古都)와 역사적인 도시구역의 도시건축학적·문화적 관리 및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도시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역사적인 도시들을 되살리는 데 이 프로그램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2009년도 프로그램이 구서독 지역에도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가. 세계유산 보호 지원

연방정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독일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중 총 1억 5,0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세계유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며, 지자체의 세계유산관리 노력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건축문화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4. 사회복지도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도시’ 사업의 목표는 도시 재건축을 넘어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포괄적 도시개발정책을 통해 도시 소외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소외지역의 안정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복지도시 사업이 착수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30개 지역에서 5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약 7억 6,000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투입되었다. 2009년에는 추가로 1억 5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도시’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을 넘어 타분야와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도시개발사업을 경제, 사회복지, 건강, 청소년, 교육정책과 통합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도시 지원분야 가운데 저소득층 청소년과 장기실업자 고용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2008년에는 유럽사회기금 연방프로그램인 ‘사회복지도시 - 소외지역을 위한 교육, 경제, 고용(BIWAQ)’이 발족되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 1억 2,400만 유로와 연방기금 6,0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5. 구(舊)채무 청산규정

2000년 8월 28일 통과된 구(舊)채무법 개정안은 구동독 지역의 주택공동화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강제구제 규정(AHG 6a)을 담고 있다.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이 규정의 목표는 주택경기와 주택시장의 안정화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공한 주택의 최소 15%가 빈집이어서 존립이 위태로운 건설업체가 재건은행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철거주택 1평방미터당 최고 77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철거는 시 전체의 건축적 요소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부분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주택공동화 비율이 15%를 넘은 총 325개의 주택건설업체가 이 규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빈집 철거비용은 구동독지역 도시정비 프로그램의 일괄철거비로 지원되며,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땅에 대한 채무탕감은 정상참작구제책(Härtefallregelung)에 따라 이뤄진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 채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약 8억2,000만 유로가 건설업체에 지원되었다(2009년 3월 31일 기준).

강제구제규정과 도시개발사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이 규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구채무청산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주택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비용을 주택보수사업에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채무청산규정의 개정으로 2013년까지 주택철거를 하는 건설업체는 철거비용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협약 및 미래투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투자협약을 통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 유치원, 스포츠 시설 및 기타 사회인프라의 에너지효율화 보수공사를 위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해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본 투자협약은 특히 실업과 주민감소, 외국인 주민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도시와 지역이 중점지원 대상이다.

2009년 연방정부는 투자협약 지원금을 3억 유로로 확대해 지원조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가운데 6,640만 유로가 구동독지역에 편성되었다. 2009년부터는 재정난을 겪고있는 자치단체에는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 참여비율은 1/3에서 10%로 낮아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45%씩 공사비용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투자협약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정부 역시 공사비용의 75%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2차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해 마련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투자법'으로 연방정부는 2009년과 2010년 자치단체와 주정부의 추가 공공투자를 위해 1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했다. 주정부와 자치단체는 최소 33억 유로 이상을 공동지원하게 된다. 최소 70% 이상의 연방예산이 지역 투자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중점 투자대상은 에너지효율화 보수공사가 시급한 교육시설이며, 기타 보수·현대화 대책들도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지원예산 가운데 65%인 65억 유로가 이러한 교육인프라 부문에 투자될 예정이다. 나머지 35%인 35억 유로는 병원, 도시 및 농촌 인프라, 통신기술, 소음방지 시설과 같은 기타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협약 예산의 절반은 미래투자법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특히 구동독 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대규모 주택단지 에너지 효율화 보수공사' 대회

연방정부는 2009년 '통합 도시구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에너지 효율화 보수공사' 대회를 통해 주거지역의 에너지 효율화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대규모 주택단지에는 약 5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240만개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보수공사 사업은 CO₂ 건물에너지효율사업의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 '통합 도시구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에너지 효율 보수공사' 대회는 주택건물 1,000채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위한 에너지 효율, 주택경제, 도시건축, 인구통계학적 변화측면의 통합계획을 지원하게 된다. 중점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난방공급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도시재건축, 사회복지도시, 에너지 절약, 기후보호를 위한 계획을 통합해 대규모 주택단지 보수공사

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이다.

8. 주거보조비

주거보조비는 이주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주거보조비를 수령하는 가구는 구동독 지역이 3%로 1.5%인 구서독 지역보다 높다. 주거보조비 지원으로 구동독 지역의 가구당 주거비용은 2006년 32.1%로 줄어들어, 32.9%인 구서독 지역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주거보조비가 변경돼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는 약 8%,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는 약 50% 상승했다. 사회법전 II의 실업자를 위한 기초생활지원금과 사회법전 XII의 고령자와 취업약자를 위한 기초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비와 난방비를 동시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오지 않은 주거보조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2005년 1월 1일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4차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2005년 주거보조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는 81만 1,000여 가구로,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부터 주거보조비 수령가구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말에는 58만 가구만이 주거보조비를 수령하였다. 2008년에는 56만 가구가 주거보조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보조비 수령 가구수가 감소한 이유는 2005년부터 주거보조비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기초생활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1일 발표된 주거보조비 개혁을 통해 주거보조비가 대폭 상승해 주거보조비는 실업보조금 II와 비교해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5억2,000만 유로의 연방예산과 주정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새로 도입된 부문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를 고려한 난방비 부문이다. 주거보조비 산정을 위한 기준월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 제외 월세와 가족 구성원수를 고려한 난방비(예: 가구 구성원이 1명일 경우에는 24유로, 2명일 경우에는 31유로 지급)를 통합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난방비의 30%가 주거보조비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 난방비 지원은 난방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의 4개 건축연도등급은 신축 건물 수준으로 통합되었으며, 최대 월세 지원금은 10%, 표 수치는 8%로 증가하였다. 추가 보조금은 2008년 10월 1일부로 주거보조비 수령자들에게 일괄지급 형태

로 소급 적용된다.

주거보조비 개혁을 통해 약 80만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양육 보조금의 개혁으로 주거보조비는 자녀를 둔 실업보조금 II 수령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보조금 시스템이 되었다.

구서독 지역보다 구동독 지역에 주거보조비를 수령받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주거보조비 개정안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가구수 역시 구동독 지역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XI. 농촌지역의 비전 제시

농촌지역은 성장과 고용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앞으로 농촌개발 지원은 지역의 요구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지역 스스로 개발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특히 인구변화의 문제에 직면한 구동독의 농촌지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제, 사회복지, 환경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 분야의 개선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부처간 협력팀인 '농촌 지역'이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추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안된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지역 경제구조 개선[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 (GRW)의 일환]
-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 개선과 농촌 인프라 발전[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 (GAK)의 일환]
- 기초생활 보장 및 교통시설 확충
- 도시와 지자체간의 파트너십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발전을 위한 모든 참여자와의 토론회를 집중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 발전' 미래포럼이 세계녹색주간과 함께 연례행사로 개최 될 예정이다.

1. 농업 발전

농업은 구동독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약 30,100개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56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경지를 경작하고 있으며(표 7 참조), 이 중 절반이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경작하는 면적의 비율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평균 경작규모는 약 197헥타르이다. 구동독 지역의 소작지 비중은 79%로 여전히 구서독 지역보다 높다.

기업체 수는 2008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 역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농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자 가격의 인하와 우유를 비롯한 농산품 수요감소, 수출감소로 인해 2008/2009년도 사업장의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기업 근로자수는 모두 약 15만 9,400명으로 추산된다. 100헥타르당 노동자수는 1.7명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가축 사육업장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구동독 지역의 조류 및 돼지수는 증가했지만, 구서독 지역의 가축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구동독 지역의 생산량은 젖소 한 마리당 연간 평균 8,100kg을 기록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근로자 1인당 평균수입이 구서독 지역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잘 말해주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는 구동독 지역의 생산 규모(면적, 노동인구 당 가축 사육 수)가 구서독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표 7: 구동독 지역의 농업구조 변화 주요 수치

특징	구동독 지역		
	1991	2003	2007
	기준치		
기업 종류			
개인사업장 1)	17,222	23,544	23,412
개인조합	.	3,236	3,235
법인	3,941.0	3,302	3,433
총 사업장 면적	21,663	30,082	30,080
기업 종류별 면적			
개인사업장 1)	456.6	1,380.4	1,467.3
개인조합		1,249.3	1,245.4
법인	4,825.7	2,922.4	2,852.1
총 사업장 면적	5,282.3	5,552.2	5,564.8
경작규모 등급에 따른 기업 수			
2~10 ha	5,886	9,325	9,412
10~20 ha	2,068	3,705	3,725
20~50 ha	1,924	3,646	3,687
50~100 ha	1,066	2,419	2,350
100ha 이상	4,015	8,841	9,033
총 기업 수 2)	14,959	27,936	28,207
100~200 ha	843	2,644	2,636
200~500 ha	628	3,086	6,624
500~1,000 ha	631	1,574	1,902
1,000 ha 이상	1,908	1,537	1,507
2헥타르 이상 기업 면적	5,170.7	5,550.9	5,563.8
평균 면적 2)	345.7	198.7	197.2
소작 기업 3)			
소작 기업 수 (단위: 1,000개)	11.0	20.9	20.4
총 경작지 중 소작지 비율	77.5	85.1	78.9
노동력 2)			
노동자 수 (단위: 1,000명)	361.9	166.8	159.4
기업 소속 노동자 수 (단위: 1,000명) 4)	312.4	104.9	94.9
100헥타르 당 노동자 수	5.9	1.9	1.7
가축 수 (단위: 1,000마리)			
소 5)	4,947	2,432	2,360
돼지 5)	8,783	3,629	3,840
조류 6)	32,824	36,967	39,516
가축 소유율 (단위: 100헥타르)	78.0	44.9	59.4
소 한 마리 당 우유 생산량 (kg/year)	4,320	7,547	8,147

비고: 통계방법상의 변화로 1991년 자료와 이후 자료의 비교는 제한적임을 밝힌다.

1) 1991년: 개인조합 포함 개인사업장

2) 2헥타르 이상 경작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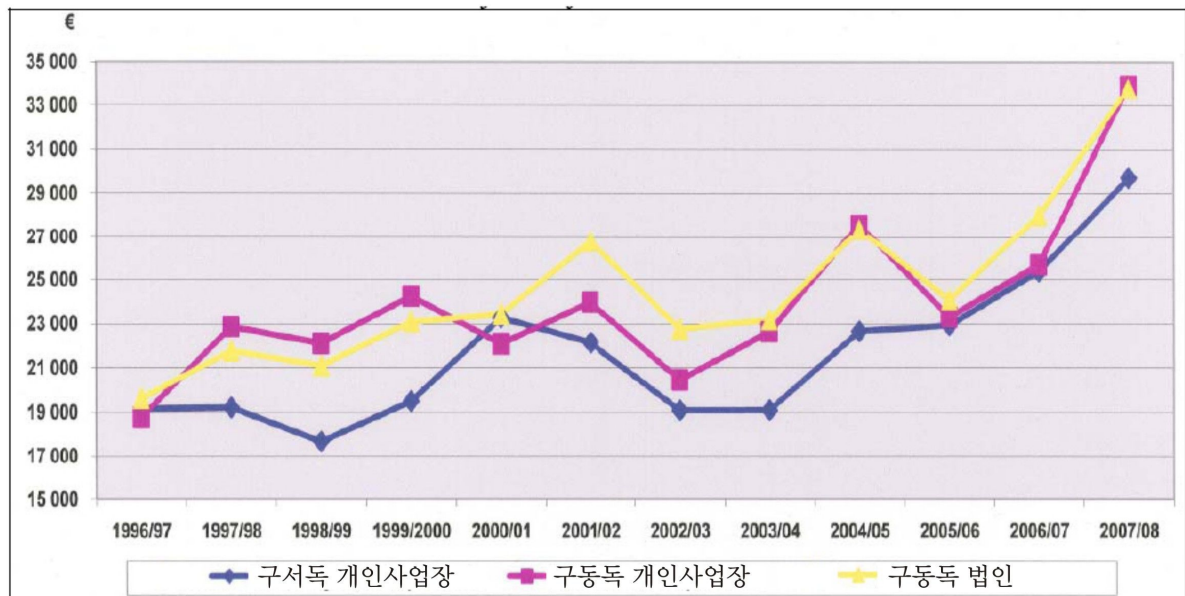
3) 대략적 통계치로서, 정확한 기업 수는 표 상위 부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03년 이후부터는 달라진 통계방법 적용.

5) 2007년: 2008년 5월 가축 수 통계

6) 2007년: 2007년 5월 가축 수 통계

그림 7: 농촌기업 수입 변화 - 수입/연간이윤+인건비



구동독의 농산물 수출은 최근 몇년간 눈부신 성장세를 거듭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8% 성장했다(구서독 34% 성장). 이를 통해 독일 농산물 수출에서 구동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3.5%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추세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의 농업분야는 구조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7년 식료품 생산업체의 수출량은 12%로 구서독 지역의 수출량(17.4%)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농업과 농촌지역 지원대책

유럽연합의 직접지원금은 구동독 지역 농업분야의 수입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독일에 배분되고 있는 직접지원금액은 17억 유로로 이 가운데 1/3이 구동독 지역에 할당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이른바 '건전성 검토')을 통해 농촌지역 지원대책을 위한 5,000유로 이상의 비과세 직접지급 축소가 현재의 5%에서 10%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30만 유로 이상의 직접지급은 2009년 이후 4% 추가 축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구동독 지역의 농촌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추가로 결정된 직접지급의 축소로 남게 될 예산은 유럽

연합 농업지원의 2축(우유 생산량 확대,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자원관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농촌지역 발전지원을 위한 이른바 ‘ELER 규정(유럽연합 농촌지역개발규정)’은 농업과 산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 농업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된 91억 유로의 유럽연합 기금 중 구동독 지역에 할당된 비율은 54%이다. 이는 각 지역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이를 기준으로 6억 3,000만 유로가 지급된다. 2010년부터는 연간 예산배정액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 개선조치에 투입되고 있는 비용은 61억 유로로 구동독 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 재개발에 약 11%가, 농업투자지원에 10.3%가 투자되고 있다. 기초생활을 위한 서비스기관 확대와 농업 및 산림업 인프라(경작지 정리 및 도로 건설)를 위해서는 약 9%가 투자될 전망이다. 농촌유산 보존 및 개선에는 8.3%, 홍수 및 해안지역 보호에는 6%가 투입될 예정이며, 낙후지역 보조금으로 5.7%가 투입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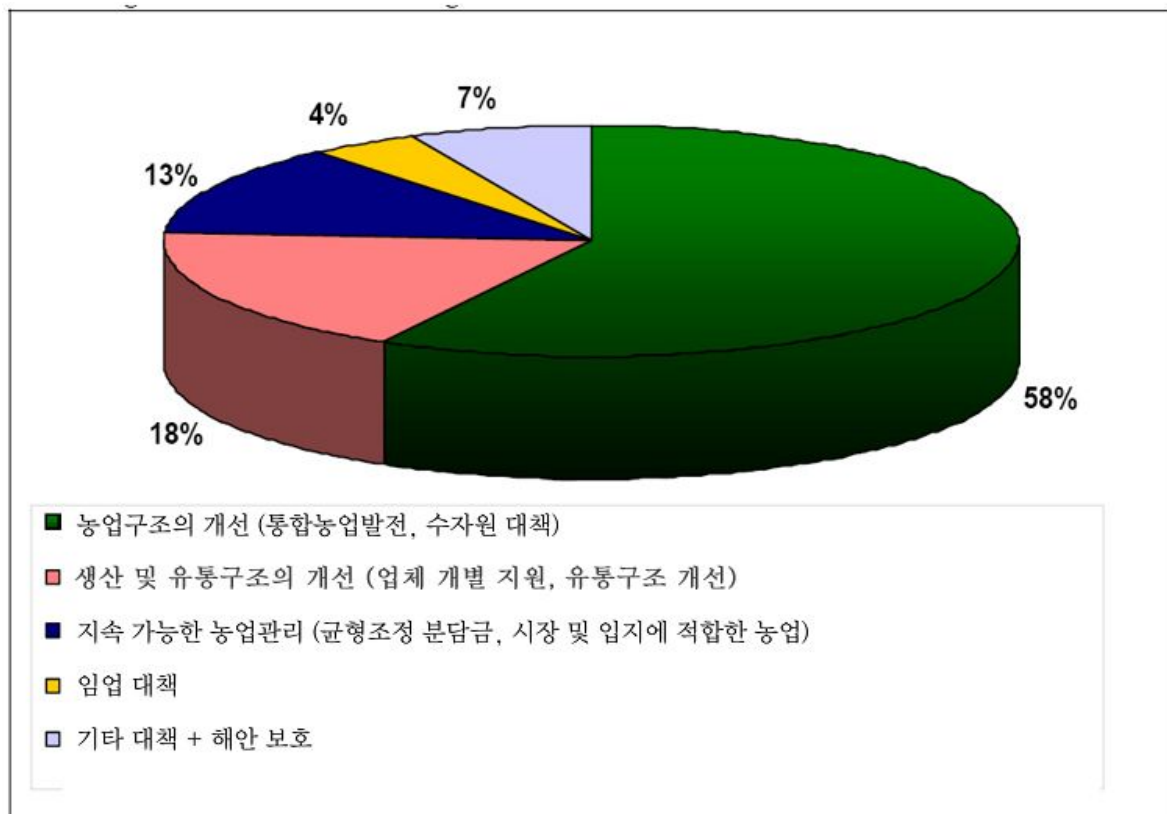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과 농업분야의 다양화 지원은 구동독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42%의 공공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동독 지역은 통합과 파트너십, 지역특성을 고려한 LEADER 프로그램을 위해 5%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올해 프로그램 전체예산의 전면적인 증액을 의미한다.

가. 공동과제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GAK)’는 특히 구동독 지역의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협력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전국사업이다. GAK 예산의 절반이상이 농촌구조개선(통합적 농촌발전 및 수자원 대책)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마을 재개발과 경작지 정리지원과 수자원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생산구조 및 상품화 구조개선’(그림 8 참조) 지원분야에는 GAK 예산의 1/5 가량이 구동독 지역에 투입되었다.

2008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근거리 난방 및 바이오가스 파이프) 공급과 개별 기업별 에너지공급 상담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림 8: 구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분야별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GAK) 사업예산 분배



2009년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GAK) 기본계획에 할당된 연방예산은 7억 유로(2008년 6억 6,500만 유로)로서, 이 가운데 약 2억 2,200만 유로가 구동독 지역에 할당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농업투자 지원이 크게 개선되고,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농업환경대책을 위한 보조금이 인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적어도 1,650만 유로에 이르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 외에 유럽연합의 지원금도 투입될 수 있다.

2009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보호 대책을 위한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 보호(GAK)의 특별 기본계획이 마련돼, 연간 2,500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편성된다. 이 중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는 2025년까지 총 3,460만 유로에 이르는 연방예산을 할당받는다.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GAK)는 농업 중심지역에서 도시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구조개선(GRW)'이라는 공동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일자리 보장 내지 신규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관광산업

구동독 지역의 관광산업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분야이다. 연방정부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산업이 구동독의 취약지역에서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관광수요를 통한 직간접 고용효과는 약 45만명에 달한다. 이는 구동독 지역의 총 경제활동인구의 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오는 2020년에는 구동독 지역의 일자리 1/10이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발전상황을 살펴보면, 5개 구동독지역 연방주내 투숙객 수는 4,330만 명에서 6,980만 명으로 증가해 무려 61%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숙박업소수도 같은 기간 10% 이상 증가해 약 8,800개로 늘어났으며, 투숙객을 위한 침대제공은 30% 증가해 50만 개를 넘어섰다.

2008년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4.5%, 베를린 2.8%, 브란덴부르크주 2.4%, 작센주 0.8%, 작센-안할트주 2.1%, 튀링겐주 1.2%로, 2007년과 비교해 투숙건수가 추가로 증가했다.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의 투숙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2008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데 이어, 베를린은 6.5%, 브란덴부르크주 5%, 작센주 8.9%, 작센-안할트주 11.5%, 튀링겐주 1%라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숙박업소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같은 발전을 지원해줌으로써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구동독 지역 특임관은 관광산업 대표와의 협력하에 구동독 지역 강화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베를린에서 관광산업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목표는 외국관광객의 여행지로서 구동독 지역의 입지를 추가로 강화하는 데에 있으며, 특히 이미지 광고와 마케팅, 제품전략, 지식교류 및 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농촌에서의 휴가’도 농업과 농촌에 중요한 경제요소이다. 확보된 시장 잠재력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발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요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 ‘질적으로 훌륭하고 가격면에서 저렴한 서비스’에 수요가 집중된다.
- 단기 휴가여행 트렌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4. ‘인구통계학적 변화’ 시범계획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구동독 지역의 특별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구동독 농촌지역은 주민들의 이탈비율이 매우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취약지역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특히 양질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많아(특히 여성들의 비율이 높음⁸⁾),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령층의 비율은 높아짐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결과적으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경제 기반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역개발 구조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구동독 지역 특임관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 시범계획과 더불어, 기존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앞서 언급한 목표시행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프로젝트가 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과 이해집단, 정책과 행정 및 입법 차원의 지역적 ‘공동행동’을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높은 삶의 질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2년 동안 구동독 지역 두 곳[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슈테티너 하프(Stettiner Haff)와 작센-안할트 주/튀링겐 주의 하르츠 남부/퀴프호이저(Südharz/Kyffhäuser)]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 지역들은 제반여건으로 인해 인구통계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지역에서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가 해당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후 시범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이 프로젝트는 구서독 지역의 베라-마이스너(Werra-Meißner) 광역자치단체(Kreis)와 노르트프리스란트(Nordfriesland)에까지 확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8) ‘베를린 세계인구·글로벌변화 연구소(Berlin-Institut für Weltbevölkerung und globale Entwicklung)’의 ‘독일 2020 - 인구통계학에 따른 국가의 미래’ 보고서, p. 7, 13 참조: “독일 동부의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남성 대 젊은 여성의 비율이 100 대 80에 불과한 반면, 쾰른과 뮌스터 또는 하노버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월등하게 많다.”

2009년 5월에 시작된 전국경쟁대회 ‘청년들이 농촌의 미래를 만든다(Junge Menschen gestalten die ländlichen Räume)’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혁신적이면서도 모범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전국경쟁대회 ‘우리 마을에는 미래가 있다(Unser Dorf hat Zukunft)’도 구동독 지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경쟁대회는 실무자들에게 각자의 마을을 위한 비전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는 의욕을 고취시켰다. 지난 대회에서는 전국 34개 마을(이 가운데 10개는 구동독 지역 마을이었음) 약 4,000명(이 가운데 789명은 구동독 지역 주민)이 참가하였다. 다음 행사는 2010년으로 예정돼 있다.

5. 재생원료 - 농업발전을 위한 잠재력

독일에서는 2008년 총 200만 헥타르에 이르는 부지에서 재생원료작물이 재배되었는데, 절반 이상이 구동독 지역에 위치했다. 맥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 소재한 재생원료전문개발원(FNR)은 프로젝트 시행자로서 연간 약 5,000만 유로의 예산을 운용, 독일 전체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 R&D 계획과 마케팅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구동독 지역은 현재 독일전체 지원계획의 1/3에 이르는 133개의 R&D 프로젝트에 약 3,8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2008년에는 지원규모 920만 유로에 달하는 48개 연구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바이오연료 연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에너지원료식물 및 제약원료식물 재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8년 구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바이오매스 원료 개발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주요 연구업무 연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튀링엔주임업청의 협조하에 에너지식물 연계 및 농임업(Agroforst) 연계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또 혁신적인 바이오매스 이용분야의 젊은 학자 그룹 6곳 가운데 두 곳이 구동독 지역 그룹이다. 농, 임업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지역적 바이오연료 상담대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바이오에너지 지역’ 전국경쟁대회의 일환으로 25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령 구동독 지역인 ‘예나-잘레-홀츠란트 바이오에너지 지역’, ‘루트비히스펠데 지역’, ‘매르키쉬-오더란트, 숲길을 걷다’, ‘맥클렌부르크 젠플라테 지역’, ‘천연 튀겐 - 에너지 가득’,

‘작센의 스위스-오스터르트 산맥’,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지역, 튀링엔 폭크트란트’ 등이 있다. 이 지역들은 재생원료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2009년 2월에는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독일 유일무이의 이 연구기관은 적극적인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 전반에 관해 해답을 제시하고 또 이 분야의 정책수립 시 학문적으로 근거 있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독일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는 특히 에너지원료 식물로부터의 바이오가스 획득 최적화와 소형연소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미래형 바이오연료 구상의 개발 및 평가, 독일 내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전기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생물학적 고체연료의 변환(특히 교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가스 형태의 2차 에너지원으로 변환)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현재 DBFZ에는 직원 약 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6. 농촌기업 구(舊)채무규정

‘농촌기업 구(舊)채무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LwALTschG)’을 토대로, 농촌기업들이 안고 있던 기존 부채청산이 2008년 거의 대부분 완료될 수 있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형편에 따라 각기업별로 별도로 책정된 일회성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기존 부채의 상환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부채 상환에 관한 기존 규정을 개정, 통일된 상환절차를 확정하였다. 절차시행은 채권은행이 담당하여, 상환신청서를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입법부가 지정한 ‘업무 위임기관’인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G)는 채권은행의 결정안을 검토하였다.

1,351개 해당 기업 가운데 1,222개 기업(농업, 농산물 무역업, 서비스업 및 낙농업조합)이 구채무 상환을 신청하였다. 금액으로는 약 24억 유로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1,180개 농촌기업과의 개별협상이 마무리되어, 약 22억 8,000만 유로에 이르는 구채무에 대해 약 2억 5,900만 유로만 상환하기로 합의되었다. 전년도 지불의 무금액과 이자를 감안해, 2009년 5월 15일까지 모두 약 2억 8,500만 유로에 이르는 금액이 상환되었다.

12개 신청은 거부되었는데, 이는 신청기업들이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5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상환금액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상환절차 과정이 중도 해지되었다. 한편, 상환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분 매년 채무 일부를 상환해가는 방식으로 몇년내에 구채무를 모두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었다.

이렇게 구채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해당 농촌기업 대다수의 기획 안정성이 높아지고 또 변화하는 시장경제 요구에 상응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 구채무 청산은 전체적으로 구동독 지역 농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7. 토지매입

구동독 시절의 국유 농림지는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G)를 통해 민영화되었다. 이 사업은 구동독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모두 89,000헥타르에 이르는 농지와 목초지, 그리고 4,800헥타르에 이르는 삼림이 매각되었는데, 대부분은 '토지배상 및 반환에 관한 법률(EALG)'에 따라 이뤄졌다. 1992년 7월 1일부터 총 580,400헥타르의 농지와 528,100헥타르의 삼림이 매각되었다.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약 440,600헥타르가 임대되었고, 그 상당부분(84%)은 장기임대되었다(표 7과 비교).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농업문화 측면의 요구사항을 특별히 감안,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농촌기업의 지속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G) 소유 농지는 연방정부와 구동독 지역 연방주 농업부들이 2006년 합의한 민영화 기본원칙을 토대로 평가된다. 원칙적으로 이 농지는 기존 임대계약의 만료시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임대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조건하에서는 기존의 임대인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연장도 가능하다.

토지매입개정법 정부 초안이 2009년 4월 24일 연방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05년 연립정부구성 합의내용 일부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합의된 대로 연방정부 소유의 대표적인 자연보호구역 토지('그린벨트' 토지 포함)를 연방재단이나 주정부에 무상이전해주기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 계획들을 고려하고 또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대조건들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G)의 농림지 민영화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돕도록 명시하고 있다.

토지배상 및 반환에 관한 법률(EALG)에 따라 한층 탄력을 받게 된 농지 매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2009년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예외: 정당한 구(舊) 소유주).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G)는 기한에 맞춰 2009년 3월 3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1,012개 신청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이미 갖춘 상태이다.

표 8: 토지 민영화(재민영화 및 재공영화 제외)

	농지 (단위: 헥타르)	산림 (단위: 헥타르)
1992.7.1 토지현황	1,000,000	575,000
2009.3.31까지 매각된 총 면적	580,400	528,100
이 가운데 EALG에 의해 매각된 토지	353,800	428,200
2008.1.1~2009.3.31까지 매각된 총 면적	89,000	4,800
이 가운데 EALG에 의해 매각된 토지	53,800	2,800
2008.12.31 기준 임대면적	440,600	
2008.12.31 토지현황(결산)	464,000	84,600

2000년 말 자연보호구역 토지를 이전해주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G)는 모두 약 35,500헥타르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으로 주정부와 환경보호단체, 재단에 이전해줬으며, 추가로 약 29,000헥타르의 토지도 무상 이전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21,700헥타르를 자연보호 목적으로 매각했다.

XII. 가족·평등·청소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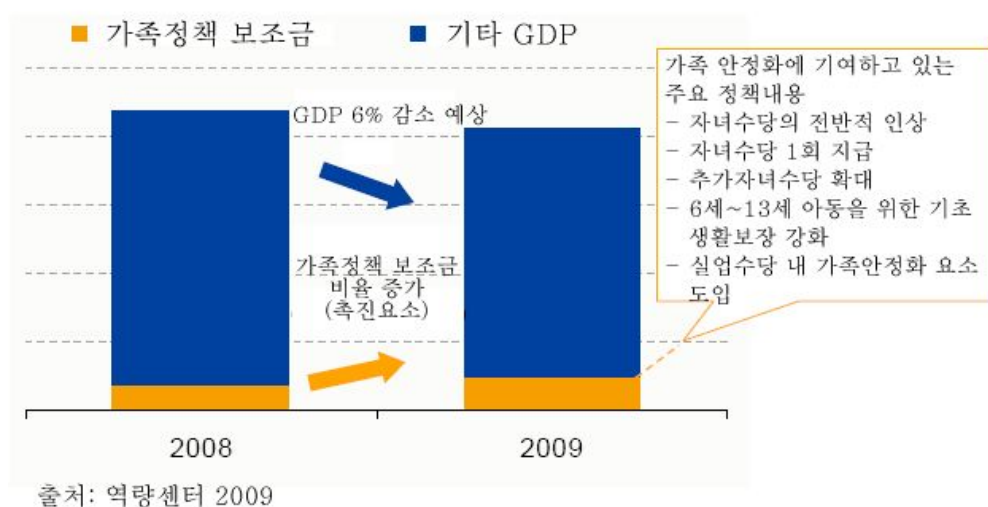
1. 지속적이고 일관된 가족정책

가. 경제성장 강화를 위한 일관된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토대로 지난 몇 년간의 주요 가족지원계획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덕분에 오늘날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에 해당되는 지원책으로는 구 양육수당에서 현 부모수당으로의 전환, 탁아시설 확대, 자녀수당의 등급강화, 추가자녀수당 신설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가정에 대한 사

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또 가족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들은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정의 수입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부양 패키지 I과 II의 일환으로 마련된 여러 개선책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개선책들 중에는 특히 자녀의 학년 진급 시 해마다 100유로씩 보조해줌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학용품 지원안(Schulbedarfs-Paket)’과 자녀보조금을 꼽을 수 있다.

그림 9: 가족 안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나. 목표 지향적 국가 가족보조금 지원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가족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탁아소 규모와 부모수당, 추가자녀수당, 미망인연금 부문에 있어 정부의 지원예산이 모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2007년 도입된 부모수당과 2009년 초부터 시작된 추가자녀수당의 확대와 등급강화이다. 사회법전 II의 보조금 개선을 통해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2008년 10월 1일 발효된 추가자녀수당 역시 구동독 지역의 빈곤 퇴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25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본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 규정은 보다 투명하게 되어있어, 추가자녀수당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가족친화적 근로조건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탁아비용 및 가사 도우미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와 영유아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근로기회 및 수입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가족친화적 조치는 구동독 지역 젊은이들의 이주를 막고, 구동독 지역을 가족과 기업을 위한 매력적인 입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6년초 경제협회와 노조 간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출범한 기업 프로그램 '성공한 가족(Erfolgsfaktor Familie)'은 가족친화성을 동서독 기업들의 입지요소와 경쟁요소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새로 도입된 여러 조치들은 이미 일과 가정의 양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의 장점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에게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하우 전달과 상호간의 교류를 돕는 네트워크와 연합들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라. 편모·편부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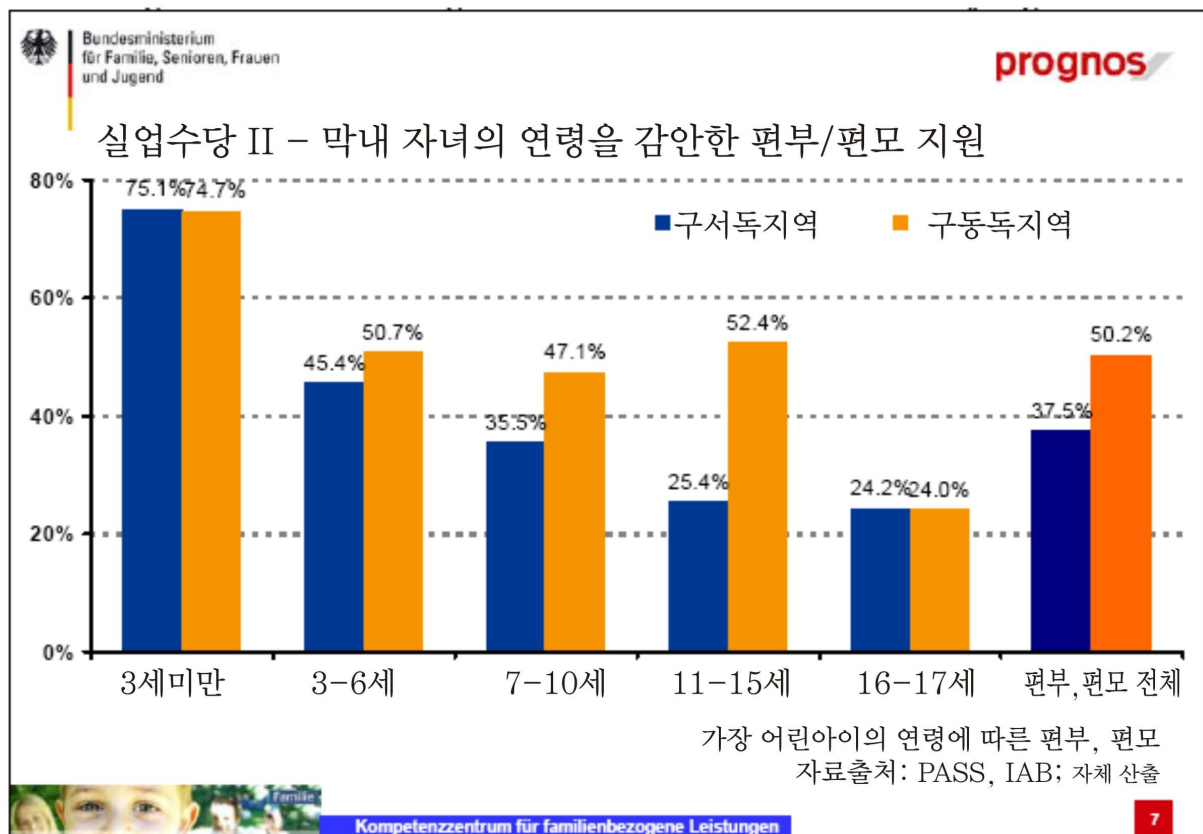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개선책들은 여성의 근로기회를 확대해 가계수입 감소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탁아시설의 확대는 지금까지 실업수당 II를 통해 자녀수당을 받아온 수령자들의 근로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총 가구의 26%에 달하는 동독 지역의 편모·편부 가정에 해당된다.

전국의 편모·편부 가정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책들은 매우 다양하다. 편모·편부 가정을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편모·편부 지원금, 부모수당 연장, 부양보조금, 기초생활보조금, 주거보조금, 추가자녀수당이 있다.

가계 생활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편모·편부의 근로활동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편모·편부 가정에 친화적인 고용주 및 근로조건과 탁아시설의 개선은 편모·편부의 근로활동에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편모·편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실질 지원책이 필수적이며, 이는 근로와 직업 교육, 양육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와 연방노동사회부(BMAS), 연방노동청(BA)은 '편모·편부를 위한 미래(Perspektive für Alleinerziehende)'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09년 4월부터는 '편모·편부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Vereinbarkeit für Alleinerziehende)'이라는 주제 하에 12개의 시범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성과 활용, 그리고 위기관리 협력은 지역 참여자들의 미래 협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시범프로그램들은 편모·편부 프로그램 안내서를 발행하는 프로젝트 사무소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림 10: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편모·편부를 위한 실업수당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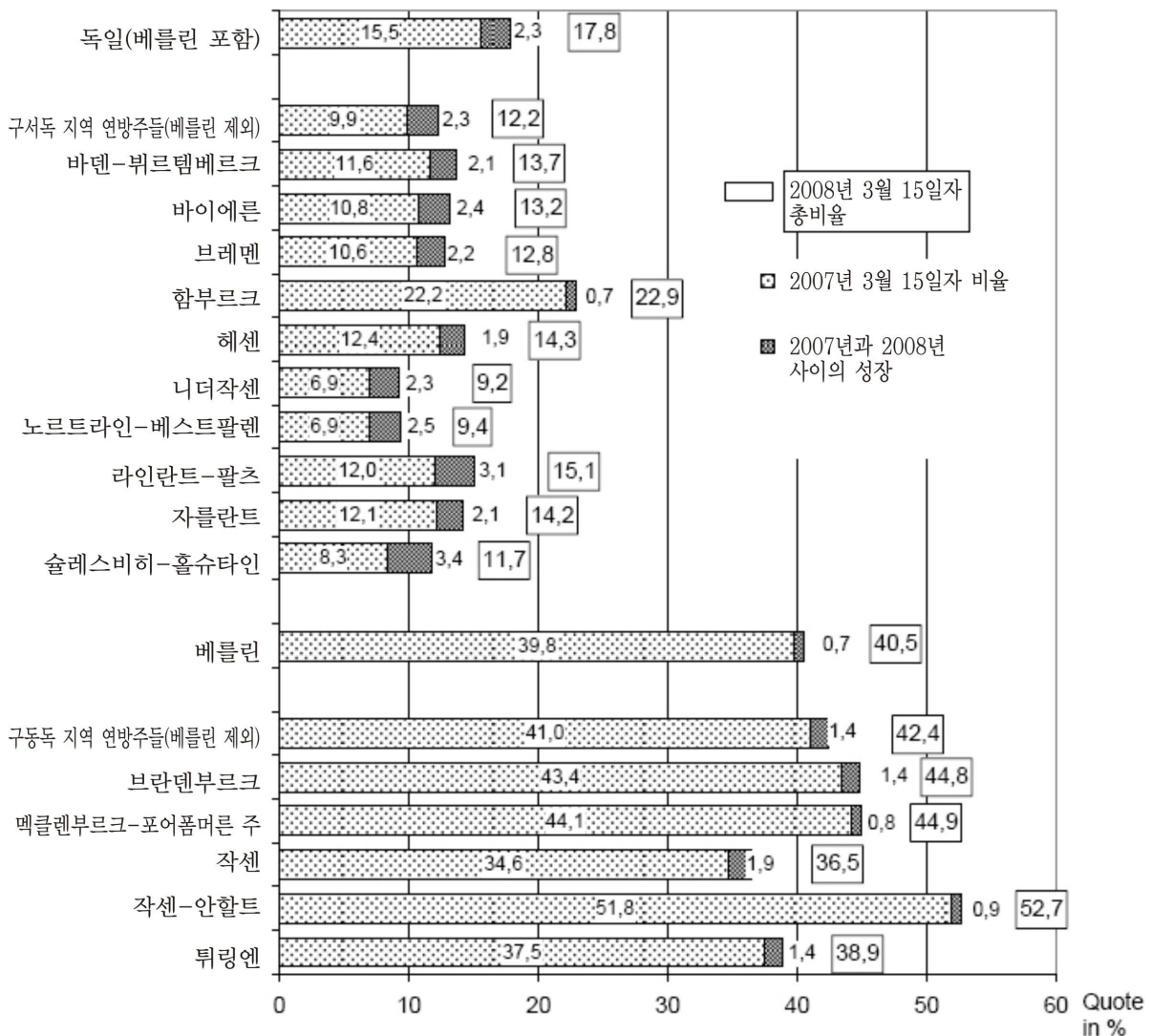


마. 전일제 탁아시설 확대

연방정부는 3세 이하의 아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전일제 탁아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3세 이하 아동의 약 18%가 전일제 탁아시설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의 비율은 42.4%로, 2007년(41%)보다 약간 증가했다.

그 결과 2008년 3월 기준 구동독 지역의 3세 이하 아동의 2/5 이상이 전일제 탁아시설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동독 지역의 3세 이하 아동의 전일 탁아시설 이용률은 작센주 36.5%에서부터 작센-안할트주 52.7%에까지 이른다. 이로써 구동독 지역은 아동지원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전국 3세 이하 전일제 탁아시설 이용률 35%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그림 11: 2007/2008년 연방주별 3세 이하 전일제 탁아소 이용률 (단위 %)



자료출처: 연방통계청: 어린이-및 청소년 지원금통계-종일탁아소의 어린이들과 근무인원, 2007년과 2008년도 탁아소의 어린이들과 근무인원. 도르트문트 어린이-및 청소년 통계청의 산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일제 탁아시설 확충이 지자체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비용의 1/3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40억 유로의 연방예산이 전일제 탁아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연방정

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투자 프로그램 ‘탁아시설재정지원(Kinderbetreuungsfinanzierung)’의 일환으로 기본법 제104조에 따라 21억5,000만 유로를 3세 이하의 전일제 탁아시설 투자를 위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보조금과 더불어 연방정부는 전일제 탁아소 운영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정부에 총 18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매년 7억 7,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세 이하의 교육과 탁아, 육아의 질적 향상 문제를 제기해 온 구동독 지역의 요구가 해소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조기교육 포럼(Forum fruehkindliche Bildung)’과 ‘전일제 탁아소 프로그램(Aktionsprogramm Kindertagespflege)’을 통해 전일제 탁아소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는 주정부와 지자체, 담당기관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원 교육이 절실한 부문은 향후 수년 이내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사를 신진 교사로 대체해야 하는 구동독 지역이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는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경기부양패키지 II의 미래투자법의 일환으로 교육인프라 투자 부문에 지원될 계획이다. 본 지원 계획에는 조기교육 부문도 포함되어 있다.

바. ‘전(全)세대를 위한 집’ 프로그램(Aktionsprogramm Mehrgenerationshäuser)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全)세대를 위한 집 프로그램(Aktionsprogramm Mehrgenerationshäuser)’은 모든 세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08년 초부터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전(全)세대를 위한 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145개 전(全)세대를 위한 집이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 전(全)세대를 위한 집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전(全)세대를 위한 집 가운데 38개는 가족 교육 분야, 25개는 가족 센터 및 어머니 센터, 24개는 스포츠, 문화 분야, 21개는 교회 분야, 20개는 노인교육 분야, 17개는 부모-자녀-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기관들은 전(全)세대를 위한 집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全)세대를 위한 집들은 시민참여와 자력구제, 전문지원에 힘입어 전 연령층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全)세대를 위한 집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구동독 지역의 시민들이 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전(全)세대를 위한 집은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센터로서, 가족을 지원하고, 세대를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역적 요구와 여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全)세대를 위한 집은 노인요양과 치매와 관련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책임을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전(全)세대를 위한 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병행 서비스는 특히 편모·편부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탄력적인 탁아 서비스의 제공이다.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전(全)세대를 위한 집은 부모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全)세대를 위한 집은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가족 서비스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온라인 알선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전(全)세대를 위한 집 프로그램의 종합 목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별 전(全)세대를 위한 집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모범적인 사회 구성 모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전(全)세대를 위한 집을 방문하는 시민수는 하루 평균 10만 명에 달하며, 이용객의 3/4 가량이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www.mehrgenerationenhaeuser.de).

사. 연방군과 가족

연방군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능력있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과 동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군인과 민간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 복무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구동독 지역의 일과 가정의 양립 노하우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프로그램 추진시에는 특히 구동독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연방국 방부 사업 분야의 민간근로자들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현재 수립단계에 있다.

2. 남녀평등 지원

가. 여성과 직업

독일 여성들의 취업률은 독일 동서부 지역 모두(구동독 지역: 63%, 구서독 지역 63.1%, 2007년 기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과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 상황에는 적잖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2007년 통계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여성의 실업률은 9.6%로 남성 실업률 8.5%보다 높았다. 여성의 실업률은 구동서독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은 각각 15.6%와 14.5%를 기록했다. 반대로 구서독 지역 여성의 실업률은 구동독 지역의 절반수준으로 남성 실업률(7%)보다 다소 높은 8%를 기록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급여수준을 비교해 보면 남녀의 임금격차는 평균 23%로 구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24%, 구동독 지역은 6%의 남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동서부 지역의 상이한 육아휴직기간이다. 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전일근무 비율 역시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보다 높다.

나. 복직을 위한 미래

‘복직을 위한 미래(Perspektive Wiedereinstieg)’는 육아기간중에 근로활동을 포기했던 여성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육아기간이 끝난후 다시 직장へ 복귀하려는 여성의 비율은 40%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전국에(베를린과 자를란트 주 제외) 17개 센터를 설립해 육아 후 직장へ 복귀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총 17개 센터 가운데 7개가 구동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혁신적 서비스 중에는 복직 여성의 남편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다. 직업선택권 확대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여전히 직업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제한적인 직업만을 선택하고 있다. 엔지니어나 컴퓨터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Girl's Day를 통해 여학생들은 기술, 수공업, 공학, 정보기술 분야의 다양한 직업정보를 얻게 되며, 2008년에는 8,500개 이상의 행사에

13만 명이 넘는 여학생들(구서독 지역 74%, 구동독 지역 26%)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여학생 중 절반가량이 새로운 관심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여성폭력 퇴치

여성폭력 퇴치를 위한 구제시스템은 매우 활발히 지원되고 있다. 여성의 집과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긴급연락망은 구동서독 지역 모두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하지만, 지역적 편차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현재 튀링엔주는 여성의 집 운영이 주정부 법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다.

3. 청소년 정책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통합 부족은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근로,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지역자본(Lokales Kapital für soziale Zwecke)’이라는 모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 1차 유럽사회기금(ESF) 지원은 2008년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5년의 기간동안 288개 지역에서 15,000개 이상의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탄생해, 4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제2차 지원기간에는 청소년정책이 새로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가 취약한 구동독의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강화(STÄRKEN vor Ort)’ 프로그램이 취업과 복직이 어려운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과 여성의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강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적 통합과 고용을 도모하는 잠재력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지역의 소규모 이니셔티브와 조직들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 행동계획들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지역강화’ 프로그램은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일차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9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중점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될 지역은 구동독 지역으로, 총 예산(4,800만 유로)의 52%가 이 지역의 구조취약 도시와 농촌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구조취약 농촌지역은 집중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젊은이들의 이주는 여전히 구동독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엘리트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이 구동독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동독 지역을 지키는 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 초지역적 사업인 ‘청년의 미래 - 이주 공동 대응(Perspektive für junge Menschen - gemeinsam gegen Abwanderung)’ 사무소를 열었다. 본 사업은 민주주의청소년재단(Stiftung Demokratische Jugend)과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운영된다.

본 사무소의 과제는 구동독 지역의 청년층 이탈문제를 여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계획수립, 참여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구동독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 사무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행정과 정책, 경제, 민간 사회와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와 초지역적 협력공동체를 통해 이에 대한 지원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의 미래’ 사무소는 2008년 구동독 지역 12곳에 모델 프로젝트 ‘제 1 도약대(1. Schwelle) 프로그램’을 도입해, 뛰어난 졸업성적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지역 공공 프로젝트의 일자리를 통해 미래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2000년부터 유럽연합은 국제 청소년 활동과 유럽자원봉사(EFD)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JUGEND)’과 ‘행동하는 청소년(JUGEND IN AKTION)’을 통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13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이다. 프로그램 시행기간은 7년(2007~2013년)으로, 총 8억 8,600만 유로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8,000만

유로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연간 100만 유로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 청소년부와 유럽연합 의회가 공동으로 통과시킨 청소년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행동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은 시민참여가 유럽연합이라는 맥락에서도 가능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자원봉사(EFD)를 통해 젊은이들은 3주에서 최대 1년간 해외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유럽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동서부 젊은이들이 해외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독일과 유럽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책임감있는 참여정신을 배우고, 또 이들의 창조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해외 공공 프로젝트 업무에 반영되게 된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의 자신감과 팀워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럽자원봉사로 해외에 체류한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은 자기계발 능력과 취업후 적응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7,500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약 770명이 유럽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165개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150개 이상의 청소년 민주주의 프로젝트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중 최우선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다.

2008년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는 약 35%였으며, 45% 이상의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진행되었다. 기타 참여 프로젝트 가운데 약 50%는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에서 진행되었다.

공익근무

공익근무요원의 1/5은 구동독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는 국가가 인정한 총 21,205개의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병역 대체 일자리가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복지시설에 치중되어 있다. 공익근무 일자리의 1/6은 구동독 지역에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들은 장애인과 환자, 노인들을 돌보고, 환경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익근무를 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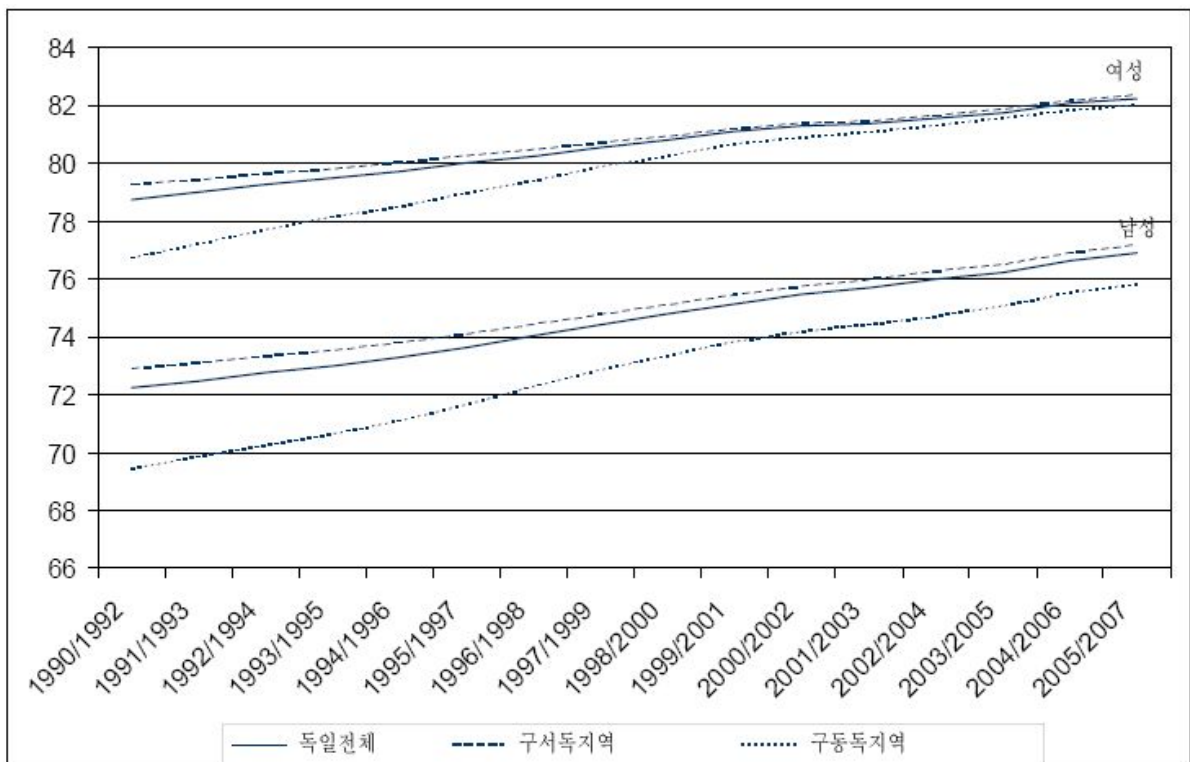
아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XIII. 건강보험, 연금, 노인정책

1. 건강보험

건강은 개인과 공공의 안위에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구동독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개선되어 구서독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며, 독일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추세이다. 2007년 남성의 평균수명은 76.9세, 여성은 82.3세이다. 구동독 지역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비슷해져, 남녀의 차이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현재 여성의 평균수명은 동서부 지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구동독 지역의 평균수명은 75.8세로 77.15세인 구서독 지역보다 여전히 낮다.

그림 12: 1990년 이후의 평균수명 변화



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보장

도시든 농촌이든 거주지를 막론하고 독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료시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 간 독일의 의사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개인병원의 의사는 13%, 종합병원의 의사는 20%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 지역의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중에는 젊은 의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법정건강보험(GKV) 현대화에 관한 법'에 따라 의사와 보건인이 함께 근무하는 의료서비스센터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현 추세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의료서비스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7년에는 분기별로 60~80개의 의료서비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의사들의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장려하고, 의료서비스 안정화와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은 계약의사법 개정법과 기타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효되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계약의사의 의료행위 유연화 (정년 폐지, 개인병원 고용여건 개선)
- 2010년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낙후지역으로의 의사 유입 유도
- 보건인력을 통한 의사의 업무부담 완화[모델계획(Modellvorhaben), 간호사법(AGnES)]
- 의료 서비스 낙후지역에서의 종합병원 개원 지원
- 대형 종합병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2008년 3월 연방의회 통합 워킹그룹인 '농촌지역'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적절한 시점에 재진단할 예정이다.

나. 의사급여 개혁

구동독 지역의 의사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지원책은 2009년 1월 1일 발효된 계약의사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여 개혁은 구동독 지역 의사들의 급여조정과 추가근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토대로 하고 있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구동독 지역 의사들의 급여수준은 구서독 지역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구동독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구동독 지역으로 이주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급여개혁을 통해 치매 치료나 주치의 서비스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노인환자와 장기질환환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법정건강보험-경쟁력강화법과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보장

법정건강보험-경쟁력강화법(GKV-WSG)은 독일의 의료시스템이 미래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실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는 동서부 주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과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료와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시스템 역시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2004년에 도입된 주치의 서비스 지원강화와 통합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제공자간 협력,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개선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법정건강보험-경쟁력강화법은 지금까지 법정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비롯해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질병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 2007년 4월 건강개혁법이 발효된 이래 2009년 4월까지 16만 2천여명의 국민들이 법정건강보험에 재가입했다. 약 13만8,000여 명의 건강보험 비가입자들은 법정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2007년 7월부터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약 2만 4,000명에 이르고 있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중 2008년말까지 개정된 일반보험료를 선택한 5,300여 명은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된 기본보험료 가입자로 분류된다. 민영 건강보험사에 따르면 기타보험료를 선택한 비가입자들은 약 18,500명에 이른다.

국민 전원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2007년 발효된 건강개혁의 핵심이다. 법정 건강보험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 민영건강보험은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의무화 규정이 적용된다.

라. 건강기금과 질병 종류에 따른 위험보상구조

법정건강보험-경쟁력강화법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건강기금은 2009년 1월 1일 도입되었다. 건강기금은 훌륭한 제도로 역할중이며, 발효직후부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기금은 건강보험사들과 피보험자들에게는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경기침체와 보험료 납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사들은 2009년 건강기금으로부터 1,67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는 2008년보다 약 110억 유로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금의 수익 부족은 2009년 연방정부의 장기 유동성 대출로 충당되었으며, 이 대출금은 2011년까지 상환될 예정이다. 건강기금을 통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단일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단일보험료의 보험료율은 경기부양 패키지 II를 토대로 결정된 2009 연방지원금 확대에 힘입어 종전보다 0.6% 낮아져 14%에 이르고 있다(법정건강보험 가입자들은 0.9%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08년말 평균 보험료보다 0.1%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건강기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일부 건강보험사들은 보험료를 훨씬 높게 인상해야만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금은 건강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수입 배분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보험가입자들의 이환율(罹患率)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선별된 80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시 할인 및 할증률이 적용된다. 치료비용이 높은 만성 질환 및 중증 경과 질환에 대한 이같은 특별한 조사를 통해, 건강보험사들은 과거의 위험구조보상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강기금 예산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가입자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사들은 건강기금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단일 보험료와 건강기금의 건강보험사 재정지원은 이른바 지급인측 보험사와 수령인측 보험사의 구분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 법정건강보험의 재정현황

연방정부는 법정건강보험-경쟁력강화법을 통해 동서부 지역 건강보험사들이 2009년 1월부터 새로운 건강기금의 혜택을 받아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08년 법정건강보험 임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건강보험사의 채무상환이 가능해, 구동독 지역건강보험조합의 채무상환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법정건강보험은 건강기금의 도입으로 견고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부터 건강보험사의 수입과 지출을 비롯한 기타 통계자료는 더 이상 동서부로 분류되어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내실 있는 통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바. 종합병원 재정지원조건 신규규정

2009년 3월 24일자 종합병원재정지원개혁법(KHRG)을 통해 종합병원 재정지원조건이 2009년부터 새로이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실적 지향적인 일괄투자비지원을 통해, 종합병원의 투자재정 확보가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를 통한 종합병원의 재정확보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급성환자 치료병원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종합병원에 대한 투자지원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본 법을 통해 종합병원이 얻게 될 장점은 투자된 자본을 병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보다 확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병원이 임금인상에 필요한 재정을 건강보험사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성환자치료병원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노사간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사가 50%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된 임금인상폭은 건강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변동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신병원의 경우 상기 사항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들은 임금인상을 위한 재정지원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병원재정지원개혁법은 종합병원 소속 간병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도입도 계획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7,000개의 추가 간병인 일자리에 대한 재정이 종합병원측의 지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병 부문에 대한 부담으로 종합병원이 긴축재정을 실시해, 간병인의 일자리를 축소해 온 그간의 추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병원의 간병인 상황이 개선되면, 환자들에 대한 간병서비스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소속 간병인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합병원재정지원개혁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법적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보험료를 0.5% 할인해 주는 내용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2009년 전국의 종합병원들은 법정건강보험으로부터 2008년 대비 35억 유로(약 7%)를 추가 지원받았다.

사. 경기부양책과 종합병원 투자

종합병원 부문은 '일자리 확보와 성장력 강화, 국가 현대화를 위한 독일의 고용과 안정을 위한 조약'으로 편입되었다. 미래투자법의 중점투자 부문 '인프라'의 일환으로 35억 유로가 종합병원과 도시재건, 농촌 인프라, 지자체 도로 소음방지시설 복구 등의 지자체 인프라 현대화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종합병원 투자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간병개혁

구동독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간병 인프라 부문의 재정도 보조해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간병보험법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33억 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연방의 재정지원을 통해 1,025개의 간병시설이 신설되었다.

추가로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 8,400만 유로가 승인되었다. 동시에 간병보험의 도입은 가정 방문 간병서비스 확대와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구동독의 국가사회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구서독 지역에 비해 낙후된 간병시설의 수준과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동독의 간병서비스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2008년 7월 1일 발효된 간병-추가발전법(Pflege-Weiterentwicklungsgesetz)은 간병보험의 구조와 서비스를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이 중점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가정방문 간병서비스의 확대이다. 이를 통해 가정방문 간병서비스를 비롯해 간병등급 III에 속하는 환자와 중증입원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3단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9년부터는 개인별 간병상담이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간병상담소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간병서비스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간병-추가발전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노년층을 위한 건강지원

건강 시스템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이러한 추이는 미래에 더 많은 노령인구가 양질의 치료와 간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건강한 영양섭취와 운동강화를 위한 독일 이니셔티브(Deutschlands Initiative für gesunde Ernährung und mehr Bewegung)’를 통해 연방정부는 국민의 영양섭취와 운동습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건강한 삶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 여가생활의 참여능력을 높여준다. 이는 특히나 노년층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의 운동지원센터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운동지원센터의 주요 과제는 일상생활의 운동을 건강관리의 일부분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다. 운동지원센터는 질병예방 분야의 활동이나 참여자들을 상담해주는 역할도 제공하고 있다.

2. 연금

법정연금보험은 구동독 지역에서도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최우선책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1992년 1월 1일, 전국 통합 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연금은 동서독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에 맞춰 인상되고 있다.

2009년 7월 1일 이래 연금납입액을 비교해 보면 구서독 지역은 27.20유로, 구동독 지역은 24.13유로로 구서독 지역이 구동독 지역보다 약 13% 높다. 2005년 연금 개혁 이후 동서독 연금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

능한 상황이다. 2009년 지급된 연금 총액은 약 140억 5,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연금보험가입자[사회법전 VI와 연금연결법(RUEG)]이 명시하고 있는 연금보험가입자의 평균연금은 구동독 지역의 경우 남성은 1,001유로, 여성은 675유로로, 구서독 지역의 남성 967유로, 여성 491유로보다 높은 수준이다(2008년 7월 1일 기준).

이렇게 구동독 지역의 실제 지급연금액이 표준연금 평균액보다 높은 것은 구동독 지역 연금생활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특히 구동독 지역의 여성이 평균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구동서독 연금생활자의 연금보험이력의 구조적 차이 역시 이러한 결과의 요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은퇴 전 자영업자나 공무원으로 일해 법정연금수령자로서의 권리가 낮은 구서독 지역의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구동독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또한 구동독 지역의 연금에는 통일에 따른 연금제도 통합과정을 통해 기지급액에 대한 보호규정이 적용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연금수령자들 중에는 구서독 지역이라면 직장연금보험 혹은 공무원연금보험군으로 분류되는 고액 연봉자들의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동독 지역 연금생활자의 재정원은 구서독 지역에 비해 단순하고 통합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구동독 지역의 경우 연금이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구서독 지역처럼 생명보험, 개인적 노후대책(예를 들어 부동산), 혹은 직장연금 등 기타 수입원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

가. 동서부 연금인상

연금인상의 기준은 임금인상폭이다. 2009년 7월 1일 임금인상폭에 연동해 인상된 연금은 구서독 지역의 경우 2.1%이며, 구동독 지역의 경우 3.1%이다.

2008년에 발효된 연금인상법을 통해 노후대책 분담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2008/2009년에서 2012/2013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를 통해 2008/2009년에는 구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약 0.65%포인트의 연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독 지역의 임금 인상폭은 구서독 지역보다 커서, 2009년 7월 1일 기준 구동독 지역의 연금인상률은 3.38%로 평균 연금인상률인 2.41%보다 높다. 구동독 지

역에서 연금이 2% 이상 인상된 것은 1994년 이래 2002년뿐이었다. 이번 인상폭은 1997년 이래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구동서독 연금 지급액의 평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노년층을 위한 정책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의 생활조건 개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도시개발과 주거지 재건축, 혁신적인 주거 및 요양시설 건립시에는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이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거주(Neues Wohnen)'라는 모델 프로그램과 구동독 지역의 건설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공동체를 비롯한 혁신적인 주거개념 건설이 지원되고 있다. 노인복지와 일자리, 주거관리를 연결해 주는 미래지향적이며 참여 중심적 프로젝트들은 인구 고령화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울타리 없는 주거지 건설과 브란덴부르크 시의 핑스터발데(Finsterwalde)에 위치한 지역수공업자연합의 새로운 형태의 주거상담이다. www.kompetenznetzwerk-wohnen.de는 혁신적인 공동거주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가. '전(全)세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2009년 1월 1일부터 '전(全)세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다리를 잇는 참여'라는 구호아래 창설되었다. 연방정부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명예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세대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여문화의 확산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에게 자발적 참여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있다. 본 사업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475만 유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09년 초부터 자원봉사자들은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사회법전 VII(법정상해보험)의 보완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수행하게 될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법정상해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책임보험의 보호와 재교육,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원봉사자들은 공법상의 기관이나 공공기관, 종교기관에서 최소한 주당 8시간에서 6개월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선별된 46개 시범 프로젝트로, 그 가운데 11개 프로젝트는 구동독 지역에, 3개는 베를린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해당 지역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도시, 기관의 프로젝트들이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3년이다. 각 시범 프로젝트들은 연간 5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전(全)세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표는 전국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全)세대 자원봉사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2,000개의 지자체가 각각 2,000유로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원봉사자의 수요와 공급 조율, 관심 있는 시민과 지자체, 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에 있다.

또한 이동 역량팀(Mobile Kompetenzteam)을 지원해 명예활동과 전(全)세대 자원봉사조직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전(全)세대를 위한 집, 지역 연합, 교회 행사, 자원봉사 기관, 노인 사무실, 협회 업무와 같은 모든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직하는 작업은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전(全)세대 자원봉사에 관한 최신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www.Freiwilligendienste-aller-Generationen.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경제적 주체로서의 노년층' 이니셔티브

민간소비가출의 1/3은 노년층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2050년이면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만이 가진 특별한 소비성향은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과 기술, 서비스가 노년층의 구체적인 소비성향을 반영하게 된다면 노년층의 삶의 질과 독립성, 그리고 사회참여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 프로그램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Aktiv im Alter)' 프로그램은 '참여와 결정 - 지자체 노년층(Mitgestalten und Mitentscheiden- ältere Menschen in Kommunen)' 규약을 통해 발족되었으며, 아래의 주요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치적 참여
- 생활/거주환경
- 건강/예방
- 이웃돕기/서비스
- 교육/문화
-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총 150개의 지자체가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Wie wollen wir morgen leben?)'라는 모토 하에 지역시민포럼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원봉사 수요에 맞춰 노년층은 이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자들과 공동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자체는 10,000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50개 지자체(구동독 지역: 14개 지자체)가 2008년 10월 1일부터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100여 개의 지자체가 2009년 6월 제2차 프로그램 기간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의식이 높은 노년층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결정의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책임감 있는 노년층의 역할이 규정되고,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 문화가 지자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결속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참여 증진과 민간사회 결속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XIV . 구동독 지역의 예술과 문화

1. 최신 프로그램

구동독 지역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자랑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문화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다채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통일후 구동독 지역의 훼손된 문화유산을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예: ‘구동독 지역의 문화’와 2000년부터 진행되어 온 ‘구동독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구서독 지역과 비교해 수십년의 격차를 보이는 구동독 지역의 문화 관련 기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구동독의 문화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체를 형성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 국가문화시설 투자’ 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문화재의 보수, 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2007년 독일연방의회가 추가로 예산을 할당한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보호재단(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Brandenburg)(7,750만 유로)과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Stiftung Weimarer Klassik und Kunstsammlungen)(4,500만 유로)이다. 본 특별투자기금은 베를린과 튀링엔주, 브란덴부르크주가 동일한 규모로 공동 지원하고 있다.

2008년 7월 11일에는 구동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규 박물관인 오체아노임(OZEANEUM)이 개관되었다. 독일의 유일한 해양박물관인 OZEANEUM은 독일 발트해 연안의 문화적 등대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혁신적인 전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OZEANEUM을 방문한 관람객은 75만 명에 이르렀으며(2009년 5월 1일 기준), 연방정부는 신규 박물관 총건설비용 6,000만 유로 가운데 절반을 지원했다.

연방정부의 문화언론담당청의 가장 큰 과제는 범지역적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시범 프로그램). 그 밖에 구동독 지역의 문화재 보호와 문화수도 건설이 연방정부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는 문화기관과 소수민족 프로젝트, 연방신허민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대책 마련, 기념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시설 지원

연방정부는 올해 ‘문화 등대’라 일컬어지는 범지역적 문화시설 보존을 위해 2,800만 유로를 투입했다.

-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보호재단
(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Brandenburg)
- *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재단
(Stiftung Weimarer Klassik und Kunstsammlungen)
- * 데사우 바우하우스 재단(Stiftung Bauhaus Dessau)
- * 라이프치히 바흐 자료실 보호재단(Stiftung Bacharchiv Leipzig)
- * 작센-안할트주 루터 기념관 보호재단
(Stiftung Luther-Gedenkstätten in Sachsen-Anhalt)
- * 슈트랄준트 독일 해양박물관 재단(Stiftung Deutsches Meeresmuseum in Stralsund)
- * 할레 프랑크 재단(Franckeschen Stiftungen zu Halle)
- * 데사우 뵘리츠 문화재단(Kulturstiftung Dessau-Wörlitz)
- * 바트 무스카우 뢰클러 영주 공원 보호재단
(Stiftung Fürst-Pückler-Park Bad Muskau)
- * 뢰클러 영주 박물관 공원과 브라니츠 성 보호재단
(Stiftung Fürst-Pückler-Museum, und Schloss Branitz)
- * 아이제나흐 바르트부르크 성곽요새 재단(Wartburg-Stiftung Eisenach)

이 가운데 대표 사례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보호재단, 그리고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재단을 집중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보호재단은 유례없는 규모와 뛰어난 예술성이 환상적으로 조합된 앙상블로 꼽히고 있다. 이 재단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성 내지 정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독일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약 1,4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 재단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최대 후원자 가운데 하나이다. 재단이 설립된 1995년 이래 성 및 정원의 유지보수를 위해 1억7,500만 유로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

스베르크 성(Schloss Babelsberg), 신 궁전(Neue Palais), 샬로텐부르크 성(Schloss Charlottenburg)과 같이 역사적인 대형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투자금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 독일연방의회가 통과시킨 특별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이 재단에 보수조치를 위한 예산 7,75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했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동등한 규모로 재단의 예산을 연방정부와 공동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독일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중요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이기도 하다.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재단 역시 25개에 달하는 박물관, 기념관, 성곽, 공원,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Herzogin Anna Amalia Bibliothek), 괴테-쉴러 자료실(Goethe-und Schiller-Archiv)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단이다.

2007년에는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이 재개관되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50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투입된 역사적인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에는 재개관 이후 2008년 한 해 9만 1,500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2008년 5월에는 쉴러 박물관이 1년간의 공사를 거쳐 재개관되었다. 다양한 상설 전시를 위해 마련된 화재보호시설과 최신 냉난방시설에만 71만 5,000유로의 연방기금이 투입되었다. 그 밖에 2008년에는 여러 재단의 화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설마련을 위해 140만 유로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2007년 670만 유로에서 2008년 800만 유로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또 다시 830만 유로로 증액되었다. 2010년에는 885만 유로로 투자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7월에는 주요 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는 10년간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본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 연방정부와 튀링엔주는 각각 4,5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연방기금 2,000만 유로와 주정부 기금 2,000만 유로가 바이마르 시립 성곽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 배정되었다. 잔여 예산은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의 화재로 파손된 도서와 인쇄물의 복원, 그리고 괴테-쉴러-자료실 건물의 보수 공사, 바우하우스 박물관 건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재단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재정지원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투자이기도 하다. 2009년 2월에 제출된 제 1차 튀링엔 문화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재단은 매년 4,400만 유로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강화되고 있다.

나. '동독지역 국가문화시설 투자' 사업

2004년에 계획되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독지역 국가문화시설 투자' 사업을 통해,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시작된 구동독 지역의 문화시설 유지와 복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유럽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시설들의 심각한 훼손을 줄여나가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약 600만 유로의 연방기금이 투입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유럽연합, 제3기관을 통해 예산의 50%를 충당하고 있는 각 주정부는 예산 사용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제출하게 된다. 2009년에는 프랑크푸르트/오데르 클라이스트 박물관(Kleist-Museum in Frankfurt/Oder), 슈베린 국립박물관(Staatliche Museum in Schwerin) 및 슈베린 성(das Schloss in Schwerin), 드레스덴 독일위생박물관(Deutsche Hygiene-Museum in Dresden), 할레 프랑켄 재단(Franckeschen Stiftungen in Halle), 튀링엔 성 및 정원 보호재단(Stiftung Thüringen Schlösser und Gärten) 등이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

2. 연방문화재단

2002년 1월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던 연방문화재단이 마침내 설립되었다. 연방정부가 이 재단을 잘레(Saale)강 유역 할레시에 설립한 것은 구동독 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을 표명하고, 협력적 문화연방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문화재단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방문화재단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다. 재단 설립초기인 2002년에는 1,300만 유로, 2009년에는 약 3,6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3.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과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가.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

독일연방공화국의 주요 헌법기관들과 정당, 협회, 각국 대사관, 여러 언론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베를린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이다. 연방정부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통일과 함께 베를린이 갖고 있는 수도로서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화적 자긍심은 더욱 강화되었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문화강국의 특성을 수도 베를린에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만 한다. 또한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정부는 문화수도 건설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베를린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2008년에도 4억 3,000만 유로를 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베를린 문화사업으로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독일 역사박물관(Deutsche Historische Museum), 베를린 유대인박물관(Jüdische Museum Berlin), 베를린 연극제(Berliner Festspiele), 베를린 국제영화제(Internationalen Filmfestspiele Berlin), 세계 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 베를린 방송교향악단(Rundfunk Orchester und Chöre GmbH), 베를린 예술아카데미(Akademie der Künste), 독일영화자료관(Deutsche Kinemathek), 도이체벨레 방송국(Deutsche Welle), 홀로코스트 기념비(Gedenkstätten zur Erinnerung an den Holocaust), 구동독 공산당의 부당행위 및 장벽건설 추모비 등이 있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문화수도 베를린 재정지원조약을 토대로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의 문화지원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는 2010년에 시작되는 운터덴린덴 국립 오페라(Staatsoper Unter den Linden)의 보수비용 전체인 2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베를린 주정부는 베를린 오페라 재단에 투입되는 주정부 예산으로 운터덴린덴 국립 오페라에 2008년부터 매년 4,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기금은 혁신적인 베를린 문화를 창조할 뿐 아니라, 독일을 넘어 해외에까지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기금은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협력 강화와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베를린 문화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이다. 연방정부는 전체 보조금의 75%를 차지하는 1억 유로를 재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이 실행하는 보수 및 재건비용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수·재건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손꼽히는 공사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를린의 ‘박물관 섬(Museumsinsel)’이다. 구(舊)국립갤러리(Alten Nationalgalerie)(2001년)와 보데 박물관(Bodemuseum)(2006년)이 재개관된 후, 2009년 10월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훼손되었으며, 이집트 박물관과 원시시대 박물관을 위해 보수된 신박물관이 곧 개관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섬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현관건물의 신축이 계획중이다. 본 계획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박물관 섬 공사에 투입될 전체 비용은 약 13억 유로로 추산된다. 특히 페그라몬 박물관(Pergamonmuseum) 보수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전망이다. 현재 페그라몬 박물관은 사전 보수공사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현재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베를린 국립도서관의 열람실 신축과 건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중이다. 최신시설을 갖춘 열람실의 완공과 개관은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베를린 국립도서관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는 201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공사와 보수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은 4억 7,500만 유로이다.

베를린 성 재건과 훔볼트 포럼을 위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08년에도 수도 베를린의 가장 중요한 문화투자계획중 하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앞으로 베를린 국립박물관의 비유럽권 전시물과 훔볼트 대학의 역사적인 학술자료, 중앙도서관과 주립도서관의 자료들이 자리하게 될 이 신축공사의 시작은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독일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가 책정한 공사예산은 최대 5억 5,200만 유로로, 이 가운데 베를린 주정부와 민간 기부자들이 3,200만 유로를 지원했다.

4. 독일국립도서관

1912년 건축된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도서관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도서관, 베를린의 독일 음악도서관과 더불어 '독일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은 국립 도서관이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의 제4차 증축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건물의 상량식은 2009년 3월에 개최되었다. 제 4차 증축공사를 통해 신문잡지실이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독일도서관 소속의 독일 도서관·문서 박물관을 위한 전시실과 열람실, 사무실 등이 신축되고, 건물의 외관이 보수될 예정이다. 독일 도서관의 증축공사를 통해 현재 베를린에 소장된 독일 음악자료가 독일도서관으로 이전될 것이다. 총 공사비용은 약 5,000만 유로이며, 완공은 2010년으로 예상된다.

5. 소르비아 소수민족 지원사업

통일조약(EV) 의정서 제35조 제14호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소르비아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방문화부는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에만 살고 있는 소르비아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지원금은 바우첸(Bautzen)에 위치한 '소르비아 민족재단(Stiftung für das sorbische Volk)'과 재단 산하문화기관의 소르비아 언어·문화 보존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09년 연방정부는 820만 유로를 지원했다. 현재 독일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60만 유로의 사용을 차단한 상태이지만, 해당 예산의 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작센 주정부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예산 투입비중이 연방정부의 예산 투입비중과 동등해야 함)은 이미 충족된 상태이다. 예산사용을 위한 신청서가 곧 제출될 예정이다.

6. 문화산업

구동독지역의 문화산업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성장과 고용 부문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온 산업이다. 독일의 문화사업은 크게 국가 지원 차원의 문화산업과 상업적으로 문화상품을 생산해내고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문화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간차원의 문화사업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포함된다.

가. 문화산업의 경제적 의미

문화산업은 지난 20년간 독일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경제 전분야의 평균성장률보다 더 큰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지역에서조차 전체 경제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문화산업이 갖는 경제적 의미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2만 5,000개에 달하는 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2006년 1,750만 유로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다. 문화산업은 베를린에서 1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미술시장은 베를린 문화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매우 많은 갤러리들이 베를린에 새로 등지를 틀었는데, 이 중에는 뉴욕과 런던, 로스앤젤레스의 국제적인 대형 갤러리의 지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타 구동독 지역들도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이프치히는 전통적인 도서출판시장으로서 유명하고, 드레스덴에는 드레스덴 특유의 고전적인 예술적 분위기가 있으며, 바이마르는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요람'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전지역에서 다양한 전통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지역 이니셔티브들의 문화산업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포츠담에 새로 개관한 한스-오토 극장(Hans-Otto-Theater)에서는 포츠담 시의 지원을 통해 대안적이며 실험적인 예술 형태가 청소년 근로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펼쳐지고 있다.

문화는 구동독 지역 각지의 낙후된 지역경제의 기반을 재건하고 문화자원을 새로이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동력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크베들린부르크(Qeudlinburg), 슈트랄준트(Stralsund), 비스마르(Wismar) 지역의 유명 문화관광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복원·보수된 여러 문화기관들이 속한다.

나.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창조적인 패기는 넘치지만, 안정적인 재정기반과 경영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성장의 기회와 해외시

장으로의 진출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모든 문화산업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전분야를 통틀어 지원하는 산업육성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계형창업과 중소기업육성, 신기술장려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문화창조산업'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역시 문화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구동독 지역의 문화기관과 프로젝트에 투입한 연방정부 예산은 문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연방정부의 '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 발족행사가 열렸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국적으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 분야의 요구에 발맞추어 2009년 여름까지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독일영화진흥기금(DFFF)의 지원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연방정부의 문화산업 육성계획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분야는 구동독 지역의 영화산업이다. 2012년까지 지원되는 본 기금은 매년 6천만 유로를 지원하며, 독일에서 제작되는 영화 제작비의 25%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제작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일영화진흥기금은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국제규모의 대형영화 제작을 독일로 유치해, 주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영화제작자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독일에서 제작된 73편의 해외합작영화에만 7억 9,800만 유로의 제작비가 투자되었다. 이를 통해 구동독 지역의 영화 제작자와 영화기술 산업, 영화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과 더불어 인기 영화 촬영지로 손꼽히는 중부독일(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에서도 '하얀 리본(Das weiße Band)', '거친 녀석들(Inglorious Basterds)'과 같은 대규모 영화들이 촬영되었다.

XV. 스포츠

가. 스포츠시설 구축

연방정부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스포츠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프로스포츠 시설구축을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2억 7,600만 유로를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2008년에 투입된 비용은 약 800만 유로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연방정부 스포츠부문 예산인 4억 9,600만 유로의 56%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구동독 지역내 전문 스포츠시설의 개보수를 촉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8년에 시작된 튀링엔주 오버호프(Oberhof) 지역의 스키훈련용 빙상장 건설이다. 이 스키 전용 빙상장의 건설로 장거리 스키경주, 바이애슬론, 노르딕 콤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일년 내내 훈련을 할수 있게 되었다. 약 1,35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비용 가운데 600만 유로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1999년 연방정부는 '황금빛 동부 계획(Goldener Plan Ost)'이라는 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구동독 지역의 낙후된 국민체육 시설을 구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말까지 이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3억 7,000만 유로에 달하는 510개 이상의 국민체육시설 지원사업이 구동독 지역과 동베를린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연방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위해 6,9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도 국민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 응용훈련학연구소 / 스포츠기기 연구개발원

응용훈련학연구소(IAT)와 스포츠기기 연구개발원(FES)은 통일조약 제39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스포츠연구의 핵심기관인 두 기관은 전문스포츠와 신진스포츠 종목에서 필요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선수와 종목에 따라 구체적이며, 여러 종목과의 연관성과 복합성을 고려하는 훈련 기술을 개발하고 스포츠과학을 연구한다. 2009년 IAT와 FES는 11,696,000유로의 연방예산을 지원받았다.

다. 올림픽 선수촌

구동독 지역에서 연방정부는 베를린지역(대부분의 올림픽 관련 스포츠시설은 구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6군데 올림픽 선수촌(브란덴부르크주, 켐니츠/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막테부르크/할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튀링겐주)을 지원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은 연방스포츠전문협회 소속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스포츠의학, 물리치료, 훈련학,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선수촌은 2008년 연방정부로부터 1,470만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올림픽 선수촌은 전문선수 관리와 코치 고용 활성화를 통한 신인선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예산을 통해 스포츠 기숙학교와 학생 신분의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가 포함된 '체육인의 집(Häuser der Athleten)'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도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연방지원이 예상된다.

라. 연방체육육성센터

연방체육육성센터 네 곳 가운데 하나는 구동독 지역의 킨바움(Kienbaum)에 위치하고 있다. 킨바움센터는 2008년 연방으로부터 약 12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2009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연방지원이 예상된다.

마. 연방경찰의 전문스포츠 지원

연방경찰의 전문스포츠 지원은 엘리트스포츠협회(Spitzensportverbände)의 국가대표선수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은퇴후에도 경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10년전부터 코트부스(Cottbus) 올림픽 선수촌내에서 연방경찰 전문스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종목을 나누어 육상, 유도, 사이클, 카누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8명의 연방경찰 소속 선수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명의 선수들이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었다. 지금까지 연방경찰 소속 전문스포츠 선수들은

국내외 대회를 통해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바. 연방군의 전문스포츠 지원

국가대표선수들을 선수단으로 구성해 지원하고 있는 연방군은 독일 전문스포츠인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 15개의 연방군 선수단 중 3개가 구동독 지역에 있다(프랑켄베르크, 오데르 강변 프랑크푸르트, 오버호프). 베를린의 연방군 선수단을 포함하면 현재 220명의 전문스포츠 선수들이 구동독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훈련은 선수들이 소속된 협회의 해당지역 올림픽선수촌과 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공적인 메달 획득을 위해 연방군은 모든 종류의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XVI. 독일사회의 내적통일 강화

1. 사회적 참여

활력이 넘치는 시민사회는 동서독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독일이라는 국가와 독일의 민주주의는 독일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시민의 사회적 참여는 국가의 행위와 복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라는 엄청난 사회적 도전이 독일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결속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 넘치고 적극적이며, 서로 화합하는 시민 공동체는 지역의 생활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시민 공동체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도 연대적 책임을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은 아이디어와 시민참여의 나라이다. 2,3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많은 협회와 단체, 이니셔티브, 재단 등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 돈, 아이디어를 투자하고 있다. 여러 기업들 역시 대중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시민적 참여를 뜻하는 Corporate Citizenship을 건설해 나가는 기업들은 점점 더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 참여 이니셔티브인 '서로 함께-서로를 위해'를 통해 연방정부는 시민참여의 인정

과 발전, 지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시민참여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홈페이지 www.initiative-civilengagement.de를 통해 시민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 시민사회 플랫폼(www.enagierte-in-deutschland.de)을 통해 통합 실시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이에 다가서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시민참여를 위해 연방네트워크에 설립된 '참여를 위한 국가포럼'은 주제별로 구체적인 담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본 포럼의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일치된 참여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참여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2. 반극우주의 프로그램

극우주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는 극우주의 퇴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2년 극우주의와 이방인 혐오, 반유대주의, 폭력(연방정부 보고서 BT-Drs. 14/9519참조)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4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 이주자 편입지원
- 시민사회 강화와 용감한 시민 지원
- 범인과 그 주변인물에 초점을 맞춘 조치

연방정부는 '다양성의 장점,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이라는 연방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관용과 민주주의를 장려하며, 극우주의에 물든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다. 이 극우주의 예방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는 매년 1,9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점 지원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지역 행동계획'을 통한 통합지역전략 수립과 주제별 모델 프로젝트의 지원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90개 지역 행동계획 가운데 60개 계

획이 구동독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반유대주의 퇴치와 극우주의에 물든 청소년 선도, 이민자 사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역적, 범지역적 모델 프로젝트 92개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 - 극우주의 퇴치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네트워크와 위기해결반은 연간 5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극우주의를 사건별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연방주에 상담 네트워크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극우주의나 외국인 적대주의, 반유대주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동해결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동해결반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 네트워크와 이동해결반에 대한 지원은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구서독 지역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XENOS - 통합과 다양성’이라는 연방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적 태도와 시민참여의 강화, 관용과 세계 개방성의 장려를 노동시장과 직결된 조치들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적대주의와 인종주의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들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이민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제1차 시행기간을 통해 2010년까지 총 1억 7,5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제1차 사업들은 2008년말에 완료되었다. 이를 위해 총 1억 유로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1,800만 유로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충당되었다. 또 약 5,700만 유로는 개별 계획의 공동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되었다. 총 사업의 1/3이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된다. 2012년부터는 유사한 예산규모로 제2차 지원이 시작된다.

극우파 탈퇴를 위한 상담은 XENOS 특별프로그램인 ‘도약을 위한 탈퇴’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극우주의적 성향을 타파하고, 극우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 사회와 직장,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도모하는 극우파 탈퇴자 이니셔티브이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극우파 탈퇴를 원하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직업전환을 도모하는 전략개발 프로젝트들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극우파 탈퇴자 이니셔티브간의 노하우 교환과 국가간 경험교환 프로젝트도 지원될 예정이다. 본 특별프로그램은 약 80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받았다. 이 가운데 500만 유로가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200만 유로가 연방기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나머지

100만 유로는 개별계획의 공동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되었다. 2009년 4월부터는 18개 극우파 탈퇴자 이니셔티브(이 가운데 절반이 구동독 지역)가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체류허가자 및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노동시장 지원에 관한 유럽사회기금(ESF) 연방프로그램은 XENOS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43개 프로젝트(구동독 지역 9개)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체류허가자 및 난민 지원, 교육, 복지 분야의 부처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체류허가자들과 난민들이 교육과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3,400만 유로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00만 유로가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1,200만 유로가 연방기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나머지 300만 유로는 각 계획의 공동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다양성의 지역'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극우주의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성의 지역'이라는 훈장을 획득하기 위해 본 이니셔티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다양성의 지역'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인 www.orte-der-vielfalt.de에 소개된다.

연방정부는 극우주의 퇴치를 위해 극우주의 현상의 다양성을 고려해 탄압적 억압적 요소를 갖춘 다방면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극우파 단체 조직 금지(1992년부터 실행되어 온 연방국무부의 총 29개 금지 조치), 인터넷상의 극우파 범죄행위 수사, 극우 성향의 스킨헤드 콘서트 불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의 극우파 탈퇴 프로그램은 '자력구제를 위한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극우파 회원들을 선도해 극우주의 성향의 약화를 유도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된 극우파 탈퇴 프로그램에는 1000여 건 이상의 신청이 등록되었으며, 이 가운데 120명에 달하는 극우파 회원들이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연방정치교육센터(bpb)는 극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극단주의 퇴치' 부서를 신

설했다. 교육기관인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극단적 의견이나 태도가 형성될 때 교육에 미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뿌리깊은 극단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법, 극단적 의견을 건설적이고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시민 사회적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과 같은 주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힘쓰고 있다

- 극단주의에 물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극단주의자 선도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
- 청소년 문화 선도
- 극단주의 퇴치를 위한 시민 사회적 조직강화 및 네트워크화
- '인종차별 없는 학교(Schule ohne Rassismus)' 지원
- jugendschutz.net 홈페이지 지원을 통한 극우적 내용에 관한 인터넷 모니터링

그밖에 구동독 지역의 사회적 공간과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략적 교육조치 검증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업무분야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 극우주의의 주범으로 하여금 폭력을 권장하는 주변사회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책임적인 주변 환경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연구와 평가와의 밀접한 조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현재 본 프로젝트는 안클람(Anklam)과 니더라우지츠(Niederlausitz)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가.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합 - 극단주의와 폭력 퇴치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합 - 극단주의와 폭력 퇴치(BfDT)'는 실천 민주주의 장려 분야의 시민사회 참여자들을 위한 단체이다. 본 단체는 2000년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과 이니셔티브의 참여와 극단주의의 모든 형태를 퇴치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단체는 시민을 위한 제1차 서비스기관이자,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밖에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휘하고 있는 이 단체는 지역 참여자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기타 프로젝트와의 협조망을 구축해,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정보 교환이다. 우수사례(Best-Practice) 프로젝트와 효과가 입증된 계획들을 다른 지역에 전파해, 적용시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 단체는 실질적인 통합지원과 스포츠에서의 관용이라는 새로운 주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동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위주의 노력과 더불어 이 단체는 대규모 청소년 회의와 헌법제정의 날 기념행사, 빅토르-클렘퍼(Victor-Klemper) 대회,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운동’ Best-Practice 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이 단체는 독일을 위한 역량지도의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리게 될 모범적인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독일을 위한 역량지도를 통해 지역별, 주제별로 자신이 원하는 연합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

3. 자유통일 기념비

2008년 12월 4일 독일연방의회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이해 ‘자유통일 기념비(Freiheits- und Einheitsdenkmal)’ 건립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을 통해 독일 연방회의는 작센주와 라이프치히시와 공동으로 평화혁명에 기여한 라이프치히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한다. 독일연방회의는 ‘자유통일 기념비’ 건립을 위해 1,50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해 2008년 12월 19일 본 기념비의 설립을 위한 기획안을 채택하였다.

4.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 및 배상

구동독 지역의 과거사 규명을 통해서 독일의 내적통일을 위한 중요한 축이 마련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피해자에 대한 복권과 배상 문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의 기대에 올바로 부응하기 위해 통일조약 제17조에 근거해 복권법이 마련되었다. 이 복권법은 형사, 행정, 근로부문에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치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오명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복권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연방정부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피해자에 대한 복권과 보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제 14/15차 입법기에 연방정부는 보상금을 크게 확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구동독 지역 정치 박해 피해자를 위한 복권 규정 개선을 위한 제 3차 법'을 통해 제 16차 입법기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피해자들을 위한 연금법과 피해자와 피해자협회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승인되었다. 지금까지 6만 3,700명의 피해자들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피해자연금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승인된 결정은 약 4만 3,000건에 이른다(2008년 12월 31일 기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8년까지 복권법 규정에 따라(형사적복권법 및 근로복권법에 따라) 9억2,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했다.

5. 귀향자 재단 폐지법의 신규정

'귀향자 재단 폐지 및 구(舊)정치수감자 재단의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귀향자 재단 폐지법 - HKStAufhG)'의 주요 규정을 통해 정치수감자 재단의 재정이 300만 유로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오데르와 나이세 구동독 지역의 민간인 억류자와 추방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동독 전쟁포로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동독 귀향자 보상금' 신청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1회로 지급이 제한된 이 보상금의 액수는 구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귀향자 재단 폐지법에 따라 귀향자 재단은 200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귀향자 재단의 업무는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6. 물질적 자산손해에 대한 변상

통일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재산문제규정청(Amt fü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과 연방미해결재산문제규정중앙청(BADV)에서는 1,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미해결 재산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치국가에 위반되는 자산손해배상건의 배상승인률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99%가 넘는다(나치탄압 배상신청 제외). 배상법과 보상법에 따른 55만여건의 신청 가운데 47만 4천 건이 보상 승인되었다(86%). 1945년부터 2008년말까지 재산몰수 배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1억 9,000만 유로에 이른다.

나치탄압 배상신청은 2004년부터 연방미해결재산문제규정중앙청(BADV)에서 처리하고 있다. 나치탄압 배상신청 건수는 21만 2,000여 건에 이른다. 기업관련 신청 건수를 포함하면 나치탄압 배상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만 6,000건에 대한 보상이 승인되었으며(40.5%), 2008년말까지 배상기금을 통해 15억 6,000만 유로가 희생자와 상속자에게 지급되었다.

7.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규명연방재단

연방정부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과거사 규명 재단'을 통해 구동독의 과거사와 독일의 분단이 가져온 결과를 규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분단과 구동독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당시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시키고, 이를 현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과거사규명 재단은 그간 독일의 분단과 구동독의 독재사 문제를 다루는 1,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총 2,8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과거사 규명 재단'의 서비스와 활동의 지원 대상은 구동독 모든 지역의 국민들이다. 분단과 구동독의 독재사는 구동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8. 구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BStU)

구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BStU, 일명 '슈타지 문서관리청')는 슈타지 문서관리법(StUG)에 의거해 슈타지의 문서를 개봉, 보관, 이용하여 슈타지(MfS)의 활동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의 중앙기관은 베를린에 있으며, 구동독 주 별로 지소가 마련되어 있다.

출판물의 발행과 강연, 행사를 통해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은 슈타지 활동의 구조와 방법,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 및 전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은 연방정부로부터 약 9,0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슈타지문서법이 발효된 이래 250만명의 민간인들이 슈타지 문서에 대한 정보와 열람, 인도를 신청했다. 2008년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8만 7,000건이 넘는다.

2006년에 슈타지문서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정치(예: 국회의원), 행정(예: 장관), 안보분야의 고위인사에 관한 검증은 여전히 가능하다. 2008년 해당 분야의 검증 건수는 2만 2,000건에 달했다.

2008년 연구소와 언론계의 신청건수는 총 1,418건을 기록했다.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설치이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연구소와 언론계의 신청건수는 2만 1,000여 건에 이른다.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은 복권과 배상,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건도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권과 배상,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한 신청건수는 45만 5,000건 이상이다. 구동독의 정치탄압 희생자들을 위한 제3차 복권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구동독 정치탄압 희생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최소 6개월 이상 구금된 적이 있을 경우 추가연금을 매달 지급 받는다. 추가연금 승인절차와 관련해 주정부의 담당청들은 승인 불허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측에 문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된 추가연금 건수는 2만 8,654건이다.

공산주의 독재청산에 있어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공산독재의 붕괴 이래 과거 비밀경찰의 서류 관리와 열람을 책임지는 국가기관들이 독일 이외에도 6개 국가에 설립되었다.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의 주도 하에 2008년 12월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의 해당기관들이 네트워크 설립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9. 연방정치교육센터

연방정치교육센터(bpb)는 국민들에게 독일의 분단, 독일의 통일, 독일의 역사라는 복합테마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인쇄물, 행사, 인터넷을 통해 소련 점령과 동독의 역사, 독일의 분단과 통일,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독재 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과 성인 교육에 있어 정치교육이라는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자유민주질서의 원칙과 민주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이해를 일깨우도록 한다.
2. 새로운 연구결과를 토론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며, 연구결과를 실제 정치교육에 접목시키는 창구 역할을 한다.
3. 타기관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의 특정역량을 모아 협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토대는 문서와 전문서적, 증언기록 등을 출판물이나 DVD, www.17juni.de, www.chronik-der-mauer.de, www.jugendopposition.de, www.bpb.de와 같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음악과 영화, 전시 등 현대적 매체를 통해 독일분단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수법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정치교육이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의 역사기념일(기본법 제정 60주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들은 독일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대하고, 구동독의 역사와 분단, 통일에 대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이번 역사기념일을 계기로 해당주제에 관한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행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상(einheitspreis) - 독일통일 시민상

독일의 내적통일은 시민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내적통일의 실현은 시민들이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길 때만 가능해 진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이러한 값진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상금 4만 유로와 함께 '독일통일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내적통일에 기여한 사람과 프로젝트에 대한 제 7차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이 통일상(einheitspreis)은 동서통합을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일반대중에 알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아이디어로 독일의 내적통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독일통일시민상의 목적이다.

부 록

제 3부. 구동독 지역을 위한 연방정부 대책들	166
I. 경제활성화, 경제위기극복 및 산업입지 개발	166
II. 고용정책	169
III. 교육 및 직업교육	171
IV. 혁신력 강화	174
V. 동부지역의 대학교육·연구 입지	176
VI. 인프라	178
VII. 도시개발	179
VIII. 농촌지역의 비전 제시	181
IX. 가족·평등·청소년정책 및 노인정책	183
X. 예술, 문화, 스포츠	188
XI. 독일사회의 내적통일 강화	189

제 3부. 구동독 지역을 위한 연방정부 대책들

대책명	내 용	목표/기대효과	현황/일정
I. 경제활성화, 경제위기극복 및 산업입지 개발			
투자보조금법 2010	2010~2013년 기간중 제조업,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및 요식·숙박업의 신규 투자계획 장려. [지원금액] 23억 유로	구동독지역 기반산업 및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08년 12월 7일자 투자보조법 2007의 후속규정 마련 및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BGBl I 페이지 2,350) [유효기간] 2010~2013년
투자보조금법 2007	2009년까지 제조업,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및 요식·숙박업 업체의 신규투자 계획 장려. [투자금액] 2009년: 14억 유로, 2010년: 11억 유로 (2009년 5월 '세금추산' 기준)	구동독지역 기반산업 및 관광산업 강화	2007년 2월 23일 고시된 투자보조금법 2007 (BGBl I 페이지 282), 2008년 12월 7일자 투자보조금법 2007의 후속 규정 마련 및 개정에 관한 법률 제2조(BGBl I. 페이지 2,350) [유효기간] 2009년말
구동독 지역을 위한 특별연방보완지침(So-BEZ); 2차 연대협약, Korb I	분단으로 인한 인프라 평준화 필요성에 따라 특수부채의 지원 및 평균 이하 수준의 지방재정의 평준화를 위한 SoBEZ	2019년까지 구동독(베를린 포함) 인프라 개선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특수부채의 완벽한 해결	재정균형법 제11조 제3항에 2019년 기한부 누감규정 명시

<p>‘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과제(GRW)</p>	<p>산업투자 지원 및 지역경제 인프라 및 지역관리·첨단관리 계획에 대한 투자지원</p> <p>2009년과 2010년 구동독 지역을 위해 경기부양패키지로부터 1억 유로 증액</p>	<p>산업투자 지원은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및 확보에 기여하고, 취약지역의 수입구조를 개선이 가능</p> <p>역량있는 인프라 강화는 기업입주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취약지역의 경쟁력 강화 가능</p>	<p>무기한</p>
<p>구동독 지역에 대한 보증 (1,000만 유로부터)</p>	<p>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용으로 기업에 신용보증 제공</p>	<p>안정성 취약산업 기업들의 육성</p>	<p>무기한</p>
<p>‘독일 창업자 코칭’ 연방프로그램</p>	<p>생계형 창업자들의 개별 상담지원 및 방향설정. 창업준비 단계는 주정부가 관할하고, 창업이후는 연방정부가 지원</p> <p>[핵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업소를 통한 서비스 지원 • 창업기간을 5년으로 정의 • 주정부를 통해 프로그램 조건 개선의 여지를 둠 <p>생계형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정보·교육행사 지원 및 장기기업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업무도 지속 시행</p>	<p>생계형 창업분야의 투명성, 통일성 및 효율성 확보</p>	<p>2007년 10월 발효</p> <p>2008년 10월 ‘실업 대신 창업’ 프로그램 시작되면서, 이 프로그램 보완됨.</p>

전국여성창업자지원청(bga)	<p>상담,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여성의 기업활동여건 강화. 16개 주정부에 전국적인 정보서비스 센터와 지역 지점을 설립, 약 1,600명의 bga 전문여성 활동.</p> <p>중앙정보플랫폼 www.gruenderinnenaagentur.de는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산업 전분야에서의 여성 기업가의 자립과 창업, 사업 진행 및 후속 과정을 연계지원해준다. (www.gruenderinnenagentur.de).</p>	<p>여성의 기업활동 및 자영업 활동 장려. 구동독 지역에서 현재 여성 자영업자수는 작센-안할트주가 31.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가 34.7%를 보이고 있다.</p> <p>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을 맞아 여성들의 활동은 증가 추세</p>	2010년 2월 28일 지원종료.
기업회생(Turn-Around) 상담	<p>중소기업의 업무능력 및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기업체 상담 및 코칭서비스</p> <p>뿐만 아니라 재건신용은행의 '원탁회의'에 앞서 기업분석을 실시할 때에도 활용</p>	중소기업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p>2009년 5월부터 발효</p> <p>연방경제부의 예산지원으로 2009/2010년 원탁회의 프로그램 강화</p>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특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수출상담도 받을수 있음. 목표국가로의 개별출장 및 해외업체들과의 상담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임.	구동독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생산 및 서비스 매출증대가 이 마케팅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중

산업입지 마케팅, 구동독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자 홍보, 대외경제지원	경제·투자·기술 입지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및 투자자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사업체지원. 독일무역투자진흥처가 지원	성장 및 고용 강화	지속 실시중
유럽부흥계획 창업기금 (ERP-Startfonds)	창립 10년까지의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본 제공. 민간 선도 투자자(Lead investor)들을 중심으로한 공동지원은 최대 300만 유로까지 가능	신생 벤처기업, 특히 구동독 지역 업체의 재정 여건 개선	2004년 11월 1일 기금 시작 (2억 5,000만 유로 규모) 2009년 1월 1일 2억 2,000만 유로 증액
유럽부흥계획/유럽투자기금의 엠브렐라 펀드 (ERF/EIF-Dachfonds)	독일에 주안점을 둔 전문 벤처캐피탈 기금에 기금투자자로서 참여	투자시장 강화와 민간 및 공공 분야 투자자들에게 추가자금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2004년 1월부터 시작. 투자 5년후 기금규모를 5억 유로에서 10억 유로로 2배 증가시킬 계획
II. 고용정책			
지출초과분에 대한 보상형 고용기회 프로그램	경제활동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생계형 구직자들을 위해 추가업무와 공공업무 제공.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생계형 구직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 장려.	2005년 1월 1일 이후 법규화.
추가보수 지급형 고용기회 프로그램	반드시 공공업무일 필요가 없는 추가업무 일자리. 사회보험가입 정규고용관계를 장려하되 실업보험금 납부면제혜택을 제공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생계형 구직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 장려.	2005년 1월 1일 이후 법규화.

고용지원 보조금 (JobPerspektive)	경제활동능력은 있는데, 구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어 장기 실직상태에 있는 생계형 구직자들을 위한 지원책.	경제활동 참여 및 장기적인 실업수당 II 수혜대상의 회피.	2007년 10월 1일 이후 법규 성문화.
‘미래 50+(Perspektive 50plus)’ 연방프로그램	이 연방프로그램은 고령자의 취업능력 및 가능성 제고를 위한 ‘Initiative 50plus’의 일부임. 62개 지역 고용협정은 장기 고령실업자의 노동시장 재편입을 지원해주고 있음. 이 고용협정에는 지역적 필요에 따른 통합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1 단계에는 약 8만명에 이르는 장기 고령 실업자가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2,500명이 일자리를 찾음.	프로그램 2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관 194개,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관 237개 참여). 2008년에는 73,800명 이상의 장기 고령실업자가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9,300명이 일자리를 구함. 2009년에는 약 87,00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약 26,500명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1단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2단계는 2008년 초부터 2010년말 까지 진행중
‘공공인력조달지침 (Kommunal-Kombi,지역콤비)’ 연방프로그램 (장기실업률이 특별히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추가일자리 지원을 위한 연방프로그램)	고용주(시, 군, 구 등 지자체 또는 기타 고용주)들이 사회법전 III 제18조에서 의미하는 장기실직상태이고 적어도 1년간 실업수당 II를 수령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 추가업무와 공공업무를 마련할 경우 지원을 받음. 보조금: 근로자총임금의 50%(최대 500유로, 연방정부가 지원),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 및 사회보험금에 대한 보조금은 200유로(ESF가 지원), 임금 및 사회보험금에 대한 보조금은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00유로씩 인상된다(ESF가 지원).	노동시장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추가 일자리를 창조. 지역 노동시장의 부담 경감, 지역 인프라 개선.	[승인 기간] 2008년 1월~2009년 12월 해당 일자리는 최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원

Ⅲ. 교육 및 직업교육

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구동독 지역의 추가 직업훈련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중 총 4,759만 유로를 지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직자들이 기업체에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8/2009년에 구동독 지역에 약 7,000개의 직업훈련 일자리를 창출
신규직업인(Jobstarter) 프로그램	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직업훈련 문제지역 또는 문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제 필요를 지향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혁신분야에서 추가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 직업훈련상황 및 직업훈련 기회의 질적 개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공시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으며, 2008년에 4차 지원공시가, 2009년에 5차 지원공시가 이뤄짐.
기업연합 직업훈련자리 지원	기업연합 직업훈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업연합 직업훈련자리에 대한 광범위한 소개.	현재 약 100개에 이르는 구동독 지역의 기업연합 직업훈련사업장에서 마련한 약 15,000개의 장기 직업훈련 일자리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이 이뤄짐.

<p>직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조약(2004~2010)</p>	<p>산업계는 2007~2010년 연평균 6만개의 신규 직업교육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3만개의 신규 직업훈련 지원업체를 발굴함. 직업교육후 바로 해당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간 4만개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p> <p>이 직업교육 수료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일자리 4만개를 연방정부가 보장해주고 있음. 연방노동청은 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설정 지원, 직업상담 및 직업준비교육 등 강도 높은 직업훈련서비스 제공</p>	<p>기업의 추가 직업훈련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잠재력 개발을 통해 직업훈련 서비스 개선</p>	<p>조약 방향설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직업훈련조약을 2010년까지 연장,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음. 연방프리랜서 협회(BFB)가 새로운 조약파트너가 되었음.</p> <p>당초 목표는 2008년에 이미 초과 달성되었음.</p>
<p>직업훈련 보조금</p>	<p>직업훈련 보조금을 통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직업훈련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게 추가 직업훈련자리를 마련하고 있음.</p> <p>지원목표는 직업훈련 일자리를 신청한 지 오래된 사람들의 비중을 낮추는 것임. 고용주는 향후 3년간의 직업훈련기간에 듀얼시스템 내에서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원이 필요한 직업훈련자리 물색자들에게 제공해줄 경우 직업훈련생 1명당 4천, 5천, 또는 6천 유로에 이르는 직업훈련 보조금을 1회에 한해 지원받음. 한편,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이 '추가'의 개념을 매우 좁게 제한하고 있음.</p>	<p>추가 직업훈련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 신청등록한지 오래된 사람들 비율을 낮춤.</p>	<p>[시행 기간] 2008년 7월~2010년 12월</p> <p>사회법전 제3권의 개정을 위한 제5차 법률 - 지원이 필요한 젊은이들의 직업훈련 기회 개선을 위한 법률(BGBl I.2008 페이지 1728)</p>

사회초년생 도우미 프로그램	<p>사회초년생 도우미 프로그램은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일반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업훈련생이나 직업인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장기적으로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함.</p> <p>이 프로그램은 졸업 예정학년부터 시작하여 해당 학생이 성공적으로 직업훈련과정에 진입하면 종료되며, 일반학교 졸업후 늦어도 24개월이 지나면 서비스가 중단됨.</p>	학교공부에서 직업훈련까지의 성공적인 전환에 기여	<p>[시행기간] 2008~2014년</p> <p>사회법전 제3권의 개정을 위한 제5차 법률 - 지원이 필요한 젊은이들의 직업훈련 기회 개선 (BGBl I.2008 페이지 1,728).</p>
직업준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직업학교(Hauptschule) 졸업 지원에 대한 요구권리	<p>직업준비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졸업장이 없는 직업훈련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학교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자격증 또는 직업학교 졸업장 취득을 뒤늦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p> <p>이 대책은 일반적으로 10~11개월 지속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됨.</p>	학교졸업장이 없는 청소년 비율을 낮춤.	<p>노동시장정책 수단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관한 법률 (BGBl I.2008 페이지 2,917).</p>

Ⅳ. 혁신력 강화			
하이테크 창업자기금	연구기반형 창업시(창업기간 1년 미만) 50만 유로까지 참여자본을 지원(기업 당 최대 100만 유로까지 지원) 창업자의 자기자본 의무비율은 구동독 지역의 경우 구서독 지역의 10% 수준에 불과	독일 창업자금 지원시장의 활성화.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의 필요성이 높음.	이 기금은 2005년 8월에 시작되었 으며, 투자자금은 5~7년간 사용가능
구동독 지역 외부 공익산업 연구기관의 R&D 장려 - 동부 혁신역량 (INNO-KOM-Ost)	질적으로 훌륭하나, 리스크가 큰 구동족 지역의 외부 공익산업연구기관의 시장 지향적 R&D 프로젝트 지원.	구동독 지역의 연구인프라 강화를 통해, 구동독 지역 경제회복을 장려. R&D 결과를 구동독 지역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전해줌으로써, 경쟁 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조, 보장 하는 것이 목표	[시행기간] 2009년 1월~2013년 12월 지원 프로그램 'INNO-WATT'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외부 공익산업연구 기관 및 산업용 연구부문에 해당.
INNO-KOM-Ost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투자보조 기술 인프라' 시범계획	외부 공익산업연구기관의 장비 및 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대책 지원.	지원 프로그램 'INNO-KOM-Ost'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기관의 혁신능력 유지 및 향상	[시행 기간] 2009년 1월~2009년 12월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 및 기타 시범지역에서의 중소기업 혁신관리 지원	외부 관리·상담 업무를 통해 산업경제 및 수공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제품 및 공정의 혁신 준비활동 및 시행 지원	구동독 지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개발잠재력 제고	[시행 기간] 2009년 1월~2013년 12월
중앙혁신프로그램(ZIM)	개별기업의 R&D 프로젝트(ZIM-SOLO), 직원수 1,000명 미만 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국내외 R&D 협력(ZIM-KOOP),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네트워크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기술경영 외부 관리서비스(ZIM-NEMO) 지원	연구결과의 신속한 상품화, 업체의 혁신·협력·유통 역량 제고, 유통 네트워크 내 공동대응으로 인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제거, 일자리 보장 및 창출, 기업 매출 및 수출 증대	[시행 기간] 2008년 7월~2013년 12월
혁신 구상 '기업 지역'	<p>특수 전문프로그램을 통한 R&D 지원 이외에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모든 주제에 대해 지역 위주의 혁신지원을 실시하고 있음.</p> <p>혁신적 지역성장핵심 구상의 5개 프로그램 지침, 성장핵심 잠재력 모듈, 혁신 포럼, 시장성연구팀(ForMat), 혁신역량(InnoProfile) 및 혁신역량센터(ZIK)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제반여건이 개선됨.</p>	<p>재계, 학계 및 교육계 파트너들이 혁신연합을 구성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적인 역량을 강화함.</p> <p>지역경제 및 연구특성, 전통 및 기존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연합 자체적으로 지원 중점사항을 정의</p>	<p>기업지역의 일환으로, 2008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대됨.</p> <p>ZIK 2차 프로그램 기간에 8개 전략 개념을 추가로 선정해, 첨단연구센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실천중임. ForMaT의 경우에는 2차 지원기간에 27개의 새로운 계획이 추가되었으며, 2009년 초 3차 지원이 시작됨.</p>

V. 동부지역의 대학교육·연구 입지

<p>‘구동독 지역의 첨단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p>	<p>BMBF는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대학, 대학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체들을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주제들에 대해 개방되어 있음.</p> <p>이 계획은 가능한 한 학제간 전략적으로 방향 설정하고 있음. BMBF는 2014년까지 계속되는 두차례의 지원기간에 모두 약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p>	<p>여러지역에서, 범기관적이고 특성화된 역량연합을 이루어내고 구동독 지역의 혁신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연구단지들이 구동독 지역 내에 정착될 것으로 전망</p>	<p>2008년 5월 6개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음. 구동독 지역 경제부와의 협력으로 2008년 말 2차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5월에는 연구연합 11개가 추가로 선정되었음.</p>
<p>대학협약 2020</p>	<p>대학협약 2020은 2개의 과제로 이루어짐. 하나는 대학들이 신입생 채용을 추가 확대하여, 이들이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함. 다른 하나는 독일연구협회(EFG)의 후원으로 성공적 대학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경비지원임. 연방정부는 2007~2010년 대학신입생 채용 확대를 위해 총 5억 6,500만 유로를 지원함.</p> <p>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독일동부의 대학에 대한 마케팅에도 1,000만 유로를 지원하며, 시행기간 2007~2010년에 연방정부는 약 7억 유로를 일괄지원함.</p>	<p>대학협약 제1 과제는 추가 대학입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장기적인 기본의무를 다루고 있음.</p> <p>제2 과제는 연구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일괄지원액으로 연구프로젝트 자금 일체를 후원해주는 것임.(이른바 ‘Overhead’). 이 Overhead 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의 전략능력과 국제경쟁력이 강화됨.</p>	<p>이 대학협약은 2007년 발효되었음. 2008년초부터 프로그램 일괄지원이 특별연구분야와 대학원생, 연구센터 뿐만 아니라 새로 승인된 독일연구협회(DFG)의 기타 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됨. 1차 프로그램 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p>

학계의 생계형창업 (EXIST)	독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문화조성을 위해, 창업유도와 교육, 사업구상 제안 및 창업자코칭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 EXIST 창업자 장학금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창업계획 지원 및 EXIST 연구이전 제도를 통해 특별히 까다로운 기술 관련 창업 지원이 이루어짐.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문화의 지속적 개선 • 학문지식으로부터 경제적 가치 창조로의 지속적인 전환 • 지식기반, 기술지향적 기업 창업건수 증대 및 성공가능성 제고	프로그램은 진행중
‘산업과 과학의 만남’ 혁신 대회	산업계와 과학계의 잠재 파트너들 간의 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및 응용 등 기술 이전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지원. 개별 협력사업 또는 시범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새로운 조직 또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정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짐. 집중 지원대상은 대학, 대학 외부 연구소, 공공 연구기관 및 전문대학임. (협력사업의 틀 내에서).	이 대회의 목표는 구동독 지역 대학을 지역혁신과정의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학문적, 기술적 혁신을 산업에 응용하고 제품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대됨.	이 대회는 2007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총 3차 심사를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함.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최장 2011년까지 지원받음.
대학속의 가정	모범적인 친가정 학업 구상을 제시하는 독일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한 전국대회에서는 구동독 지역 3개 대학이 수상	이 경쟁대회는 부모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후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대회는 2008년 시작됨.

VI. 인프라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	동서부간 교통망 개선 및 구동독 지역에 유용한 인프라 확대구축	각 연장부 및 산업체 입주단지 사이의 교통관계 개선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이 마무리되었음. 나머지 프로젝트도 현재 준비중
선택프로그램(OP)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교통연맹 2007~2013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예산을 연방교통망 확대에 사용	구동독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잠재요소로서 지역간 교통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유럽 교통망 및 기타 지역간 주요 교통연결망 확대 • 주요 산업입지에 대한 교통연계 개선 • 친환경 교통이동수단으로의 교통중심 이동 및 효율 개선 	이 프로그램은 2007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VII. 도시개발			
도시개발 장려	<p>다음 프로그램의 틀에서 2009년도에 구 동독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보장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도시(예산 약 2,010만 유로) • 동부도시정비(예산 약 1억 2,080만 유로) • 적극적 도심·도시지구 중심부 (예산 약 950만 유로) • 도시건축학적 문화재 보호 (예산 약 8,500만 유로) • 도시건축학적 정비 및 개발 (예산 약 4,500만 유로) • 프로그램 예산 총 약 2억 8,040만 유로 	<p>적절한 도시개발장려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들이 추구됨</p> <p>도시건축학적인 정비 및 개발의 틀에서 도심 및 도시지구의 강화, 특히 경제적·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맞고있는 도시 및 지자체 지원, 실업률 및 도시공동화 감소 (주택경제 안정화).</p> <p>경제개발을 위한 매력요소 및 관광 잠재요소로서의 건축문화 유산의 보전.</p>	<p>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시건설지원 행정협정 2009가 발효중임.</p>
구(舊)채무청산규정(AHGV)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구채무 상환 지원	<p>주택철거시 추가적인 구채무 상환 지원 (AHGV에 따라 2003년까지 신청서 접수). 2008년부터는 도시건축학적 측면을 고려해 낡은 건물을 보수,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단순한 채무탕감지원 대신에 보수자금까지 지원해줌. 철거기한은 2010년에서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p>	<p>도시정비 지원 및 주택경제 강화</p>	<p>2001년 1월부터 업체들은 주택 철거시 1평방미터 당 최고 77유로까지 지원하며, 이는 2013년까지 유효함. 승인된 예산 11억 유로 가운데 약 75%가 이미 지불된 상태임.</p>

유네스코 지정 독일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투자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급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독일의 문화·자연유산 및 도시건축학적 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집중 대책에 2009~2013년 모두 1억 5,0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이 투자프로그램은 지역보유 세계적 역사유산을 후손들을 위해 보존하고, 또 세계유산의 명성에 걸맞는 대책을 요구하는 해당지역의 노력을 지원해줌. 이렇게 투자된 자금은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독일에 지정된 33개 세계유산에 대해 2009년 3월 31일까지 연방정부(BBSR)에 프로젝트 신청이 접수되었음. 현재 약 290개 신청에 대해 그 완성도와 지원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연방정부는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언을 듣게 됨. 2009년 중반이면 최초 지원대상이 결정될 예정임.
투자협약	약 6,690만 유로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해당 주정부에 지원이 이뤄짐.	지역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정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협정인 투자협약 2009가 발효중
대규모 주택단지 대회	‘통합 도시구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에너지 효율화 보수공사’ 대회가 2009년 1월 20일 실시되었음. 이 대회는 통합 도시구역개발 개념의 고안 및 발전을 고무하기 위함임.	이 대회는 개별건물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모의 보수, 개발을 고무시키게 될 것임. 에너지 효율, 주택경제, 도시건축,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대적인 보수와 단지가치 제고까지 기대된다.	주택협회와 주택소유주협회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이 대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2009년 2월 27일까지 BBSR에 많이 문의하였으며, 2009년 5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거보조비 개정안 2009	<p>2009년 1월 1일부터 주거보조비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음. 개선된 예산은 연간 총 5억 2,000만 유로에 이름.(연방정부와 주정부 합계).</p> <p>최근 난방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부분도 이 개혁안에 새로 추가되었음. 기존의 4개 건축연도등급은 신축건물 수준으로 통합되었고, 최대 월세 지원금은 10%로 확대되었음.</p> <p>또한, 2009년 초에는 1회에 한해 추가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였음. (1회성 비용 1억 2,000만 유로).</p>	<p>개선된 주거보조비로 약 80만 가구가 도움을 받고 있음.</p> <p>추가자녀수당과 더불어, 주거보조비는 실업수당 II를 받고 있는 유자녀 가정에도 지급됨.</p> <p>구서독 지역보다 구동독 지역에 주거보조비를 수령받는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주거보조비 개정안 2009로 인해 수혜를 받는 가구수 역시 구동독 지역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p>	2009년 1월 1일 발효
----------------	---	---	----------------

VIII. 농촌지역의 비전 제시

토지매입개정법률 (FIERwÄand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정협약 2005 내용의 이행 : 국가전체의 대표격인 연방정부 소유 자연보호구역을 연방재단 또는 주정부에 무상이전하기 위한 법적 토대 - 새로운 유럽연합 지원법을 고려한 토지 매입 가속화를 위한 법적 가능성 마련 -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대조건의 완화 - 매입가 조사에 관한 법적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 목적을 위해 소중한 자연구역의 장기적 확보 - 토지이용관리 유한회사(BVVG)의 계속적인 농림지 민영화 과정 지원 	2009년 중 발효
--------------------------	---	---	------------

<p>공동과제 '농업구조 및 해안 보호 개선(GAK)'</p>	<p>농촌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포함해 농업구조와 농촌개발 개선(연방정부와 주정부가 6:4로 지원) 및 해안보호(연방정부와 주정부가 7:3으로 지원)를 위한 집중 지원대책</p>	<p>이 공동과제는 능력있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및 임업을 보장하여, 유럽연합 역내에서 경쟁력을 높임. 또한 해안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됨.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국토계획, 환경보호와 동물보호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임.(GAK; 법 제2조 제1항)</p> <p>[지원 방식] 구동독지역의 경우 농업구조 및 농촌개발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취지로 보조금과 신용보증을 보장해주는 등 부분적으로 지원 조건이 더 양호</p>	<p>무기한</p>
<p>시범계획 '인구통계학적 변화 -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p>	<p>두 지역(하르츠 남부/퀴프호이저와 슈테티너 하프)에서, 농촌의 기초생계보장과 새로운 경제비전 개발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두 시범지역의 약 40개 사업은 이러한 적극적 행동 구상을 토대로 지역별로 고안된 제안들을 실행해나가고 있음.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총 400만 유로가 지원됨.</p>	<p>인구통계 변화에 따른 적극적 행동 구상과 더불어, 이 시범계획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지역별 해결책과 프로젝트들을 연계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여러 지역과 분야의 공조를 통해 지역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주요 행동분야인 교육과 직업교육, 경제, 공공서비스, 새로운 주거·생활형태 등에서 벌써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p>	<p>이 시범계획은 구동독 지역에서는 2007년 중반부터 2009년 9월까지, 구서독 지역에서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진행됨. 2009년 6월 30일 국가인구통계학회의가 개최돼, 특히 구동독 지역의 시범계획에 대한 결과를 다루며, 2010년말까지는 구동독과 구서독 시범지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마련됨.</p>

IX. 가족·평등·청소년정책 및 노인정책

<p>가족을 위한 지역연합 이니셔티브</p>	<p>가능한 한 많은 집단의 대표자들이 지속적인 가족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연합회들은 어린이와 가정에 적합한 사회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변경되는 네트워크들임.</p>	<p>구동독지역에서는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젝트들로 전문 인력의 관심을 유발, 이들을 결속 시키고, 청년층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연합회가 중요함. 구동독지역에서 탁아시설을 구축할 때 연합회들은 무엇보다도 방과 후 탁아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인구변화의 영향에 직면하여 구동독지역의 '지역연합회들'은 세대를 포괄하는 성향들을 강화하고 있음.</p>	
<p>'2008~2013 육아재정지원' 투자프로그램</p>	<p>연방정부는 기본법 104b조의 비율에 따라 3세미만 어린이의 전일제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2008~2013년도에 총 21억 5,000만 유로의 재정지원금을 각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명목으로 지원함. 이때에 동부의 연방주들에게서 3억 8,760만 유로가 지출됨.</p>	<p>각 주정부들을 위한 재정조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수요에 부합하는 탁아시설의 확대를 위한 재정적 토대가 마련됨. 또한, 전일보육활동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전일보육에 유익한 대책들과 어린이 조기교육 분야의 정책적 대책들이 미래투자법을 통해 발효</p>	<p>[지속기간] 2008년부터 2013년까지</p>

3세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추가 탁아소 운영비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참여	연방정부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각 주정 부에 2008년~2013년까지 총 18억 5,000 만 유로, 그리고 2014년부터는 연간 7억 7,000만 유로를 전일제 탁아소 운영비 보조금으로서 지원해줌.	3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전일제 탁아소 구축	2008년부터 시행
‘전(全)세대를 위한 집’ 프로그램	모든 세대를 위한 만남의 장소. 전세대를 포괄하고 가정을 후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한 정보기반 및 서비스 기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 강화	구동독 지역에 145채의 ‘전(全)세대를 위한 집’ 마련 (프로그램 전체로는 500채). 질적인 발전 및 지속성 확보. 2012년까지 장려.
유럽사회기금(ESF) 프로그램 ‘복직을 위한 미래 (Perspektive Wiedereinstieg)’	노동시장에서 재취업 여성들의 성공적 인 통합을 위한 대책의 전개	연방노동청(BA)의 상담지원을 통해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 성공적인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중개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목표 지역분류에 따라, 구동독 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20개의 시범지역 가운데 10개가 구동독지역에 위치.	2009년 3월 1일에 20개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 2012년 2월 29일까지 지원.

<p>‘지역 강화 (STÄRKEN vor Ort) [舊 ‘사회적 결속을 위한 지역 자본(Lokales Kapital für soziale Zwecke)']</p>	<p>이 프로그램은 직업생활을 시작하거나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소년들과 여성들을 지원해줌. 이 프로그램은 2009 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사회기금(ESF)에 서 9,900만 유로를 가지고 그들을 장려 하게 되며,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대상은 구동독지역임.</p>	<p>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사회복지, 학교, 직업의 통합 촉진.</p>	<p>2009년 3월부터 활동 시작</p>
<p>‘제 1차 도약대(1. Schwelle) 시범 프로젝트와 함께 실시 되는 ‘청년의 미래 - 이주 공동 대응(Perspektive für junge Menschen - gemeinsam gegen Abwanderung)’ 프로그램</p>	<p>정부, 정치,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파견한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동부의 주 들에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설계 (Perspektive)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협력본부들, 머물러있을 것인지 다시 돌 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열어줌. 시범 프로젝트는 12개의 구동독지역에 위치한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와 직업교육사이에서 고민할 때 공동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착수함으로써 진로지도를 함.</p>	<p>구동독지역의 젊은이들의 참여기 회를 개선함.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때 지원하며, 미래에 자기 지역에 머물도록 장려함.</p>	<p>[지속기간] 2008~2010</p>

<p>‘새로운 거주’(Neues Wohnen)와 (다)세대 공동체를 위한 거주 강화, 숙소에 활기를 준다.’라는 시범 프로그램 및 노인들을 위한 건축과 거주라는 시범적인 프로젝트</p>	<p>이 프로그램은 노령수요에 적합하고, 양질의 삶을 형성하는 혁신적 방법을 나타냄. 여러 세대의 공동거주 형식과 다양한 주거공급 그리고 그 교육 및 시험에 대한 상담과 정보들이 여기에 속함.</p>	<p>노인들의 자립생활과 거주의 강화, 노인인력 활용 및 양로원에 대한 대안 제시. 동부 독일에서는 인구수의 감소, 젊은층의 외부이전, 건물들의 공실화 확대 등 문제발생</p>	<p>‘새로운 거주’ 시범 프로그램 2010년까지 - ‘(다)세대를 위한 거주’ 2011년까지 - 주제의 핵심에 따른 세부적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노인들)</p>
<p>‘전(全)세대 자원봉사’ 프로그램</p>	<p>2009년 1월 1일부터 ‘현실참여가 틈을 메운다(Engagement schlägt Brücken)’는 슬로건 아래 ‘전(全)세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됨. 새로운 봉사의 핵심은 연방주들과 함께 합의하여 선정한 46개의 ‘등대 프로젝트(Leuchtturmprojekt)’들이다. 그 중에서 11개는 구동독지역에, 3개는 베를린에 있는 것이다.</p>	<p>이 프로젝트로 연방정부는 믿을만하고 의무감이 있는 명예기관의 참여를 강화함. 이 자원봉사는 세대간 상호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며,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새로운 목표집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p>	<p>[지속기간] 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p>
<p>‘경제적 주체로서의 노년층’ 이니셔티브</p>	<p>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경제기술부와 공동 책임을 지는 참여연대는 노인정책, 경제정책, 그리고 소비자정책을 연결함. 이 참여연대는 각 세대별로 적합한 제품들과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p>	<p>참여연대 ‘경제주체로서의 노인’은 노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고용의 강화를 목표로 함. 구동독지역의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결과들은 다른 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참여연대가 그곳에서 특별히 영향을 확대할 수도 있음.</p>	<p>[지속기간] 2008년 1월11일~2011년 3월31일</p>

<p>‘노년층의 활발한 참여’ 프로그램</p>	<p>‘노령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은 지자체들이 노인들과 함께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까요?’라는 ‘지역 시민포럼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독일 전역의 150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10,000 유로씩 장려금을 지급하여,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의 안녕을 위해 실행됨.</p>	<p>시민사회 강화가 목표이며, 이 프로그램은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 의미가 있음. 왜냐하면 이지역은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오늘날 구서독지역에 비교하여 너무 낮기 때문임. 지자체들은 노인인력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노년층의 활발한 참여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함.</p>	<p>[지속기간] 2007년 4월1일 ~ 2010년 12월 31일</p> <p>처음 5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8년 10월 1일에 시작하였음. 그외 수백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 7월에 시작하였음.</p>
---------------------------	--	---	---

X. 예술, 문화, 스포츠

구동독지역 국가문화시설 투자	<p>이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구동독지역 문화시설의 유지·복원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음.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럽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화재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2009년에는 613만 6,000유로에 이르는 연방예산이 할당되어 있음.</p> <p>주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유럽연합 또는 제 3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 적어도 50%에 이르는 공동 자금지원을 보장해야 함.</p>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고 유럽차원에서도 중요한 문화시설에 대한 커다란 건축학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	2004년부터 당분간 지원 계속.
특별지원프로그램 ‘황금빛 동부 계획(Goldener Plan Ost)’	<p>이 스포츠시설 프로그램으로 구동독 지역과 구 동베를린 지역의 이른바 국민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에 대한 신축·확대·개축을 연방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음.</p>	이 프로그램은 구동독 지역 스포츠시설을 구서독의 스포츠시설 인 프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05년 11월 11일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연정협약에 따라 이 특별지원프로그램 속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스포츠시설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라이프치히 소재 응용 훈련학 연구소 (IAT)와 베를린 소재 스포츠기기 연구개발원(FES)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전문스포츠와 신진스포츠에 적합한 종목별 및 여러 종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훈련 및 연구,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의 스포츠 국제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IAT와 FES는 통일조약 제 39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분간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연방경찰의 전문스포츠 지원	코트부스 연방경찰 전문스포츠 프로젝트내의 훈련 및 경찰공무원 양성과정에서 재능있는 젊은 선수들을 지원	스포츠 분야 관련인들의 국제적인 성공: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다른 직업비전을 제시	지원 지속

XI. 독일사회의 내적통일 강화

시민참여 이니셔티브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 계획 지원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국가, 경제, 시민사회에 대해 분야를 초월한 논의 활성화, 국가의 참여 전략 개발 과정에 관여함.	시민참여 이니셔티브는 2007년에 시작되어, 2008년부터는 최소 5년 이상 지속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극우주의와 이방인 적대주의 및 반유대주의에 대항하는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를 장려하기 위한 범지역적 시범 프로젝트 및 지역별 행동대책 지원함.	청소년정책 분야에 민주주의와 관용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	[1차 프로그램 시행기간] 2007~2010년

<p>‘민주주의를 위한 역량 - 극우주의 퇴치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p>	<p>16개 연방주 소재 상담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및 극우주의로 인한 문제발생시 지역담당자에게 전문적인 외부상담을 실시해주는 이동해결반 지원.</p>	<p>‘자기구제에 대한 지원’의 의미에서 위기상황에서 지역담당자의 문제해결능력 강화.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주차원 및 전국적 차원의 상담네트워크간 업무공조 활성화.</p>	<p>[현 프로그램 시행기간] 2007~2010년</p>
<p>‘다양성의 지역’</p>	<p>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를 지속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다양성의 지역’이라는 칭호가 붙음. 선정지역에는 표시판을 수여해 지역에 세워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전국 모든 지역이 극우주의 퇴치와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시행기간] 2007~2010년</p>
<p>‘XENOS - 통합과 다양성’</p>	<p>외국인 적대주의와 인종주의를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노동시장 편입과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p> <p>1차 지원기간중 편성된 1억 7,500만 유로의 예산중 1억 유로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1,700만 유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 예산에서, 5,700만 유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기타 국가의 공동지원을 통해 충당됨.</p> <p>2011년부터는 기존과 유사한 예산규모로 2차 지원이 시작됨.</p>	<p>민주주의적 태도와 시민참여의 강화, 관용과 개방성 장려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음.</p>	<p>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1차 지원기간중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프로젝트 지원으로 모두 261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최초의 프로젝트들은 2008년 말에 시작되었음.</p> <p>프로젝트의 1/3은 구동독 지역에서 시행됨.</p>

<p>XENOS 특별프로그램 '도약을 위한 탈퇴'</p>	<p>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극우주의적 성향을 타파하고, 극우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 사회와 직장,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도모하는 극우파 탈퇴자 구상임.</p> <p>총 예산 800만 유로중 500만 유로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200만 유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 예산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100만 유로는 개별계획의 공동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됨.</p>	<p>XENOS 특별프로그램 '도약을 위한 탈퇴'의 범위내에서, 극우파 탈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극우주의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p>	<p>2009년 4월 이후 선정된 이니셔티브 18개 가운데 지금까지 3개가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 시행자의 절반 이상은 구동독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p>
<p>체류허가자 및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노동시장 지원에 관한 연방프로그램</p>	<p>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시행자, 이민자 자체조직, 난민지원 프로그램 시행자, 교육담당자 및 복지 프로그램 시행자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체류 허가자들과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함.</p> <p>총 예산 3,400만 유로중 1,900만 유로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1,200만 유로는 연방기금을 통해, 나머지 300만 유로는 각 계획의 공동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됨.</p>	<p>체류허가자 및 난민들의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통합 지원.</p>	<p>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43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개는 구동독 지역 프로젝트로서 이들에 대해 BMAS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p>

제 4부. 구동독지역 경제 데이터

I. 지역별 통계	195
II. 주요 국민경제 지표	197
III. 경기 지표	203
IV. 노동시장 자료	207
V. 주요 지원수단	210
VI. 1991년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의 기업설립 및 폐업현황	212
VII. 경제분야의 R&D 인력	213
VIII. 투자활동	214

I. 지역별 통계

1. 구동독 지역에 관한 주요 경제통계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매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튀링겐주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
면적(km ²)	891	29,480	23,185	20,447	18,418	16,172	107,703
인구 (단위: 1,000명) ¹⁾	3,425	2,530	1,673	2,398	4,205	2,278	13,084
주(州) 비율 (단위: %)		19.3	12.8	18.3	32.1	17.4	100.0
인구밀도 (사람 수/km ²) ¹⁾	3,844	86	72	117	228	141	121
2008년도 국내총생산²⁾							
물가변동분 조정(전년 대비 변화율)	1.6	1.0	1.2	1.8	0.9	1.0	1.1
각 물가에서, 단위: 10억 유로	87.5	54.9	35.9	53.8	95.1	49.8	289.6
주민 1인당(각 물가에서), 단위: 유로	25,554	21,721	21,439	22,427	22,620	21,875	22,130
취업자 1인당(각 물가에서), 단위: 유로	53,418	52,473	48,982	52,790	48,518	48,491	50,040
2008년도 제조업 총부가가치생산액²⁾							
물가변동분 조정(전년 대비 변화율)	1.8	4.4	5.7	4.8	2.7	3.4	3.8
2008년도 총부가가치생산액²⁾							
(각 물가에서), 단위: 10억 유로	78.5	49.3	32.2	48.2	85.3	44.7	259.7
- 농업, 임업, 어업	0.1	0.9	0.8	0.9	0.9	0.6	4.1
-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12.0	10.1	4.9	12.3	21.0	12.1	60.4
* 제조업	9.9	7.8	4.2	10.4	17.9	10.6	50.9
- 건설업	2.5	2.6	1.7	2.9	5.2	2.7	15.1
- 무역업, 요식숙박업, 교통업	12.3	9.3	6.4	9.4	13.2	6.7	45.1
-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27.0	13.4	8.3	10.1	23.0	10.8	65.6
-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24.5	12.9	10.1	12.7	22.0	11.8	69.4
2007년 경제활동 비율³⁾	74.3	79.8	79.2	78.0	78.8	78.8	77.9
근무지에서의 취업자, 단위: 천명 ²⁾	1,637	1,046	733	1,019	1,963	1,029	5,789
실업자⁴⁾	245,250	178,137	128,243	180,914	302,924	149,779	1,185,247
실업률⁴⁾							
- 보고 해당월	14.5	13.2	14.6	14.5	14.0	12.5	13.9
- 전년 동월	14.5	13.9	15.0	14.9	13.6	12.0	13.9
단기 근로자⁴⁾							47,900
일자리 제공 숫자⁴⁾	32,338	15,641	14,028	16,069	25,129	14,282	117,487
사회보험가입 정규노동자⁴⁾	1,096,000	720,500	501,000	731,600	1,368,000	715,700	5,133,000
등록된 직업훈련 지원자 수⁴⁾	8,257	7,183	5,391	6,715	12,402	7,389	47,337
등록된 직업훈련자리⁴⁾	5,016	5,680	5,150	5,881	9,085	6,145	36,957
영업신고⁶⁾	637,116	541,196	346,317	486,591	941,673	504,880	3,457,773
2008년도 영업신고	41,143	23,464	14,588	16,622	39,526	18,007	153,350
2008년도 신규 창업건수	36,508	19,060	12,219	14,315	33,398	14,871	130,371
폐업신고⁶⁾	472,621	369,024	243,059	351,282	645,574	362,286	2,443,846
2008년도 폐업신고	31,974	21,773	14,091	16,944	36,696	17,635	139,113
지원 프로그램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EKH) 대출⁷⁾							
- 확약금액 (단위: 100만 유로)	2,019	8,858	7,973	8,895	14,359	9,941	52,045
지역 자체지원⁸⁾ (상업)							
- 확약금액 (단위: 100만 유로)	1,602	6,892	3,759	7,672	9,988	5,845	35,759

1)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통계청: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기준일: 2008.6.30, 베를린 주: 전체 도시)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통계청: "주(州) VGR" 조사분과; 산출 기준일: 2009년 2월, 베를린 주: 전체 도시

3) 연방통계청, 2007년도 인구센서스, 15~65세 각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4) 연방노동청, 2009년 4월 기준

(사회보험가입 정규노동자: 2009년 2월 기준 추산; 단기 근로자: 2008년 12월; 재교육 시장: 2009년 4월)

5)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민간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

6) 연방통계청, 2008년 12월 기준, 1991년부터, 1995년부터는 베를린 동부만, 1996년부터는 베를린 전체 자료

7) 연방경제부, 2008.12.31 기준, 1990년 이후의 ERP 및 EHK 확약 (포기, 삭감, 철회 공제 이후의 순 확약금액)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정보 안내: 구동독지역 ERP 대출, 1997년부터 EHK 고려: 약 317,000건의 확약, 대출 규모 약 390억 유로

8) 연방경제수입통계청, 1991년 1월~2008년 12월 기간,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공동 파이낸싱 (베를린 주: 전체 도시)

2.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지역별 경제 통계

연방주	인구	경제활동인구			2008년도 실업자 ⁴⁾		2008년도 국내총생산 ⁵⁾			2008년도 산업매출 ⁶⁾		기업체 ⁹⁾	고용인 ⁹⁾	수출비율 ^{6) 7)}	세금충당비율 ⁸⁾	인건비지출비율 ⁸⁾	투자율 ⁸⁾	이자지출비율 ⁸⁾
	'08.6.30 (단위: 1,000명)	'07년도 경제활동 인구 ²⁾ (단위: 1,000명)	'07년도 경제활동 비율 ²⁾ (단위:%)	'08년도 취업자 ³⁾ (단위: 1,000명)	단위: 1,000명	민간 총경제활동 인구비율 (단위: %)	각 물가에서 (단위: 10억 유로)	각 물가에서, 1인당 (단위: 유로)	물가변동분 조정 (2000년 =100)	단위: 10억 유로	'08/'07년 변화율 (단위: %)	'08년, 주민 10만명당	'08년, 각 기업체당	'08년, (단위:%)	'07년 현재기준 (단위:%)	'07년 현재기준 (단위:%)	'07년 현재기준 (단위:%)	'07년 현재기준 (단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1,673	909	79.2	732	124	14.1	35.9	21,439	109.0	11.6	6.1	18	153	27.0	52.7	23.0	16.5	6.9
브란덴부르크주	2,530	1,385	79.8	1,047	175	13.0	54.9	21,721	108.5	20.8	5.2	17	179	25.6	55.6	20.7	17.4	8.1
작센-안할트주	2,398	1,277	78.0	1,019	175	14.0	53.8	22,427	110.5	36.2	4.5	28	156	29.3	51.3	22.6	16.8	9.3
튀링겐주	2,278	1,228	78.8	1,028	135	11.3	49.8	21,875	113.1	27.1	4.5	39	144	32.7	54.0	26.6	17.4	7.7
작센주	4,205	2,215	78.8	1,960	280	12.8	95.1	22,620	115.7	52.0	1.8	30	157	37.0	57.5	25.7	23.2	3.4
구동독지역¹⁾	13,084	8,790	77.9	5,786	1,123	13.1	289.6	22,130	112.1	175.6	2.0	24	164	33.1	54.8	24.0	19.0	6.7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2,835	1,397	75.7	1,270	108	7.6	73.6	25,945	105.6	31.7	4.3	20	192	42.1	73.5	36.0	9.3	11.2
함부르크주	1,769	917	76.3	1,114	73	8.1	89.6	50,640	108.5	76.9	5.8	15	338	23.9	81.3	30.6	11.5	9.6
니더작센주	7,968	3,820	73.6	3,672	304	7.7	214.4	26,902	108.9	180.7	7.0	24	242	44.0	71.3	37.2	9.9	9.4
브레멘주	662	319	72.9	393	37	11.4	27.7	41,918	112.6	20.0	13.8	23	340	52.4	52.0	31.4	12.3	15.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17,968	8,575	72.5	8,705	760	8.5	541.1	30,113	107.2	339.2	3.6	30	211	43.3	82.7	39.5	8.8	9.7
헤센주	6,069	3,009	74.9	3,128	204	6.6	220.8	36,382	109.0	97.0	2.5	24	249	49.0	81.2	34.0	8.3	6.5
라인란트-팔츠주	4,039	2,000	75.5	1,857	116	5.6	107.5	26,623	108.6	78.7	4.0	26	240	49.7	72.3	38.0	10.0	9.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10,754	5,466	76.9	5,612	229	4.1	364.3	33,876	111.7	283.9	0.1	43	244	50.0	82.0	39.0	8.4	5.9
바이에른주	12,519	6,401	76.8	6,641	277	4.2	444.8	35,530	116.0	319.5	1.4	31	274	49.5	86.5	42.7	11.6	2.8
자를란트주	1,034	474	70.6	513	37	7.3	31.2	30,168	113.8	26.1	7.0	25	339	48.2	68.7	37.3	9.8	12.5
구서독지역¹⁾	65,618	32,379	74.8	32,905	2,145	6.4	2,114.9	32,231	110.3	1,453.7	3.1	30	243	45.9	80.4	38.6	9.7	7.7
베를린주	3,425	1,776	74.3	1,638	234	13.9	87.5	25,554	99.8	27.8	-6.4	11	239	39.5	48.4	30.1	8.0	11.9
독일	82,127	41,170	75.5	40,330	3,268	7.8	2,492.0	30,343	110.1	1,629.3	2.9	29	230	44.6

1) 구동독지역: 베를린 제외; 구서독지역: 베를린 제외 (실업자수,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비율, 산업 매출, 기업체, 고용인, 수출비중의 경우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2) 취업자 및 경제활동비율에 관한 자료는 2007년도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함.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 실업자) 15~65세 (국내 컨셉); 경제활동 비율 =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연령(15~65세)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

3) 국내 경제활동인구 = 거주지와 상관 없이 근무지가 독일 내에 있는 경제활동인구 (통근자 포함); 구동독지역의 경우 베를린 제외; 구서독지역도 베를린 제외.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인증 취업자 계산 연평균 결과; 계산 기준일: 2009년 2월

4) 구동독지역: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 베를린 제외; 연평균; 기준일: 2008년 12월

5) 1995년 ESVG(유럽 총국민경제 계산 시스템)에 근거; 베를린: = 베를린 전체; 구동독지역: = 베를린 제외; 구서독지역: = 베를린 제외 (기준일: 2009년 2월)

6) 종업원수 50명 이상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기업체, 구동독지역: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 베를린 제외; 현재 수치

7)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8) 주정부 예산의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9) 종업원수 50명 이상의 제조업체 고려, 연평균 수치 (현재 수치)

출처: 연방통계청, 연방노동청, “주(州) VGR(총국민경제 계산)” 조사분과, “취업자 조사” 조사분과, 연방재정부 및 자체 산출

II. 주요 국민경제 지표

1. 주요 전체경제 통계에 관한 동서 비교

		구서독지역 ²⁾		구동독지역 ²⁾		구서독지역에 대한 구동독지역 ²⁾ 비율 (단위: %)		독일 전체에서 구동독지역 ²⁾ 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1991년	2008년	1991년	2008년	1991년	2008년	1991년	2008년
각 물가에서의 국내총생산 (GDP) ¹⁾	단위: 10억 유로	1,364.0	2,114.9	170.6	377.1			11.1	15.1
거주인구 ³⁾	단위: 천 명	61,914	65,618	18,071	16,509			22.6	20.1
취업자(국내) ¹⁾	단위: 천 명	30,153	32,905	8,468	7,425			21.9	18.4
근로자(국내) ¹⁾	단위: 천 명	27,098	29,305	8,003	6,560			22.8	18.3
실업자 ⁴⁾	단위: 천 명	1,594	2,145	1,023	1,123			39.1	34.4
각 물가에서 주민 1인당 GDP	단위: 유로	22,030	32,231	9,442	22,840	42.9	70.9		
각 물가에서 취업자 1인당 GDP	단위: 유로	45,235	64,273	20,150	50,785	44.5	79.0		
각 물가에서 취업자의 시간당 GDP ⁸⁾	단위: 유로	37.11	45.26	25.26	34.21	68.1	75.6		
각 물가에서 취업자의 시간당 총부가가치생산액 ⁸⁾	단위: 천 유로	33.44	40.60	22.81	30.68	68.2	75.6		
주민 1인당 GDP (물가변동분 조정)	2000=100	92.3	109.1	66.5	114.1				
취업자 1인당 GDP (물가변동분 조정) -생산성-	2000=100	92.4	106.1	61.4	109.8				
취업자의 시간당 GDP (물가변동분 조정) ⁸⁾	2000=100	96.7	108.4	94.4	115.9				
근로자 급여 ¹⁾	단위: 10억 유로	723.5	1,036.6	121.5	141.8			14.4	12.0
근로자 1인당 급여 ¹⁾	단위: 유로	26,698	35,372	15,185	28,808	56.9	81.4		
근로자 시간당 급여 ¹⁾⁸⁾	단위: 유로	22.84	26.39	16.65	20.48	72.9	77.6		
근로자 시간당 급여 ¹⁾⁸⁾	2000=100	95.4	110.7	94.1	116.0				
총임금 및 월급 ¹⁾	단위: 10억 유로	589.7	841.9	101.4	153.5			14.7	15.4
근로자 1인당 총임금 및 월급 ¹⁾	단위: 유로	21,763	28,727	12,676	23,408	58.2	81.5		
주민 1인당 총설비투자 ⁵⁾	단위: 유로	4,800	5,400	3,300	4,100	69	76		
취업자 1인당 자본량 ^{2) 6)}	단위: 유로	241,000	299,000	110,000	253,000	46	85		
주민 1인당 자본량 ^{2) 6)}	단위: 유로	114,000	145,000	51,000	110,000	45	76		
단위노동비용 ¹⁾⁷⁾⁸⁾	%	68.30	65.00	72.99	66.75	6.9	2.7		

1) 1995년 ESVG에 근거, 계산 기준일: 2009년 2월

2)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3) 1991년: 연평균; 2008년: 중반

4) 연평균;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5) 2001년 및 2006년 출발 수치: VGRdL 산출 (산출 기준일: 2008년 8월), 자체 산출 주요수치에 근거

설비 투자: = 새 건축물과 새 장비 및 기타 설비 (각 물가에서), 구동독지역: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 베를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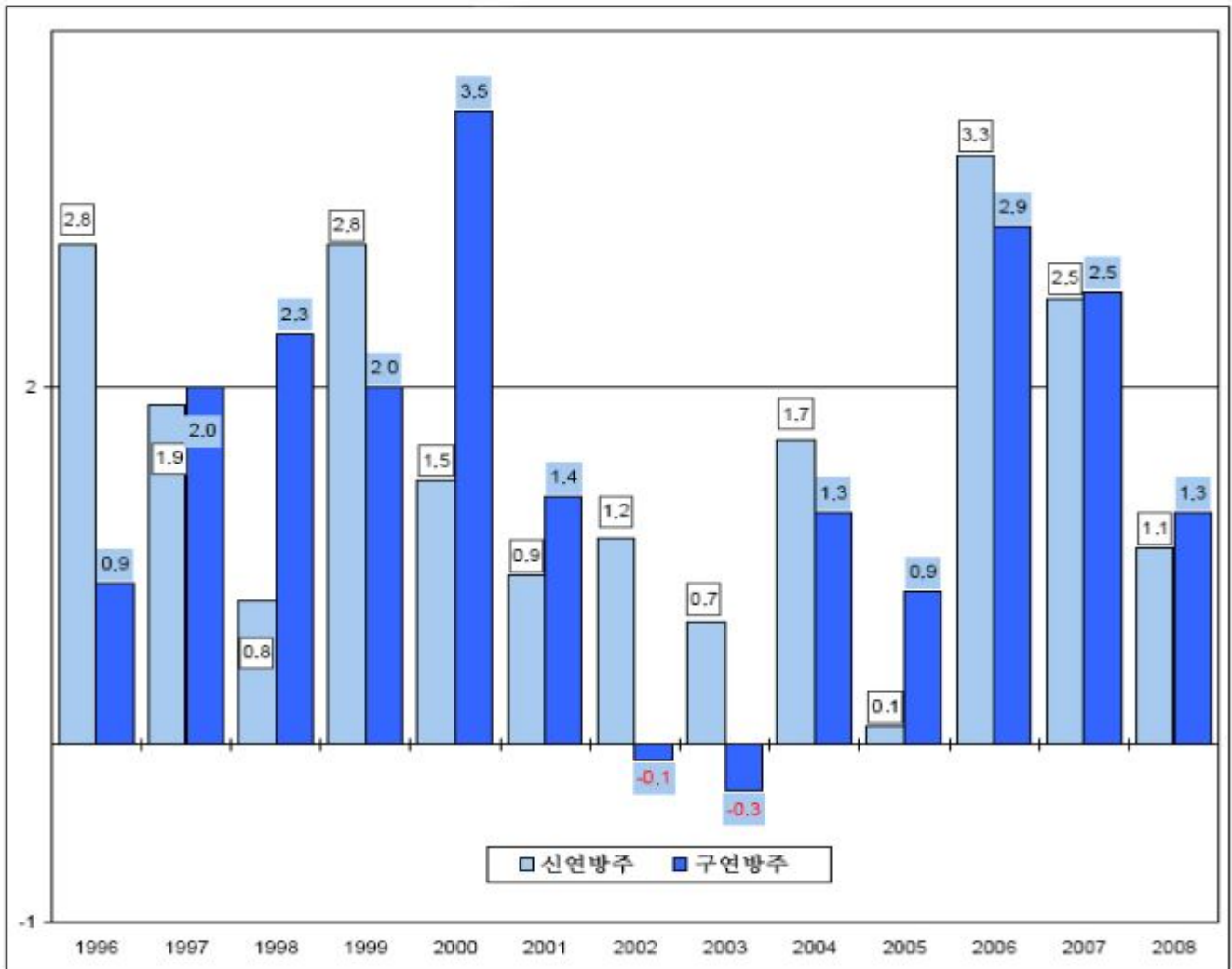
6) 1991년, 2006년

7) 각 물가에서 취업자의 시간당 총부가가치생산액(BWS)를 고려한 근로시간당 근로자 급여

8) 1998년 및 2008년

출처: “주(州) VGR(중국민경제 계산)” 및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취업자 산출” 조사분과; 연방노동청; 연방통계청, 주요 수치 및 관련 자료: 자체 산출

2. 국내총생산(GDP) -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1) 전년 대비 실질GDP 성장률 (단위: %)¹⁾

1) 1995년 ESG에 근거, 물가 정산.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모두 베를린 제외
 계산 기준일: 2008년 8월 / 2009년 2월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2) 전년 대비 취업자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생산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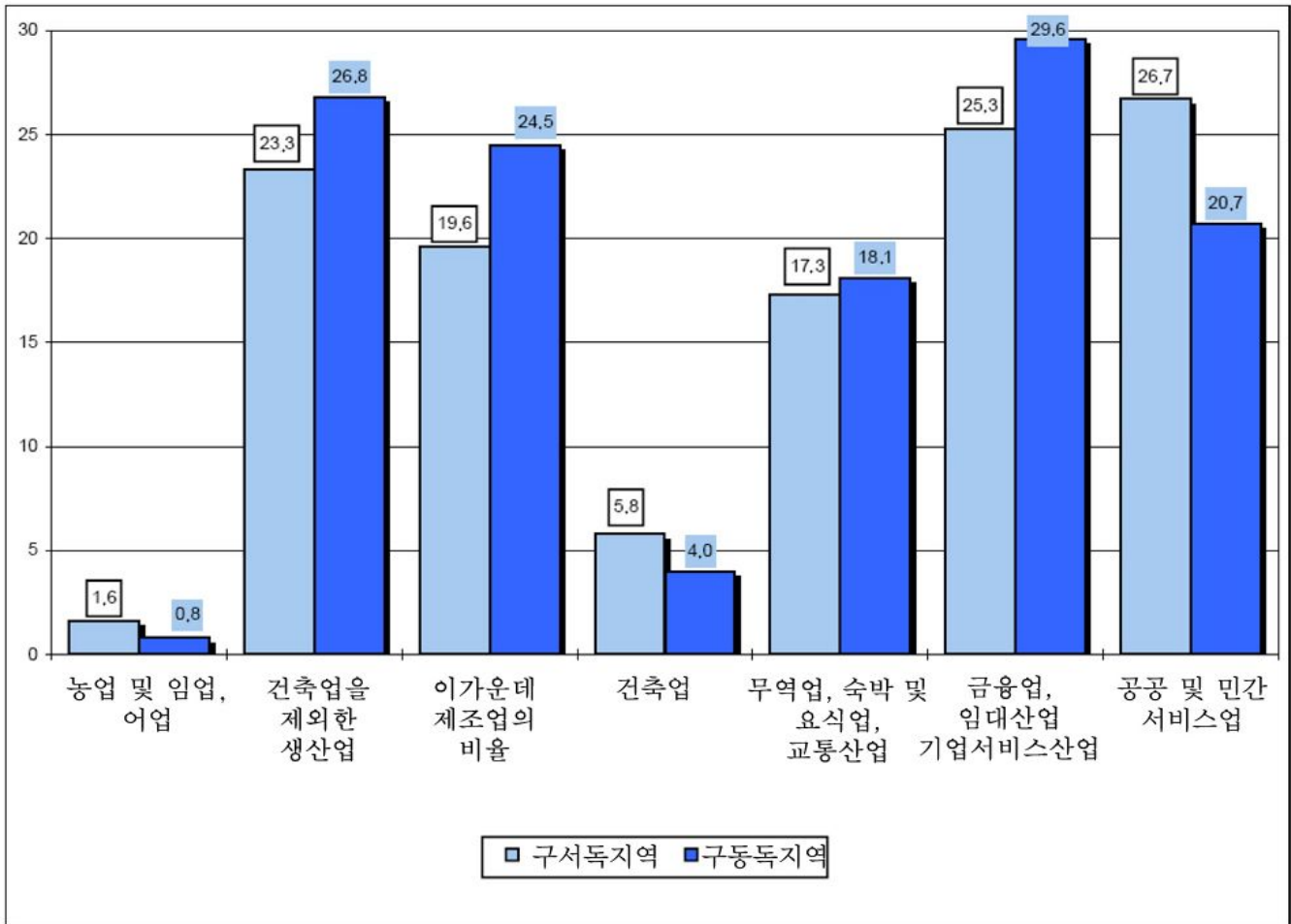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서독지역	1.0	1.7	0.8	0.4	1.1	0.5	0.2	0.6	0.8	0.8	2.3	0.8	-0.2
구동독지역	3.7	3.2	0.5	2.6	2.4	2.6	2.8	1.9	1.6	1.0	2.6	0.7	0.3

1) 1995년 ESG에 근거, 물가 정산.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모두 베를린 제외
 계산 기준일: 2008년 8월 / 2009년 2월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3. 2008년도 각 경제분야가 차지한 총부가가치생산액 비율(각 물가에서)¹⁾

(단위: %)



1) 1995년 ESVG에 근거, 계산 기준일: 2009년 2월.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모두 베를린 제외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4. 전년 대비 구동독지역¹⁾에서 각 경제분야의 총부가가치생산액 증가율(물가 변동분 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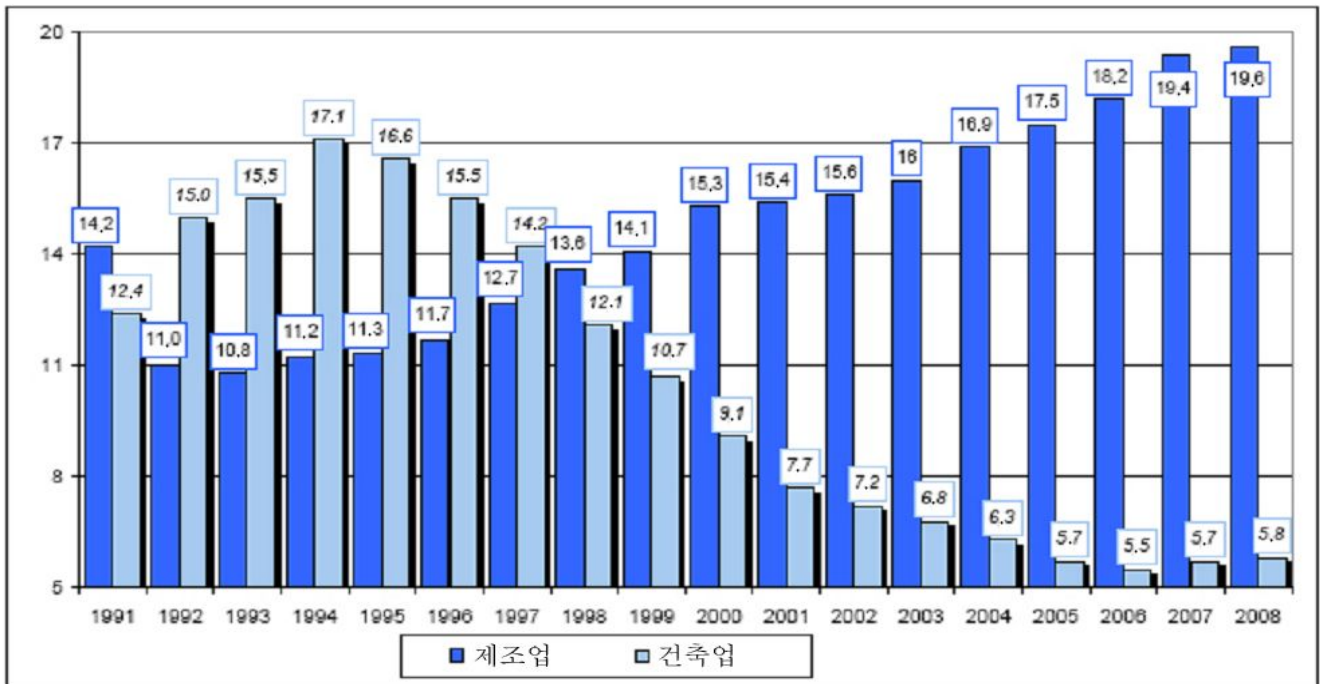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모든 경제분야의 총부가가치생산액	3.2	2.0	0.8	2.7	1.9	1.2	1.4	0.8	2.1	0.3	3.3	2.9	1.2
농업 및 임업, 어업	-1.2	9.2	-3.3	13.1	-7.9	7.4	-9.5	-6.8	38.7	-25.7	-10.0	18.1	5.6
건축업을 제외한 제조업	8.9	5.5	2.0	5.5	10.1	2.8	2.4	4.4	7.3	6.3	8.7	7.8	3.0
*제조업의 비율	5.7	11.2	4.9	7.4	12.8	4.0	2.5	4.7	8.4	8.0	10.4	9.7	3.8
건축업	-4.4	-4.7	-11.2	-7.6	-12.4	-13.3	-5.2	-5.1	-5.7	-9.1	-2.8	1.8	0.8
무역업, 숙박 및 요식업, 교통산업	2.2	0.1	3.1	5.4	2.4	2.6	2.4	0.4	2.4	-2.2	4.5	-0.2	1.7
금융업, 임대산업, 기업서비스 산업	9.2	6.2	7.9	3.5	4.2	6.3	4.5	2.1	0.0	2.6	3.3	3.8	1.3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1.7	1.3	-0.1	2.3	1.1	-0.6	0.5	-0.5	-0.2	-0.4	0.4	-0.3	-0.8

1) 1995년 ESVG에 근거, 계산 기준일: 2008년 8월/2009년 2월.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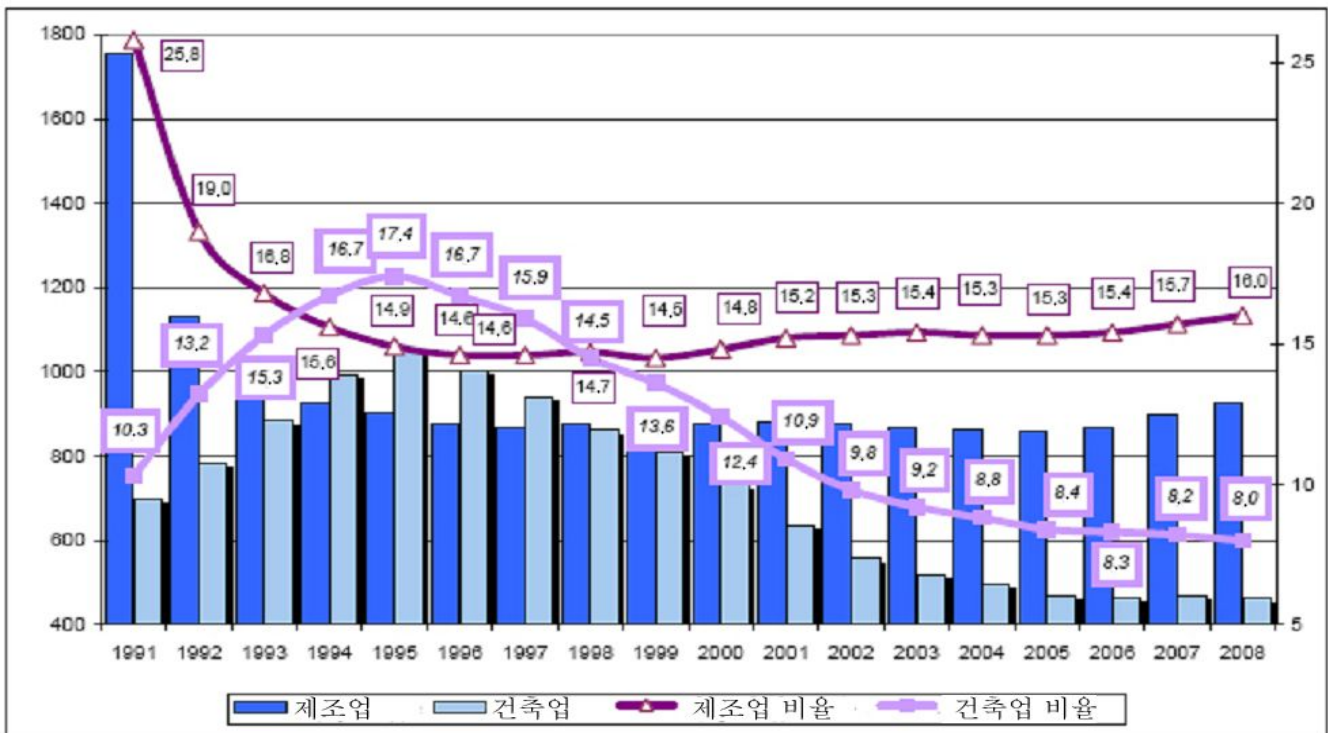
5. 구동독지역에서 제조업 및 건축업의 총부가가치생산액 비율 (각 물가에서)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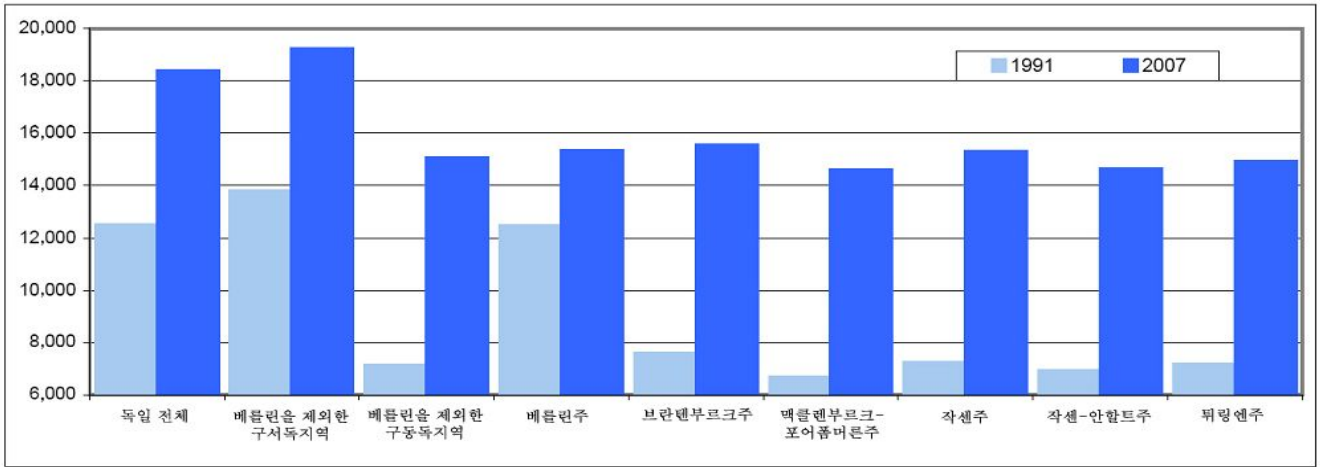
1) 1995년 ESGV에 근거, 계산 기준일: 2008년 8월/2009년 2월.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6. 구동독지역의 제조업 및 건축업 분야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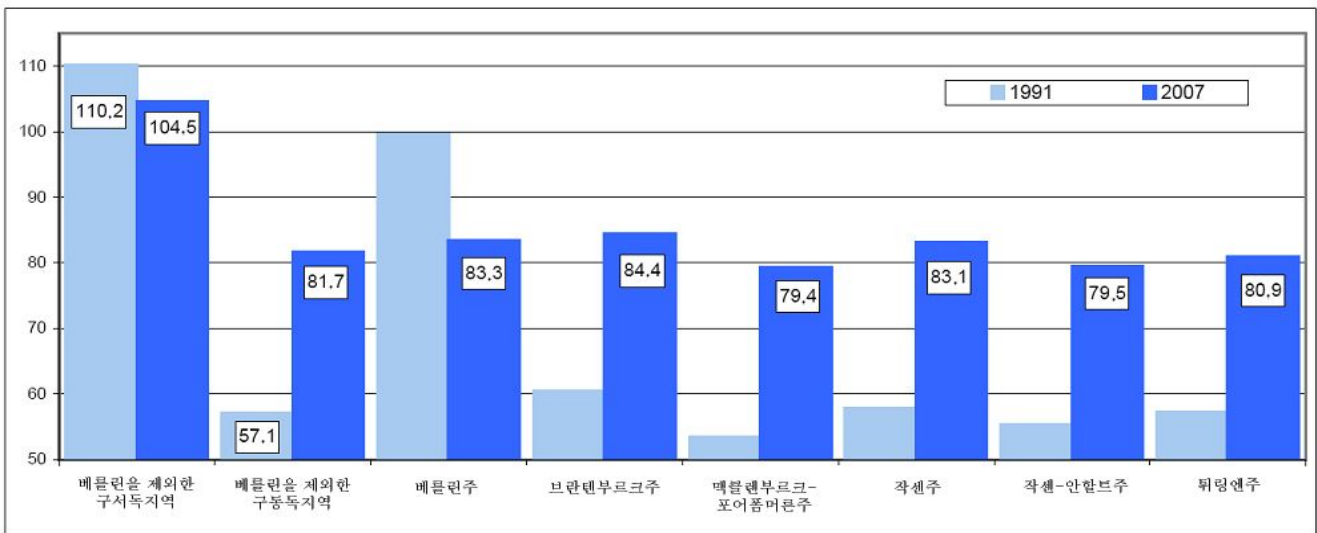
1) 1995년 ESGV에 근거, 계산 기준일: 2008년 8월/2009년 2월.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좌측 지표: 근로자수 (단위: 1,000명) 우측 지표: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및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취업자 산출” 조사분과

7. 주민 1인당 민간가계¹⁾의 가처분 소득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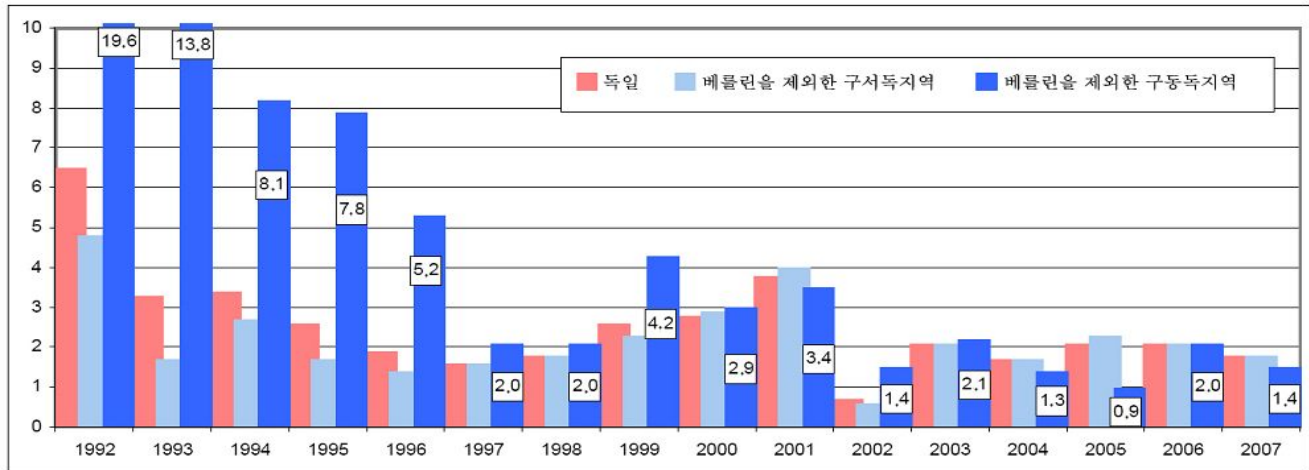


1) 영업목적이 없는 민간조직 내지 민간가계의 가처분 소득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독일 전체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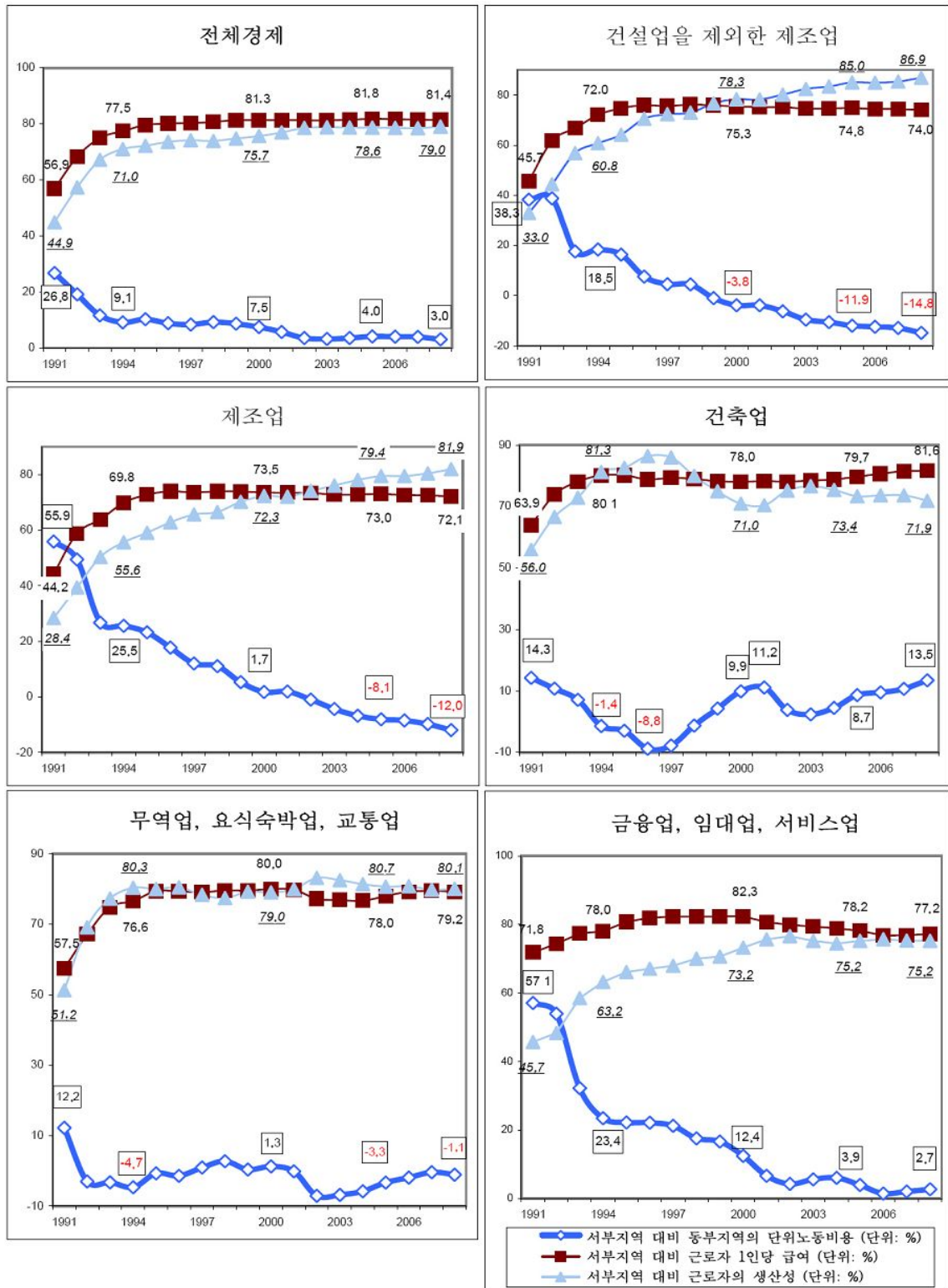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산출 기준일: 2008년 8월

8. 임금비용, 생산성¹⁾ 및 단위노동비용²⁾의 동서 비교



자료: 1991년~2008년

구동독지역: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 베를린 제외

1) 여기에서: 각 물가에서 취업자 1인당 총부가가치생산액

2) = 각 물가에서 취업자 1인당 총부가가치생산액(BWS)를 고려한 근로자 1인당 급여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산출 기준일: 2008년 8월/2009년 2월)

III. 경기 지표

1. 구동독지역에서의 생산량 증가추이 (2000년 생산지수 = 100 -원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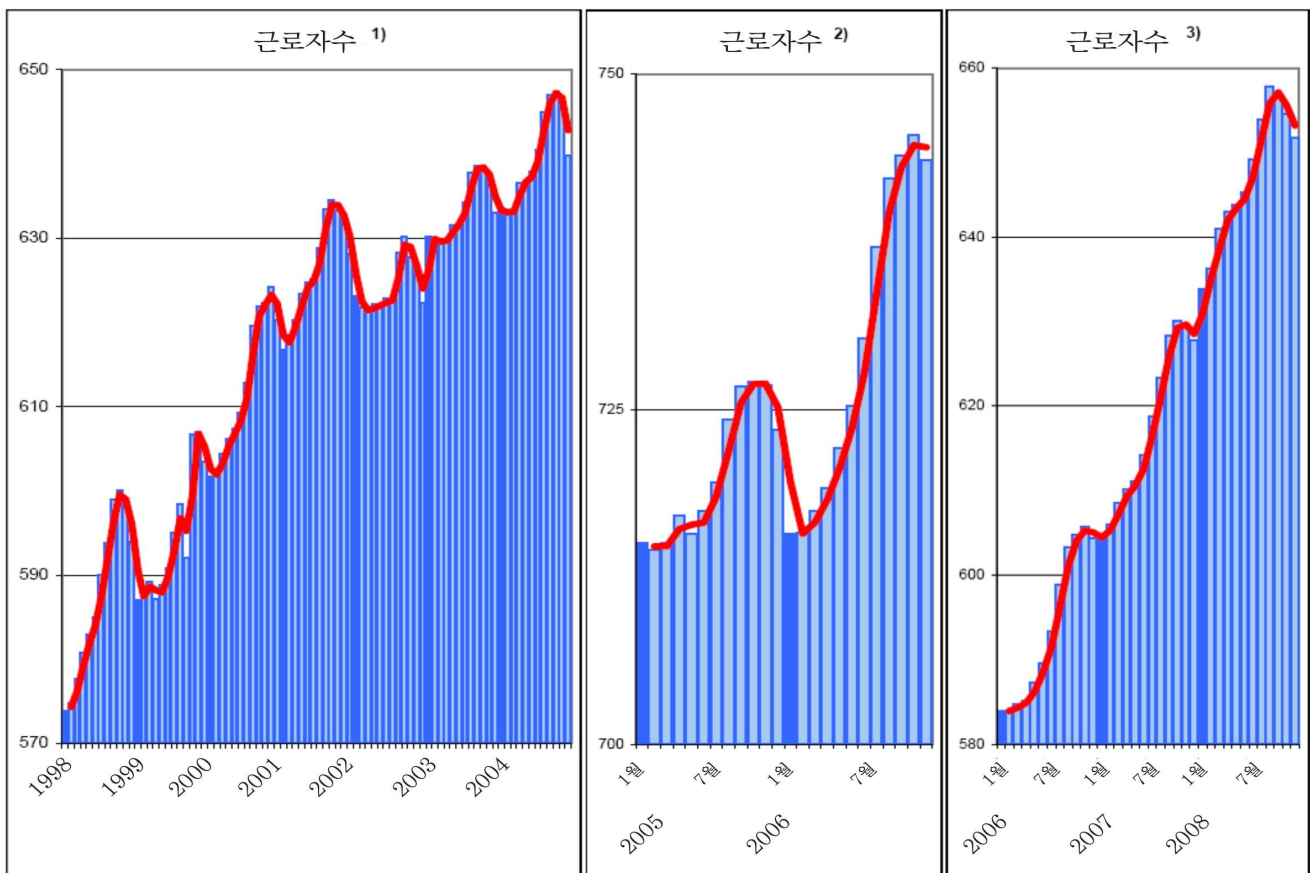
	구동독지역 및 베를린 동부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업	87.8	89.3	91.4	93.6	97.5	100	100.5	100.5	104.3	110.0	102.1	108.1	113.9	121.2	122.8
생산업 (건설업 제외)	75.6	78.6	83.0	88.3	93.4	100	103.8	105.8	111.7	120.1	110.1	119.1	126.0	135.1	137.4
생산업 (에너지 및 주요건설부문 제외)	71.6	75.6	82.2	87.4	92.7	100	104.8	107.5	113.6	123.5	111.0	121.3	130.0	141.7	145.2
광업, 채석 및 채토 산업, 가공산업	73.2	76.3	81.4	87.2	92.8	100	104.4	106.6	112.8	121.8	110.7	120.7	128.3	138.7	141.4
반제품 생산자	66.7	70.5	78.9	85.2	90.6	100	103.7	109.5	120.2	135.4	114.6	122.4	143.0	161.6	166.8
투자재 생산자	78.5	77.9	81.8	88.2	93.3	100	107.2	108.3	111.1	118.7	117.6	122.7	134.2	148.5	157.5
내구소비재 생산자	63.9	69.1	76.0	84.2	91.8	100	106.4	100.3	97.3	106.4	93.5	97.6	105.4	103.4	104.4
소비재 생산자	72.9	81.4	87.9	90.3	95.0	100	103.8	104.9	109.1	114.2	102.0	121.7	111.1	112.6	108.8
소모용품 생산자	71.8	79.9	86.4	89.5	94.6	100	104.1	104.3	107.7	113.2	101.0	118.8	110.4	111.5	108.3
에너지	93.6	92.6	86.8	92.2	96.7	100	99.1	98.3	102.8	104.3	106.1	108.8	108.1	104.8	101.8
에너지(E부문 대치)	89.9	84.2	73.5	85.5	94.3	100	99.8	97.7	104.0	103.8	107.8	114.1	111.1	108.1	102.1
광업, 채석 및 채토 산업,	136.9	127.2	116.4	102.2	101.1	100	100.8	104.4	107.8	104.1	99.6	97.5	98.7	95.0	95.6
탄광업, 이탄 채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채굴 산업	130.2	120.3	108.1	93.9	92.5	100	106.6	107.9	107.5	105.9	108.8	105.9	104.7	104.3	103.0
채광 산업, 채석 및 채토 산업, 기타 광업	150.4	141.1	133.1	119.0	118.5	100	88.8	97.3	108.4	100.3	80.9	80.5	86.6	76.0	80.7
제조업	71.2	74.7	80.3	86.7	92.5	100	104.5	106.7	112.9	122.4	111.1	121.4	129.2	140.1	142.8
식품산업 및 담배가공	71.4	81.4	88.4	90.1	96.2	100	103.3	101.9	103.3	109.4	102.0	129.1	113.7	114.9	109.4
섬유 및 의류 산업	80.7	83.5	88.5	94.3	94.7	100	99.4	90.7	89.5	84.2	78.3	75.0	75.0	78.3	75.7
가죽산업	103.9	96.1	98.2	108.0	91.7	100	101.0	101.6	100.7	102.7	92.6	90.7	92.8	102.7	101.4
목재산업 (가구 제조 제외)	51.8	58.5	63.3	78.7	89.8	100	101.4	115.9	126.5	143.5	114.0	120.6	130.9	128.9	122.1
제지, 출판 및 인쇄 산업	82.1	85.3	95.6	102.5	102.2	100	103.7	113.7	128.3	135.4	113.2	122.4	125.1	123.3	123.3
코르크스 제조, 광유 가공, 정유	77.4	73.0	62.8	82.9	94.9	100	97.7	94.6	102.9	103.2	107.5	116.6	113.1	109.3	101.8
화학제품 생산	58.1	66.1	71.4	73.7	79.8	100	100.2	113.1	117.6	139.0	111.8	126.3	134.4	148.4	149.4
고무 및 합성수지 제품 생산	62.0	67.4	75.6	81.0	90.1	100	102.6	104.2	117.2	126.9	111.6	115.5	126.5	138.4	142.7
유리산업, 도기 제조, 석가공	92.0	95.4	98.8	96.8	101.9	100	94.2	92.3	93.4	94.8	91.7	90.8	98.2	100.0	95.7
금속 제조 및 가공, 금속제품 생산	68.4	71.7	78.2	86.5	91.8	100	105.5	105.5	110.0	116.8	109.5	109.6	120.9	133.1	142.2
기계제조	77.7	79.5	86.5	90.7	93.2	100	106.0	103.8	104.9	113.7	107.4	112.2	125.9	139.3	155.5
사무기기, 데이터교환 장비 및 설비 제조, 전자기술	47.9	53.2	65.7	72.3	81.2	100	114.0	124.5	141.8	167.9	129.4	147.0	189.7	233.9	248.9
차량제조	84.5	76.6	76.0	86.4	91.6	100	108.8	113.6	119.7	130.4	143.2	149.4	162.2	181.5	182.0
가구 제조, 장신구 제조, 음반산업, 리사이클링 등	73.5	76.5	83.0	91.6	94.2	100	103.0	103.2	103.0	110.5	93.3	97.3	105.6	112.2	112.9
에너지 및 물 공급	96.6	99.3	97.4	97.6	98.7	100	98.5	98.7	101.8	104.7	104.7	104.6	105.6	102.1	101.6
주요 건설사업	132.3	127.8	121.9	112.8	112.2	100	88.5	81.2	77.9	73.4	73.2	68.5	70.0	71.1	70.1
지상건설업	140.1	138.5	132.3	120.7	116.1	100	83.5	74.4	70.3	64.5	64.7	59.1	61.0	62.5	61.1
지하건설업	120.1	111.2	105.6	100.3	106.2	100	96.2	91.8	89.8	89.3	86.4	83.1	84.1	84.7	84.0

비고: 2003년도 산업분류(WZ)에 따른 산업 분류, 기본연도: 2000년; 종업원수 20명 이하의 기업체 자료

출처: 연방통계청

2. 제조업, 광업, 채석 및 채토 산업의 근로자수 변화^{1) 2) 3)}

연도	독일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독일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근로자수 (단위: 1,000명)			전년 대비 변화 (단위: %)		
1997 ¹⁾	6,416	5,834	581	-1.6	-1.7	-1.1
1998 ¹⁾	6,405	5,817	588	-0.2	-0.3	1.1
1999 ¹⁾	6,368	5,773	596	-0.6	-0.8	1.3
2000 ¹⁾	6,376	5,764	613	0.1	-0.2	2.9
2001 ¹⁾	6,390	5,764	627	0.2	0.0	2.3
2002 ¹⁾	6,209	5,584	624	-2.9	-3.2	-0.4
2003 ¹⁾	6,133	5,500	633	-2.6	-2.9	0.2
2004 ¹⁾	6,015	5,376	640	-1.9	-2.3	1.1
2005 ²⁾	5,928	5,208	720	-1.4	-1.6	-0.3
2006 ²⁾	5,893	5,164	730	-0.6	-0.8	1.3
2006 ³⁾	5,221	4,627	594	.	.	.
2007 ³⁾	5,305	4,687	617	1.6	1.3	4.0
2008 ³⁾	5,428	4,781	647	2.3	2.0	4.8
2008 (01-02) ⁴⁾	5,225	4,612	613	.	.	.
2009 (01-02) ⁴⁾	5,224	4,599	625	0.0	-0.3	2.0



출처: 연방통계청 (광업 및 가공산업 월간보고서)

1)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동부 포함,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서부 포함; 종업원수 20명 이상 기업체

2)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종업원수 20명 이상 기업체

3)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포함,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종업원수 50명 이상 기업체

4) 2003년도 산업분류(WZ) 적용

3. 구동독지역과 베를린²⁾의 주택건설¹⁾ 관련 건설 인허가 및 완공 건수

	건설 인허가 건수 ³⁾	이 가운데 신축건물	완공 건수 ³⁾	이 가운데 신축건물
1991	5,484	5,144	16,670	16,430
1992	26,525	24,640	11,477	11,302
1993	82,529	77,138	23,598	21,879
1994	126,088	116,561	67,704	62,495
1995	180,011	164,010	104,214	95,872
1996	186,155	165,074	143,366	130,421
1997	155,368	133,606	177,829	160,783
1998	113,973	91,693	128,447	110,748
1999	91,874	73,267	102,865	82,963
2000	66,104	54,886	86,284	70,533
2001	50,036	42,719	58,254	48,558
2002	42,103	36,368	49,007	41,339
2003	44,568	39,434	41,836	36,222
2004	38,680	33,723	39,718	35,263
2005	33,025	29,383	35,544	31,170
2006	35,449	30,501	33,695	29,461
2007	27,549	22,343	26,931	23,258
2008*)	31,336	23,538		

1) 거주 및 비거주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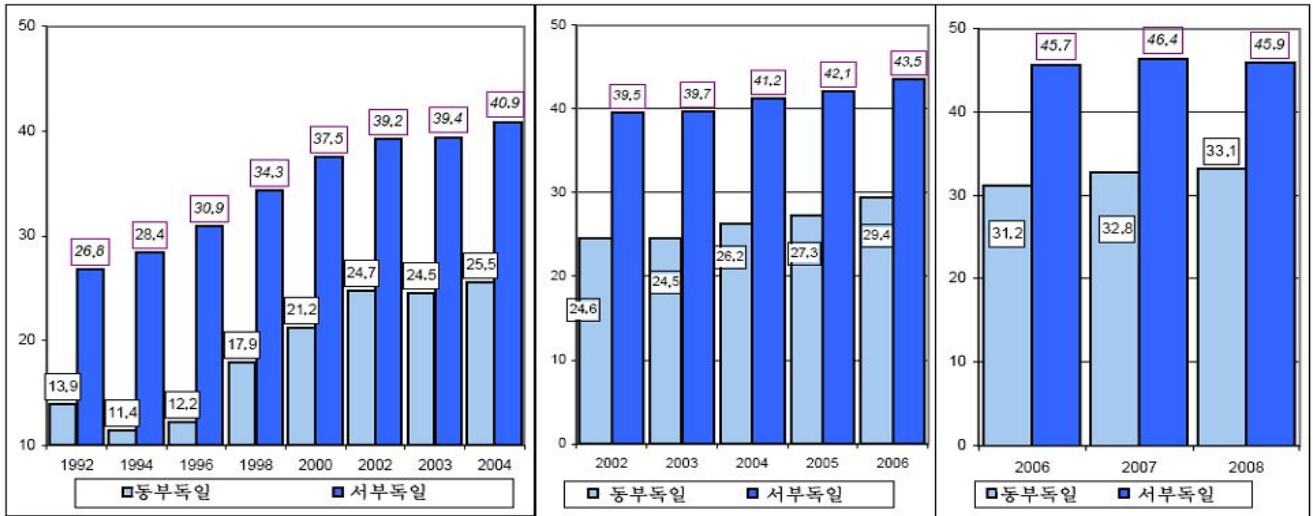
2) 보고연도 2004년까지: 구동독지역 및 베를린 동부

3) 기존 건물들에 대한 관련 건설대책

*)임시 통계

출처: 연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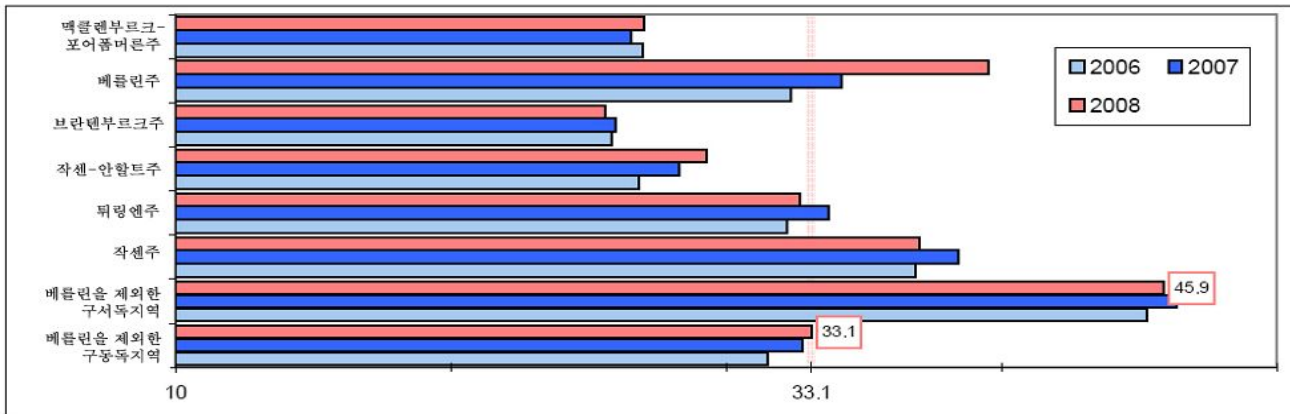
4. 광업 및 제조업의 수출비율¹⁾ (단위: %)



1) 종업원수 20명 이상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우측 그래프: 종업원수 50명 이상 기업체
좌측 그래프: 동부독일: 구동독지역과 베를린 동부; 서부독일: 구서독; 1995년 이전 수치와만 비교 가능

연방주별 수출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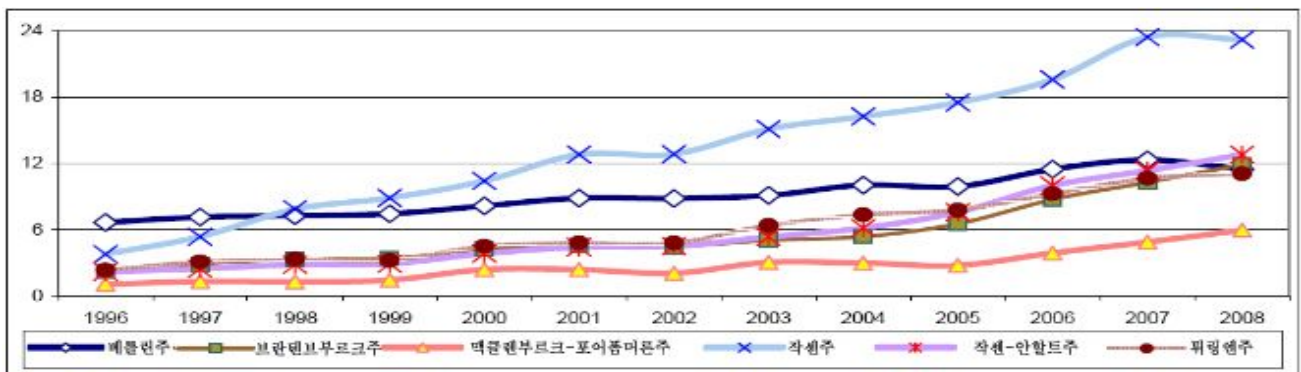
(단위: %)



1) 종업원수 50명 이상의 제조업체 대상

5. 연방주별 수출비중

(특수무역 - 단위: 10억 유로)



출처: 연방통계청

IV. 노동시장 자료

1. 구동독지역¹⁾의 노동시장 주요 수치 - 2009년 4월

조사대상군	2009년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전년도 실업률)			
	4월	3월	2월	1월	4월		3월	
					절대수치	단위: %	단위: %	단위: %
사회보험가입 정규노동자 - 현황(잠정수치)			5,133,000	5,151,000			-	0.5
실업자								
현황	1,185,247	1,206,893	1,203,971	1,182,337	-12,652	-1.1	-2.4	-5.2
이 가운데: 여성 44.8%	531,479	533,773	536,016	534,510	-43,410	-7.6	-8.7	-10.2
남성 55.2%	653,768	673,120	667,953	647,826	30,758	4.9	3.3	-0.8
15-25세 10.7%	126,938	132,271	130,113	123,328	1,721	1.4	-0.3	-4.3
(이 가운데 1.4%: 15-20세)	16,958	17,845	18,080	17,535	-1,608	-8.7	-10.6	-13.2
50세 이상 29.3%	347,070	350,769	348,934	343,598	8,080	2.4	1.6	-0.7
(15.6%는 55세 이상)	185,124	185,165	182,665	178,874	26,028	16.4	16.7	14.8
실업률								
- 민간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13.9	14.2	14.1	13.9	13.9	-	14.4	14.8
남성	14.6	15.0	14.9	14.5	13.8	-	14.4	14.9
여성	13.1	13.2	13.2	13.2	14.1	-	14.3	14.6
15-25세	13.0	13.6	13.3	12.6	12.4	-	13.2	13.5
15-20세	6.1	6.5	6.6	6.4	6.3	-	6.7	7.0
50-65세	15.4	15.5	15.4	15.2	15.3	-	15.6	15.9
55-65세	16.1	16.1	15.9	15.6	14.6	-	14.6	14.6
- 비정규직 민간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15.5	15.8	15.8	15.5	15.5	-	16.0	16.5
사회보험가입 수혜자²⁾								
실업수당	323,984	356,057	359,751	340,607	39,910	14.0	11.5	4.7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실업수당 II)	1,712,848	1,696,717	1,684,375	1,672,881	-110,677	-6.1	-7.3	-8.0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빈곤층(생활보조금)	520,529	517,913	516,106	515,751	-35,251	-6.3	-7.0	-7.2
신고된 일자리 수								
- 월초 수치	58,432	56,269	52,544	40,072	-4,726	-7.5	-19.1	-10.2
연초 이후 누적 수치	207,317	148,885	92,616	40,072	-24,866	-10.7	-11.9	-6.9
- 당월 ⁴⁾ 말 현황	117,487	116,285	111,842	103,015	-9,653	-7.6	-6.8	-0.2
이 가운데: 정부 비지원 일자리 ³⁾	52,852	53,433	50,755	45,715	-5,848	-10.0	-7.2	-6.2
즉시 취업가능 일자리	93,009	87,155	83,944	82,966	-5,596	-5.7	-1.5	4.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²⁾ 참여자								
- 전체 현황	513,187	521,132	525,185	528,802	-31,234	-5.7	-0.1	3.8
이 가운데: 자격증 취득	79,594	83,596	80,788	77,215	1,293	1.7	8.4	14.6
직업 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	88,790	90,062	92,552	96,750	-7,461	-7.8	-4.1	-0.8
직장생활 병행	120,937	122,190	124,160	126,176	-7,219	-5.6	-2.3	0.5
고용 창출 대책	149,536	148,331	152,165	158,357	-15,869	-9.6	-3.8	0.8
단기 근로자								
시즌 영향을 제외한 변화 추이	전년 동월 대비 변화							
	4월9일	3월9일	2월9일	1월9일	12월8일	11월8일	10월8일	9월8일
- 사회보험가입 정규노동자			-1,000	6,000	5,000	-4,000	2,000	4,000
- 실업자	6,000	12,000	9,000	15,000	5,000	-2,000	-4,000	-14,000
- 등록 일자리수 (정부지원 일자리 포함)	-1,000	-4,000	-2,000	1,000	3,000	1,000	0	2,000
- 비지원 일자리수 ³⁾	-1,000	-1,000	0	-2,000	0	-1,000	0	0
- 민간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	13.3	13.2	13.0	12.9	12.8	12.7	12.7	12.8

1) 베를린 주, 브란덴부르크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튀링엔 주

2) 최종 수치는 조금 더 지나야 확정됨. 현 수치들은 최대 추산치를 기록한 것임.

3) PSA(인력공급알선소), ABM(고용창출책), BSI(고용창출 인프라 정책) 및 고용기

4) 2008년 3분기 노동청 등록 일자리수.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업체가 제시한 전체 구인건수의 58%에 대해 구직신청이 들어옴.

출처: 연방노동청

2.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인가받은 지방 정책시행자 제외)¹⁾

- 연평균 수치 (단위: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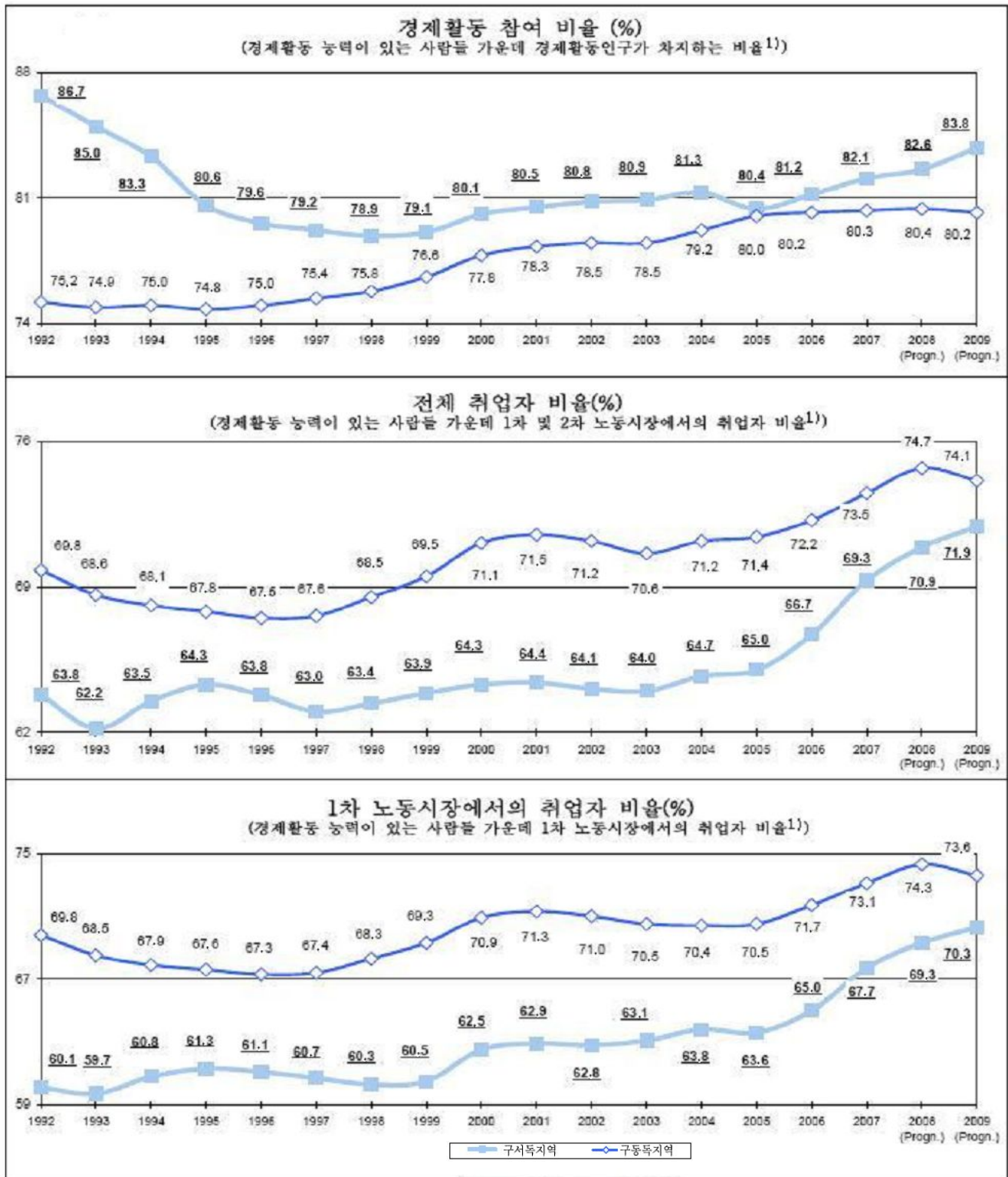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업자	1,375	1,344	1,359	1,374	1,411	1,624	1,599	1,614	1,480	1,291	1,123
정규 고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	158	185	120	108	112	140	149	146	146	135	116
노동비용 보조금	146	171	106	94	97	114	83	39	43	52	61
편입보조금 ²⁾	17	26	40	53	65	98	71	32	35	42	50
창업 시 조정 보조금	1	3	5	6	5	8	8	4	3	2	2
지부 설립 시 조정 보조금	-	-	-	-	0	0	1	0	0	0	0
SGB(사회법) III §421j에 따른 노령층을 위한 보상	-	-	-	-	-	1	2	1	1	3	4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노동보상 보조금	-	-	-	-	0	0	1	1	1	1	1
OfW 구조조정대책 ³⁾	115	131	51	23	13	3	-	-	-	-	-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지원금	13	11	10	12	14	4	-	-	-	-	-
취업수당 (고용)	-	-	-	-	-	-	-	1	3	4	4
창업 지원금	12	14	14	14	15	33	68	107	103	83	55
전업 수당	12	14	14	14	15	20	21	20	14	1	0
창업 보조금	-	-	-	-	-	13	47	85	80	51	17
자영업자 취업수당	-	-	-	-	-	-	-	2	7	9	7
설립 보조금	-	-	-	-	-	-	-	-	2	22	30
인력공급 알선소	-	-	-	-	-	4	9	6	2	1	1
교육 대책	261	263	252	253	256	240	196	139	128	124	124
직업적 재교육 ⁴⁾	151	143	140	136	129	99	63	38	37	39	63
장애인들의 직업적 편입 ⁴⁾⁵⁾	38	37	38	38	41	46	45	21	19	18	-
독일어 어학수업	6	6	6	5	5	5	4	1	-	-	-
빈곤층의 직업교육 ⁶⁾	20	21	24	26	29	33	26	23	20	19	16
사회적 약자들의 직업교육	46	56	44	48	52	57	58	56	52	48	45
고용 창출 대책	198	217	193	159	130	113	104	150	180	155	153
일자리 마련대책	151	168	146	116	86	73	65	36	34	30	31
전통적인 구조조정대책	47	49	47	43	44	39	28	12	6	2	1
고용창출 인트라 대책	-	-	-	-	0	1	2	1	1	0	-
고용기회 프로그램 (전체)	-	-	-	-	-	-	9	101	139	123	121
적성검사 및 훈련대책⁴⁾	14	16	19	21	22	31	31	21	20	19	19
자유지원제도	17	25	24	28	27	5	16	8	7	6	4
청소년 긴급 프로그램 ⁷⁾	-	34	35	45	46	46	36	2	-	-	-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	-	-	-	-	1	16	2	-	-	-
노년층 파트타임 취업지원 (연방노동청이 지원하는 경우만)	2	5	8	11	13	15	16	17	18	17	17
전체 참가자 수	650	745	651	625	606	595	573	491	501	457	434
참고:											
단기 근로자	34	27	24	27	41	35	29	25	13	16	21
SGB III §428에 따른 비실직 사회 보장보험 수혜자 ⁸⁾	96	94	88	94	111	136	131	72	80	65	36

노동청 IT 시스템에서 발췌한 노동시장정책 수단 자료, 인가받은 지방 정책시행자 자료는 제외

- 1) 2002년까지: 베를린(동부)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2003년부터: 베를린(전체)를 포함한 구동독지역
- 2) SGB(사회법) III §421p에 따른 청년들을 위한 EGZ(편입보조금) 관련, 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입 보조금은 제외
- 3) 동부 경제기업들을 위한 구조조정대책
- 4) 2008년도 재할 자료는 현재 확실한 분류가 불가능함
- 5) 2005년부터 달라진 대책 파악: 현 수치는 2004년까지의 수치와 완벽하게 비교 불가능
- 6) 2004년부터 자료 소급 감안
- 7) 2004년 Jump Plus를 포함
- 8) 2005년은 실업수당I 수혜자만 해당

출처: 연방노동청 통계자료

3.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의 경제활동 참여 수치 (국내 개념)



1) 15~64세 주민

구동독지역은 베를린 제외, 구서독지역은 베를린 포함

출처: 연방노동청, 연방통계청, “연방정부 및 주정부 취업자 산출” 조사분과; 할레 경제연구소의 산출 (산출 기준일: 2008년 12월)

V. 주요 지원수단

1. 구동독지역¹⁾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기준일: 2008년 12월

	누적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작시점[...]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건수	100만 유로
생계형 창업 및 투자를 위 한 ERP 대출 (EKH 포함)																					[1990.3]	
확약금	15,386	3,520	7,539	1,522	4,491	1,138	2,889	934	2,190	1,216	1,382	859	1,098	1,242	1,252	1,247	1,537	1,323	6,916	961	478,260	52,045
투자규모	-	8,700		4,179		2,858		2,606		2,900		1,200	-	2,400	-	2,200		2,323		1,687		122,778
주택 리모델링 프로그램																					[1990.10]	
확약 대출 (1차 및 2차)	53,900	4,880	8,643	1,299	4,833	750	5,028	1,079	6,792	486	5,476	561	2,890	310	7,014	620	5,706	579	12,280	626	763,215	45,738
지역적 지원 (지역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 (GRW) 및 EFRE) - 상업경제																					[1991.1]	
확약금	4,549	4,302	3,848	3,336	3,320	2,818	2,975	1,649	2,877	1,658	2,213	1,229	1,910	1,091	2,420	1,555	2,309	1,169	2,229	1,212	68,364	35,759
투자 규모	-	10,016		7,339		6,459		7,087		7,957		8,186	-	5,481	-	8,657		6,390		6,957	-	175,969
-경제 인프라																						
확약금	896	4,007	424	1,235	362	764	391	680	468	556	320	307	362	517	307	250	241	332	342	640	13,507	21,635
투자 규모	-	3,064		938		571		861		682		410	-	711	-	321		403		845	-	31,926

1) 재건신청의 보완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 예산으로 이자삭감혜택을 받음.

통계는 반올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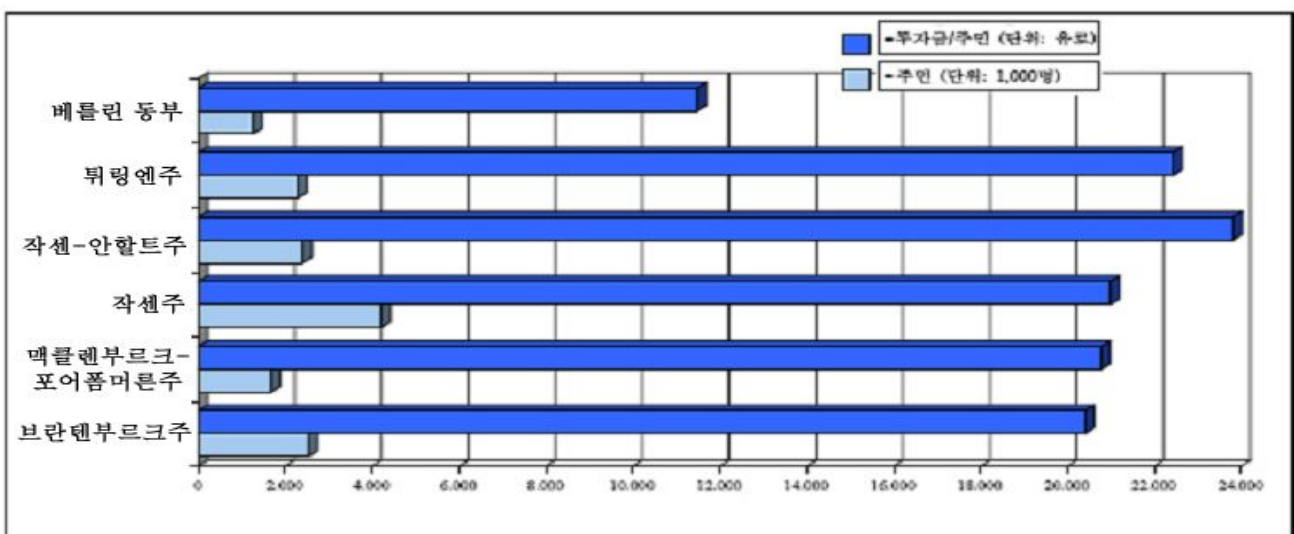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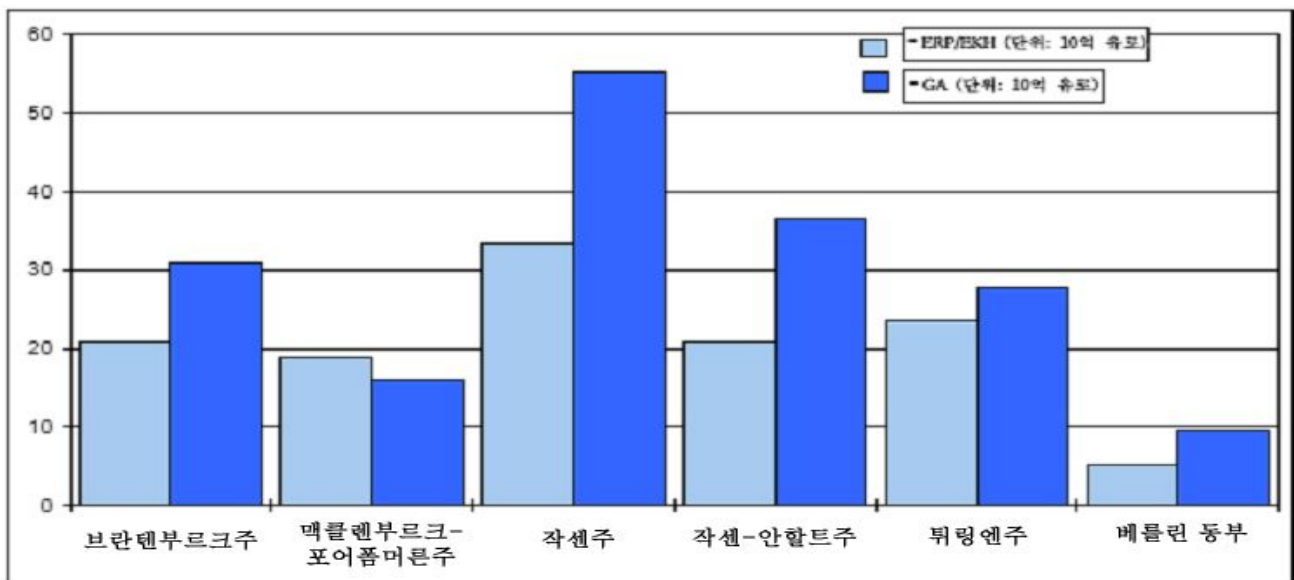
출처: 연방경제기술부, 연방경제수출통제청

2. GA(지역경제구조개선) 예산(상업경제) 및 ERP 예산(EKH 예산 포함)으로 지원되는 투자금의 구동독지역 지역별 분배(1990년~2008년 12월까지)

	ERP/EKH ¹⁾ (단위: 10억 유로)	GA ¹⁾ (단위: 10억 유로)	주민 ²⁾ (단위: 1,000명)	투자금/주민 (단위: 유로)
브란덴부르크주	20.8	30.9	2,536	20,40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19.0	15.9	1,680	20,800
작센주	33.4	55.2	4,220	21,000
작센-안할트주	20.9	36.5	2,412	23,800
튀링겐주	23.5	27.9	2,289	22,400
베를린 동부	5.1	9.5	1,271	11,500
합계	122.7	176.0		20,700

1) 모든 건수의 5%만이 ERP/EKH 예산과 GA 예산으로 지원됨

2) 2007.12.31 기준 (베를린 동부는 2001년 6월 30일 기준)



출처: 연방경제기술부, 연방경제수출통제청

VI. 1991년 이후 구동독지역의 기업설립 및 폐업현황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업 설립	140,000	96,000	79,000	74,000	76,000	86,000	108,500	110,400	104,200	95,500	90,400	87,300	110,700	132,500	106,700	98,300	76,000	70,700
기업 폐업	11,000	24,000	41,000	44,000	49,000	74,000	87,900	91,000	91,000	87,500	84,100	82,000	87,600	86,100	90,200	85,606	76,300	75,500
이 가운데: 부도기업	392	1,092	2,327	3,911	5,874	7,419	8,126	8,615	7,567	8,047	8,506	8,847	7,575	7,296	7,104	5,736	4,471	4,392
- 제조업	131	262	423	610	776	950	998	889	836	788	856	869	887	783	665	527	386	345
- 건설업	27	122	461	1,027	1,893	2,685	3,137	3,402	3,078	3,253	3,360	3,176	2,347	2,275	2,086	1,559	1,209	1,088
- 무역업	57	301	682	961	1,438	1,586	1,532	1,575	1,278	1,379	1,345	1,610	1,306	1,247	1,257	1,003	766	809
- 교통 및 뉴스전달 산업	13	74	188	368	414	411	363	322	260	367	410	411	430	310	395	301	217	
- 서비스업	53	227	484	828	1,224	1,624	1,914 ²⁾	2,193	1,904	2,067	2,340	2,589	2,411	2,492	2,545	2,211	1,797	
- 기타 경제분야	111	106	89	117	129	163	182 ²⁾	234	211	193	195	192	194	189	156	135	96	
기업 신규설립 총계	129,000	72,000	38,000	30,000	27,000	12,000	20,600	19,400	13,200	8,000	6,300	5,300	23,100	46,400	16,500	12,784	-300	-4,800

- 1) 부도: 1999년 이전은 베를린 동부를 포함한 구동독지역; 1999년 이후는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
설립, 폐업 및 총계 (자유직업은 제외;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IfM(중소기업연구소)의 산출
- 2) 산업분류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전년 대비 수치 변화는 제한적으로만 비교 가능

출처: 연방통계청(지급불능); 본(Bonn) 중소기업연구소 (기타 자료; 1990년 설립 단순정보 총계: 110,000)

VII. 경제분야의 R&D 인력

연도		R&D 인력				
		합계 ¹⁾	독일 전체에서 구동독지역의 비율 (단위: %)	주민 10,000명 당	취업자 10,000명 당	취업자를 고려한 구동독지역의 잠재적 R&D 부족분 (단위: %)
1995년	구서독지역	250,704		40	87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32,612	11.5	18	43	-51
1997년	구서독지역	250,545		39	87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35,725	12.5	20	47	-46
1999년	구서독지역	271,148		42	94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35,545	11.6	20	47	-50
2001년	구서독지역	270,354		42	92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36,903	12.0	21	50	-46
2003년	구서독지역	267,610		41	86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30,463	10.2	18	42	-49
2005년	구서독지역	274,978		42	87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29,525	9.7	18	41	-52
2006년	구서독지역	281,877		43	88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30,268	9.7	18	42	-53

1) 1년 내내 동일한 인적가치를 유지하는 R&D 인력

출처:

독일경제재단연맹 (수치 및 자료, 2008년 12월), 자체 산출

VIII. 투자활동

1. 구동독지역¹⁾의 설비투자 (각 물가에서)

(단위: 10억 유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설비투자	47.0	66.4	81.2	98.9	100.9	96.2	91.6	87.9	84.9	80.2	66.8	58.3	56.9	57.2	55.1	56.9
신규장비 및 기타설비	20.0	22.8	24.8	27.3	27.9	28.3	27.1	29.0	30.3	31.3	26.1	21.6	20.4	22.6	22.3	24.8
건물신축	27.0	43.6	56.4	71.6	72.9	67.9	64.5	58.9	54.7	48.9	40.7	36.7	36.5	34.6	32.8	32.1
전체 설비투자에서 건물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57.5	65.6	69.4	72.4	72.3	70.6	70.4	67.0	64.4	61.0	61.0	63.0	64.1	60.5	59.5	56.3

1)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 신규설비
반올림 또는 반내림으로 인한 오차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조사 기준일: 2008년 8월)

2. 구동독지역의²⁾ 주민 1인당 설비투자¹⁾와 자본량 및 자본집약도⁴⁾

(구서독지역=1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규장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투자 ¹⁾	57.5	68.8	89.5	102.3	105.2	103.9	94.1	92.2	89.8	84.9	71.1	62.9	61.4	67.0	63.6	65.7
건물 투자 ¹⁾	73.4	111.4	146.9	181.1	185.6	181.0	176.2	154.6	139.0	123.4	105.6	101.4	103.0	100.7	98.2	87.5
자본량 ³⁾	34.8	37.5	40.6	44.2	48.0	51.6	55.1	58.2	61.1	63.7	65.8	67.3	68.4	69.6	70.7	71.5
자본집약도 ⁴⁾	36.5	44.2	47.9	50.0	52.6	56.5	60.9	64.8	68.5	73.1	76.6	78.3	79.0	80.0	81.4	81.8

1) 1995년도 ESGV 기준; 국내 개념의 각 물가에서

2)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모두 베를린 제외 : 신규 설비

3) 모든 경제 분야, 2000년도 물가 기준

4) 취업자 1인당 자본량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조사 기준일: 2008년 8월)

3. 구동독지역¹⁾의 부문별 투자금 변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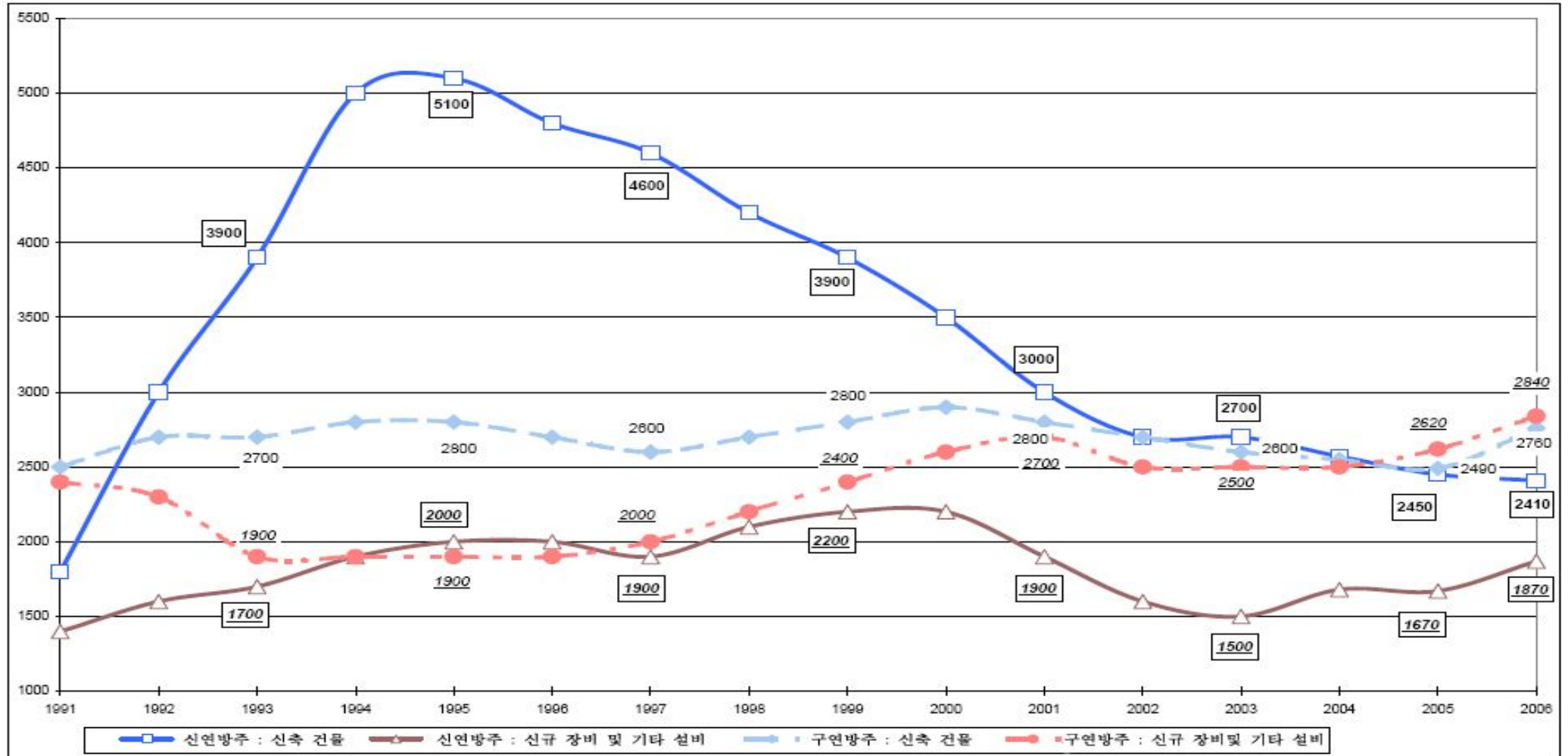
부문	신규설비 투자금 (단위: 10억 유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모든 경제 부문	47.0	66.4	81.2	98.9	100.9	96.2	91.6	87.9	84.9	80.2	66.8	58.3	56.9	57.2	55.1	56.9
농업, 임업, 어업	0.6	0.9	1.1	1.4	1.5	1.3	1.2	1.3	1.4	1.3	1.2	1.3	1.1	1.3	1.3	1.3
생산업	11.9	19.1	20.5	21.0	20.4	19.2	16.1	15.3	14.7	13.6	14.0	11.6	11.0	13.0	11.9	13.0
이 가운데: 제조업					10.1	9.7	8.9	8.6	8.5	8.7	10.1	7.8	7.5	9.5	8.4	9.4
건설업	2.3	3.0	3.2	3.3	2.3	2.1	1.7	1.5	1.5	1.3	1.0	0.8	0.8	0.8	0.7	0.7
서비스 분야	34.5	46.4	59.6	76.5	78.9	75.6	74.3	71.3	68.8	65.3	51.6	45.5	44.9	42.9	14.9	42.5
이 가운데: 무역업, 요식숙박업, 교통업	9.7	10.6	11.5	12.8	11.8	8.6	7.3	6.8	7.2	7.1	6.1	5.7	5.7	6.0	7.1	8.5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14.2	20.0	27.9	38.2	41.6	45.3	47.4	44.3	41.6	39.0	27.4	22.3	20.8	19.7	18.7	18.3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10.6	15.7	20.2	25.5	25.6	21.7	19.7	20.2	20.0	19.2	18.0	17.5	18.4	17.2	16.1	15.7

부문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모든 경제 부문	.	41.1	22.3	21.8	2.0	-4.6	-4.7	-4.1	-3.4	-5.6	-16.7	-12.7	-2.4	0.5	-3.7	3.3
농업, 임업, 어업	.	56.8	13.8	37.7	5.0	-14.6	-9.1	12.4	4.3	-6.1	-9.4	6.8	-16.6	21.5	9.6	9.6
생산업	.	60.5	7.5	2.2	-2.7	-5.7	-16.2	-5.2	-3.9	-7.2	2.8	-17.6	-5.2	18.7	-8.6	9.7
이 가운데: 제조업	.					-4.0	-8.2	-3.7	-0.7	2.3	15.3	-22.4	-4.0	26.9	-11.4	11.1
건설업	.	26.9	7.4	4.3	-29.7	-9.7	-21.4	-11.3	-0.3	-12.3	-25.8	-18.4	5.3	-0.8	-9.2	5.5
서비스업	.	34.2	28.6	28.2	3.2	-4.2	-1.7	-4.2	-3.4	-5.2	-21.0	-11.8	-1.2	-4.4	-2.4	1.5
이 가운데: 무역업, 요식숙박업, 교통업	.	9.3	8.6	10.7	-7.8	-26.8	-15.3	-6.7	6.2	-2.4	-13.0	-7.5	0.9	5.0	17.7	20.7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	40.9	39.1	37.0	8.8	8.9	4.6	-6.5	-6.0	-6.3	-29.6	-18.9	-6.5	-5.1	-5.2	-2.2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	47.9	28.8	26.1	0.4	-15.0	-9.4	2.4	-0.8	-4.0	-6.3	-2.6	4.8	-6.6	-6.2	-2.7

1) 95년도 ESGV 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
각 물가에서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조사 기준일: 2008년 8월)

4. 전경제분야에 대한 주민 1인당 투자액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모두 베를린 제외

투자금: 각 물가에서; 주민: 연평균

출처: “주(州) VGR(총국민경제 산출)” 조사분과 (조사 기준일: 2008년 8월), 자체 산출